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전문가토론회

북한연구 현황과 과제

일시

2019년 2월 12일(화)
14: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대
교수회의실(16동 31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차

일정표 5

| 기조발표 |

'변혁의 북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9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발표 |

정치 고유환 (동국대) 19
핵 김성철 (서울대) 29
경제 김석진 (통일연구원) 43

1 세션

| 토론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75
김병연 (서울대) 79
김흥규 (아주대) 81
이정철 (숭실대) 85

| 발표 |

사회 · 인권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91
문화 · 예술 권헌익 (서울대/케임브리지대) 111
과학 · 교육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9

2 세션

| 토론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135
박형동 (서울대) 139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141
이금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145

일정표

14:00-14:05 환영인사 : 임경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14:05-14:40 기조발제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북한연구의 현황과 과제"

14:40-16:10 **제1회의** 사회: 김영수(서강대)

정치 | 고유환 (동국대)
핵 | 김성철 (서울대)
경제 | 김석진 (통일연구원)

토론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김병연 (서울대)
김흥규 (아주대)
이정철 (숭실대)

16:10-16:30 휴식

16:30-18:00 **제2회의** 사회: 김성민(건국대)

사회 · 인권 |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문화 · 예술 | 권헌익 (케임브리지대)
과학 · 교육 |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토론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박형동 (서울대)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이금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조발제

‘변혁의 북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변혁의 북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1. 2018~2019년(김정은 시대) 북한= ‘변혁의 북한’

가. ‘변혁의 북한’

1) 오늘날 북한사회는 기존의 관성적 북한인식과 관점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변화하고 있음

가) 지속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1950년대 중반 사회주의적 개조 이래 60년만에 국가 · 사회 전반에서 가장 광범하게 구조적인 변화 진행 중

– 이 변화 통해 ‘개방형 사회주의국가’로 이행 중

나. 변혁의 지표들(indicators)

1) 국가전략 노선의 전환

가) 군사주의 → 경제주의(☞ 2-1))

– 핵 · 경제 병진노선 → 경제발전 총력집중 노선

나) 선군정치 → 당 우위 정치

– 병영국가(유격대국가) → 정상국가

– 국가운영의 제도화, 절차적 형식 중시

2) 경제정책의 전환

가) 폐쇄경제 → 경제개방 본격 추구

나) 집단주의 생산방식 → '개인이 생산 · 분배의 단위' 방식 병행(☞ 2-1))

다) 시장억제 → 시장의 보편화

라) 경제정책 기류 변화

– 주의주의(主意主義) → 합리주의(생산력 제일주의)

3) 외교안보 노선의 전환

가) 핵 개발,보유 선언 → 비핵화 협상

나) 반미주의 → 실용외교(대중동맹, 대미친선) 추구

다) 군사력에 기초한 안보 → 군사적 대결 해소 통한 안보환경 개선 추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4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택하였습니다. -- 그 실현을 위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리용호외무상 ARF 연설문(2018.8.4.)"

4) 통일담론의 변화

가) 통일국가 지향 → '사회주의 북한'의 길 강조

– 조선민족제일주의(우리민족제일주의) → 우리 국가제일주의

다. 북한의 (조건부) 비핵화 정책과 '변혁의 북한'

1) 변혁의 일환으로서 비핵화 선택

가) 북한의 (조건부) 비핵화 노선으로의 핵 정책 전환은 전체사회의 전략적 변화를 수반하며 이루어짐

– 이는 김정은의 비핵화 협상이 전술적인 기만을 넘어선 국가운명을 건 전략적 판단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2) 북한 핵 개발로 인해 발생한 북한 변혁의 모순

가) 과거 서방의 희망: 북한경제의 개방, 개혁

– 북한경제의 개방 개혁을 통한 체제전환 유도와 이를 통한 대남, 대미 적대성 해소

나) 그러나 현재의 대북제재는 개방개혁으로 나선 북한경제의 개방 욕구 차단

2. '변혁의 북한' 연구를 위한 분석: 기본에 충실하자!

가. 북한문헌(≪노동신문≫, ≪경제연구≫--) 심층 분석

1) 변혁의 시대에는 공식문헌 속에 답이 있다

가) 신문, 전문지의 정책전환에 따른 해설 기능 강화

나) 국가운영의 공개성, 투명성 증대로 인한 공개(공식)문헌의 국정운영 · 정책내용 · 사회 작동 묘사의 구체성 증대

2) 노동신문 읽기 사례

가)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 나타난 북한국가전략 노선의 변화

(군사우선 → 경제발전 총력 집중)

–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여러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2018년 평가) /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 선진국가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2019년 과제)

• 이는 기존의 "군대우선(先軍)의 국가" 모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

•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산업이 인민경제발전 전략에 종속

– 위 문장은 정상국가 확립과 경제발전 집중을 위한 김정은의 '군 위상 약화' 조치의 성공이라는 북한 내부 권력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

• 2016년 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를 계기로 인민군대의 노동당에 대한 절대 복종체계 구축

• 북한 권력 구조(노동당 정치국) 내 군의 위상 약화

▶ 수십 년 동안 전통으로 이어져온 북한군부 서열 1위(총정치국장)의 노동당 정치국 상임위원직 해제

▶ 현재 군 핵심 지휘부 3인(인민군총치국장 김수길, 인민군총참모장 리영길, 인민무력부장 노광철)은 정치국 후보위원

※ 참고로 2017년 10월에는 총정치국장(황병서)은 정치국 상무위원, 총참모장(리명수) 및 인민무력부장은 정치국 위원

– 비핵화 진전 시 궁극적으로 북한 군대의 위상과 역할이 중국인민해방군 수준으로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 높음

나)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 나타난 농업개혁

– "농업부문에서 알곡증산을 위하여--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었습니다"(2018년 평가)

• 농업생산의 기본단위로 개별 농민 최초 등장
• '개별농민이 생산과 분배의 기본단위가 되는 농업개혁' 공식화
• 식량증산 위한 포전담당책임제 도입

※ ≪노동신문≫에 나타난 포전담당책임제

: 농장원별로 책임지는 포전의 규모를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며, 그에 따른 분배에서 차등 강조. 특히 분배에서의 평균주의가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며, 이를 사회주의분배 원칙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경계

나. 시계열 분석(관찰)을 통한 내적 변화 추적

1) 시기별 텍스트 비교 분석
2) (누적적) 정기 국경답사

다. 비교분석

1) 정권이 변혁을 추구할 때는 벤치마킹 모델 존재

가) 비교분석의 중요성 증대

2) 북한의 발전 모델= 중국식 경제발전

가) 공산당주도, 경제개방, 시장경제 도입, 서방자본 유치, 경제발전 추구

나) 김정은 집권 말기인 2010년에 중국식 개혁개방 결정,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개방 가속

– 2010년 김정일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2회에 걸친 방중 정상회담을 갖고 나진-선봉지역과 황금평-위화도지역을 북-중 공동개발 공동관리하기로 합의
– 2011년 5월 김정일 사망 직전, 중국남부 개방도시 5000km 시찰
– 2013년 3월 김정은 개방정책 공식화. 이해 5월에 경제개발구법 제정
– 2018년 김정은, 중국에 경제시찰단 파견

3) 북한이 추구 경제발전 방식이 베트남식일 수 없는 이유

가) 북한의 현재 조건이 베트남 초기 개혁개방과 현저히 다르다

– 성장잠재력

• 수십만 명의 IT 인력
• 근접 需要處를 보유한 막대한 지하자원

– 지리적 우위 및 특수조건

• 북한과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열망 지닌 주변국(한,중) 존재
• 대일청구권 자금

▶ 국제금융 지원 비중 예상보다 작을 가능성

– 북한의 의지

• '단번도약' 열망(베트남식 완만 성장 불원)/ 중국 개혁개방 벤치마킹 천명, 실천

라. '변혁의 북한' 연구의 특별 관심 주제

1) 리더십 연구

가) 리더십연구의 중요성

– 북한 전략노선 전환의 결정적인 동인은 리더십

나) 북한 전략노선변화 동인

– 대내환경

• 자원제약 상황: 제재로 인해 경제발전 도모하기 위한 대외협력 차단

– 대외환경

• 시장경제로의 전일화: 경제발전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전환 불가피

※ 上記 두 요소는 김정일시대에도 존재

– 리더십 변화: 김정일 vs김정은

• 목표지향형

▶ 형식 배제, 실질 추구

• 현실주의

▶ 강성대국 → 강성국가

▶ 조선민족제일주의(우리민족제일주의) → 우리 국가제일주의

• 과제 점검형

• 실용주의

2) 북한을 둘러싼 경계에 대한 연구

가) 북한에게 존재하는 두 개의 경계(휴전선, 북중 · 북러 국경선)

나) 경계연구에 주목하는 이유?

– 경계의 이중적 의미(차단과 분쟁/협력과 번영의 가교)

• 핵개발과 북한 개방정책의 모순(경계의 긴장 유발과 개방정책 간의 모순)

• 비핵화와 개방정책의 동조성(同調性)

– 북한 개방시대 경계의 중요성 극대

3. 북한연구의 기본자세

1) 실사구시: 구체적인 실재 속에서 사물의 연관성과 합법칙성 탐구('있는 그대로의 북한' 탐색)

가) 탈북자의 증대는 북한붕괴 조짐이다?

2) 역지사지

가) 김정은의 비핵화 결심과 두려움

– 북한의 비핵화 결심은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생존방식인 군사주의 포기 의미

– 핵을 만든 명분이 된 '적대국 ' 으로부터 체제안전보장을 받고 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3) 성찰적 자세

가) 고정관념에 대한 끊임없는 自問 필요

–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1994년부터 계속된 북한 붕괴 전망

1
발표

정치

고유환 (동국대)

핵

김성철 (서울대)

경제

김석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 현황과 과제: 정치

고유환 (동국대)

1. 서론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연구는 양적 ·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주의권에서 흘러나온 북한관련 자료,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북한자료 개방, 북한이탈주민들의 대거 입국 등으로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 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에 설치된 북한학과에서 북한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연구자의 수가 늘어났고, 연구 분야도 정치, 통일, 외교 분야 위주에서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 등으로 확대됐다. 연구방법 면에서도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북한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북한학 이외의 개별학문 분야에서도 북한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제 북한연구가 북한학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금의 북한연구는 어떤 특정한 연구방법이나 흐름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다원화되었다. '제4세대'의 북한연구는 냉전시대 북한연구방법의 대세였던 전체주의 접근법과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바로알기운동 차원에서 도입된 내재적 접근을 넘어 다양한 인식론과 방법론, 분석기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연구는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확대됐다.

이 글에서는 북한연구의 흐름을 주요 세대별로 개관해 보고 주로 북한정치 분야 연

구동향과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2. 북한연구방법론의 변천과정

냉전시대 북한연구는 전체주의 접근법에 따라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 조선로동당, 헌법 등 정치사상, 지도자, 권력구조, 정치체제 등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이뤄지는 통치과정을 정태적(static)으로 분석했다. 냉전시대 북한연구는 방법론의 적용 없이 역사적으로 기술하거나 전체주의 접근법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데 치중했다. 체제경쟁이 치열했던 냉전시대, 김일성체제의 약점을 지적하는 전체주의 접근법이 북한 '유일체제'의 속성을 정태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엘리트 충원과정이나 이익집단의 갈등 등 정치과정의 동태성(dynamics)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전체주의 접근법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1970년대부터 비교정치 연구방법을 북한연구에 적용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일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미 · 중간 데탕트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는 비교정치학 이론을 사회주의 · 공산주의 연구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서구에서 비교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행태주의에 기초한 구조기능이론 등을 북한연구에 적용하여 정치과정의 동태적 측면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데올로기적 제약 없이 북한연구가 본격화한 시기는 1990년대 초부터일 것이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와의 체제대결은 끝났다', '역사는 끝났다'는 인식이 반영돼 북한연구도 이데올로기적 제약과 자료부족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소련붕괴 이후 개방된 북한관련 자료의 공개는 북한정권의 수립과 김일성 유일체제 형성과 관련한 연구를 촉진했다.[2)]

1) 이 글은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고유환, "북한연구에 있어 일상생활연구방법의 가능성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7권 제1호(동국대 북한학연구소, 2011), pp. 5-24; 고유환,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제24권 제1호(통일연구원, 2015), pp.29-54 등 필자의 기존 연구를 대폭 수정 ·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안드레인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현대사』(서울: 오름, 1995); 중앙일보,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서울: 중앙일보, 1992); 박길용 · 김국후, 『북한외교비사』(서울: 중앙일보, 1992) 등.

1990년대 초 본격화한 북한연구 제3세대[3)]의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은 방법론에 충실한 북한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4)]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개혁 · 개방을 본격화할 무렵인 1980년대 말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기존 연구와는 확연히 다른 인식론과 방법론이 북한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내재적 접근방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내적 작동논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비교 사회주의 방법론을 북한연구에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내재적 접근방법에 대한 '친북'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내재적 접근방법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내적 작동논리를 파악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내재적 접근의 정확한 의미와 방법론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치열하게 벌어졌던 방법론 논쟁[5)]은 결국 내재적 접근이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인식론에 가까운 연구 자세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싱겁게 끝났다.

최근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하여 북한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연구의 질적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다. 최근의 북한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는 일상생활연구방법[6)], 행위자-네트워크이론[7)], 문화인류학[8)] 등을 북한연구에 적용한 연구에

3) 북한연구의 세대분류는 주요 역사적 시기와 방법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다소 자의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국내 북한연구의 제1세대는 분단 이후 북에서 내려오거나 국내에서 북한 공산주의를 연구한 학자들로, 북한연구에 특별한 이론이나 방법론 도입 없이 북한 공산주의 운동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북한실상을 소개하거나 비판하는데 치중한 학자들이다. 제2세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주로 서구에서 국제정치학과 비교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과 국내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로서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방법론을 북한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학자들을 꼽을 수 있다. 제3세대 북한연구자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국내외에서 북한을 연구한 학자들로서 '북한바로알기운동'과 내재적 접근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북한연구를 시도했던 학자들이다. 북한연구의 제4세대는 1994년 국내에서 북한학과가 창설되는 등 '북한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북한학을 전공한 북한연구의 새로운 세대로 2000년대 이후 본격화한 일상생활연구방법, 도시사연구방법, 행위자-네트워크이론 등을 북한연구에 적용하면서 '밑으로부터의 북한역사', 미시사 등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속살을 파헤쳐 보려는 학자들을 꼽을 수 있다.

4) 내재적 접근법의 장점을 지적하는 한편 그 결함과 한계를 비판한 논문은 주로 강정인에 의해서 제기됐다.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1993); 강정인, "북한연구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제26집(1994년 가을호), pp.318-342;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재론," 『현대북한연구』, 창간호(1998), pp. 7-42. 내재적 접근에 관한 논쟁은 주로 송두율, 이종석, 김연철과 강정인 사이에 이뤄졌다.

5) 이국영, "독일 내재적 접근의 한국적 수용과 오해: 북한연구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0권 2호(2008 하반기)

6) 박순성 · 홍민 엮음,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홍민 · 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7)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관한 초보적 이해는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 홍성욱 엮음, 『인간 · 사물 · 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서울: 이음, 2010)를 참고 바람.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북한연구에서의 적용에 대해서는 홍민,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북한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2013), pp.106-170; 고유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2013), pp.57-85; 동국대 분단/탈분단연구센터,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등을 참고 바람.

8) 권헌익 ·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파주: 창비, 2013).

서 찾을 수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새롭게 부각한 북한연구방법 중에 주목할 방법론은 일상생활연구방법이다.[9]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에서의 일상생활연구는 1970년대 이전까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사회과학에 깊게 각인된 합리주의와 실증주의는 과학이란 엄밀성에 강하게 집착한 나머지, 인간 존재의 따뜻함과 분열, 감정적 복잡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해온 측면이 강했다.[10] 서구에서의 일상생활 · 일상사 · 미시사 연구는 주로 역사학과 사회학에서 문화연구[11]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에서는 주로 역사학[12]과 사회학[13]에서 일상사 · 일상생활연구를 수용하고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연구의 새로운 경향으로 등장한 일상사연구는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기존의 사회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관련이 깊다.[14]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진행된 사회주의권 붕괴를 계기로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에서 일상사연구가 본격화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사회과학자들과 역사가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어느 누구도 사회주의권 붕괴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는 광경을 지켜보던 역사가들이 정신을 차리고 확인한 것은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민중이라는 것이다. 이를 깨달은 역사가들은 기존의 사회과학 이론과 모델을 적용하는 대신 일상사적인 연구로 눈을 돌렸다. 김기봉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김수영의 〈풀〉에서 노래했듯, 바람보다 먼저 누웠던 풀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듯한 민중의 잠재 에너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일상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독재국가가 은폐한 현실 사회주의의 속살이 보이기 시작했다."[15]

제3세대까지의 북한연구가 주체사상, 당-국가체제, 유일체제의 형성과 후계구축 등 주로 상부구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주목했다면, 일상생활연구[16]는 주민의 일상을 통해서 북한 사회주의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북한연구가 사상, 제도, 지도자, 체제 등 공식사회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위로부터의 연구라는데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17] 2000년대 초부터 북한연구에 새롭게 도입된 연구방법이 일상사 또는 일상생활연구방법이다. 주로 역사학이나 사회학 연구에서 사용하던 일상사 · 일상생활 연구방법이 북한연구에 도입됨으로써 밑에서 이뤄지는 주민들의 일상이 상부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미시사적인 일상생활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극도로 폐쇄체제를 유지해 왔던 북한에 대한 일상생활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탈북자들 때문일 것이다.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조사가 가능해 짐으로써 북한의 일상생활연구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역사학과 사회학에서 사용하던 일상사 또는 일상생활연구방법이 북한 사회주의체제 연구의 한 방법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상부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전체주의 접근법과 구조기능이론 등이 사회주의권 체제전환 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일상생활연구는 미시세계와 거시구조, 과거와 현재를 '짜 집어(patchwork)' 북한사회의 속살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다.[18] 북한사회에 대한 일상사적 연구가 절실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일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집단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해 세뇌된 집단 무의식의 의식화가 선행되어야만 북한 주민의 사유 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19]

---

9) 박순성 · 홍민 엮음,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홍민 · 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10) Michel Maffesoli,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Epistemological Eliments,"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Current Sociology*, Vol.37, No.1(Spring, 1989), p.1.

11) 일상생활과 관련한 문화이론에 대해서는 Ben Highmore, *Everyday Life and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London: Routledge, 2002)을 참고 바람.

12) 역사학에서 일상사연구를 도입한 대표적인 연구는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서울: 한겨레신문사, 1998)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알프 뤼트케 외 지음, 나종석 외 옮김,『일상사란 무엇인가』(서울: 청년사, 2002); 곽차섭 엮음,『미시사란 무엇인가』(서울: 푸른역사, 2000) 등이 있다.

13) 사회학에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박재환 외,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가 있다.

14) 역사의 과학화를 표방했던 사회사는 구체적인 인물의 행위보다는 그들이 속해 있던 구조와 과정을 중시하는 연구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사는 역사의 통일적이고 단선적 과정을 상정하여 역사를 근대화 · 산업화 · 합리화 · 도시화 등의 '중심통합적' 시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일상사는 근대화 등의 현상을 일면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개개인들의 저항의 모습, 또는 그러한 현상에 대한 암묵적 수용 등의 다양한 삶의 층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일상사는 '구조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로 방향 전환을 강조한다. 박원용, "스탈린 체제 일상사연구의 현황과 쟁점, " 박순성 · 홍민 엮음, 앞의 책, pp.16-17;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안병직 외, 앞의 책, pp.30-41.

15) 김기봉, "북한에 대한 일상사연구의 가능성과 의미," 박순성 · 홍민, 앞의 책, pp.119-120.

16)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등으로 대표되는 일상생활연구자들은 "일상의 현대성을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의 짜깁기(패치워크) 같은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Ben Highmore, *Everyday Life and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London: Routledge, 2002), pp. 174-175.

17) 2000년대 이전의 북한연구경향에 대해서는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를 참고 바람.

18) 고유환, "북한연구에 있어 일상생활연구방법의 가능성과 과제,"『북한학연구』 제7권 제1호(2011).

19) 김기봉, "북한에 대한 일상사연구의 가능성과 의미," 박순성 · 홍민, 앞의 책, p.116. 김기봉 교수는 "주체사상에 세뇌된 인민들은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했다"고 보고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이라는 생체권력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남북통일이란 불가능하며, 만약 돌발사태가 일어나 통일이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해도 그 결과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연구에서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연구동향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ANT)[20]의 적용이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은 1980년대 초반에 과학기술학을 연구하던 프랑스의 브루노 라투르, 미셸 칼롱, 그리고 영국의 존 로 등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은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네트워크에 주목한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은 기계 같은 비인간(사물)들이 인간처럼 행위능력(agency)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인간과 비인간을 동등하게, 대칭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단체제를 둘러싼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구조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비인간(사물),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자-네트워크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정세를 지배하는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는 '의무통과지점'이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 각각의 국내 정치와 분단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지역 관련 국가들의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연구에서도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사물) 행위자-네트워크를 분석해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변화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정치연구의 동향과 쟁점

북한정치연구 동향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냉전시대 북한연구는 당규약과 헌법에 나타난 당-국가체제의 권력구조 파악, 지도사상과 지도자 연구, 북한국가(체제) 성격연구가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 면에서도 법적 · 제도적 접근, 구조기능이론의 적용, 역사적 접근, 문헌중심적 서술이 주류였다. 인식론이 방법론을 결정한다고 할 때 냉전시대 북한을 적대시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객관적인 북한연구가 어려웠다. 이데올로기 비판차원에서 이뤄진 상당수의 북한연구는 북한체제와 지도자의 약점을 드러내고 비판하는데 치중했다.

몇 차례 반복해서 나타났던 '북한붕괴론'에서 확인했듯이 북한연구에서의 '희망적 사고'의 반영은 과학적 북한연구를 저해하는 요소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본격화한 '북한붕괴론' 논쟁은 이후에서도 몇 차례 반복됐다.[21] 1990년대 중반의 북한붕괴론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북한의 붕괴도 멀지 않았다는 가설에 따른 것이다. 1994년 7월 8일 절대적 카리스마를 가졌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비교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유학파 제2세대 북한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북한붕괴론이 급속히 부각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북한붕괴론이 득세하면서 각 부처별 급변사태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에서도 북한의 분야별 위기지수를 계량화하면서 단기적으로 정권유지, 중장기적으로 정권교체 및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예측한 바 있다. 당시 필자는 식량난 등 경제위기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적이 존재하고 지도부가 운명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아 '근근이 버텨낼 것(muddling through)'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2]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을 계기로 급변사태론과 북한붕괴론이 다시 부각한 바 있다. 북한붕괴론이 나왔던 두 사례 모두 북한 지도자 변수가 다른 변수를 압도하면서 지도자의 유고를 정권과 체제 붕괴로 연결지우는 '희망적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붕괴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한연구에서 가끔 목격할 수 있는 문제점은 '과학적' 분석과 '규범적' 주장이 혼재돼 나타난다는 것이다.[23] 북한정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북한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제재와 압력에 주력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북한이 붕괴되면 핵문제를 비롯해서 산적한 북한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북한붕괴론에서 보듯이 북한연구에서 경계해야할 연구자의 자세는 '희망적 사고'를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예측한대로 북한이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김일성 주석 사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고난의 행군시대'를 거치면서 수십만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발생하고 이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옴으로써 북한연구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탈북자들의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사회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보여주는 공식사회와는 다른 '또 하나의 북한 사회(제2사회)'[24]가 있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북한사회가 지탱해온 동력이 '시장화' 등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

20) 홍민,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북한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2013), pp. 106-170.

21) 이헌경, "북한연구 현황과 접근방향," 『평화학연구』, 제11권 제4호(2010), pp. 88-91.

22) 고유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김정일정권의 진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2호(1996년 여름), pp. 225-245.

23) 이상근, "북한붕괴론의 어제와 오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붕괴론에 대한 평가,"『통일연구』, 제12집2호(2008), p. 112.

24)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서울: 나남출판, 1995)

북한국가 또는 체제성격 규정과 관련해서는 논쟁이 일지 알았다. 논자들이 규정했던 유일체제(이종석), 수령제(스즈키 마사유키), 유격대국가와 정규군국가(와다 하루키), 극장국가(권헌익, 정병호), 조합주의국가(브루스 커밍스), 신정체제(이상우), 술탄체제(류길재) 등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국가성격의 여러 측면과 특정시기의 특징을 개념화한 것으로 일정한 적실성을 가지고 있기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 국가성격 규정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3대 세습의 권력승계와 체제유지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체제변화의 동인을 찾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북한연구의 주류가 '위로부터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치중했다면 앞으로의 북한연구는 주민의 일상을 비롯해서 인간과 사물행위자의 다양한 행위자-연결망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북한사회의 변화와 '혼종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북한연구 과제

남북분단에 따른 '시대의 아들'로 태어난 북한학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존재구속성을 벗어나 객관적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 북한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북한학과가 대학에 설치돼 있고, 북한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개설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있어 북한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북한자료의 개방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북한연구에서의 다양한 방법론의 도입 등은 북한연구를 질적 · 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토양을 만들어 주었다. 연구대상인 북한에 대한 현장접근은 아직도 어렵지만 북한의 공식 매체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북한관련 자료의 수집이 용이해짐으로써 북한연구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

북한학이 객관적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첫째,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희망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두 차례 반복한 '북한붕괴론'과 관련한 논쟁, 남북화해가 진전되던 2000년대의 '북한변화론'과 관련한 논쟁에서 확인한 것처럼 북한의 실상을 우리식 인식과 잣대로 바라볼 경우 객관적 분석과 예측이 어렵다. 서동만이 1990년대 북한연구를 평가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남한의 북한연구는 남한의 북한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북한의 자기인식을 시야에 넣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남한의 북한연구는 북한이란 현실에 의해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25] 북한연구에서 중시돼야 할 자세는 이념적 관점과 인식론에 따라 선험적 가치판단을 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방법론에 충실한 북한연구에 천착해야 한다. 냉전시대 대부분의 북한연구가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거나 비판하는 서술과 해석 위주였다. 그리고 정세분석과 홍보차원의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지금도 상당부분의 북한연구는 정세분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벌린 여러 사건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시사해설 수준의 서술로는 북한학을 객관화 · 과학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학문에서 사용하는 방법론과 이론을 도입하여 북한학의 객관화 · 과학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기초연구와 역사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연구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긴 호흡으로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제간 또는 다학문적 접근(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approaches)을 적극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북한연구의 영역이 정치학 위주에서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속성과 체제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학제간 연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5) 서동만,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북조선 연구 서동만 저작집』(파주: 창비, 2010), p. 121.

북핵과 사회과학

김성철 (서울대)

1. 서론

북한의 핵무장과 이에 따른 안보 위협(본 논문에서는 “북핵”으로 총칭)이 고조되면서 학계 및 전문가 집단에 의해 다양한 분석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 분석들은 북한의 핵무장 동기, 미국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화, 한국의 대북정책, 비핵화협상과 남북한 관계, 북한과 타 핵무장 국가와의 비교, 비핵화 관련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이 글은 기존의 분석이 북핵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사회과학 지식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핵연구 전반과 괴리되어 진행되어왔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핵연구에 관한 이해와 문제의식 없이는 북핵에 대한 분석과 종합적 대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략적 접근을 취하는데도 한계를 낳을 것이다.

북한이 2017년 말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이래 우리 사회에서는 “비핵화”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안보 및 남북한 관계에서 북핵은 최대 현안으로서 “비핵화”가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또는 병행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김정은의 비핵화 공언으로 비핵화=북핵 철폐 등식이 당연시되거나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가 커진 만큼 실패 또는 지연에 대한 절망감도 클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북핵의 초기 대응과정에서 정착한 “비핵화”란 용어는 문제의 핵심이 변화되었는데도 그래도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비핵화는 사실을 적시하는 정제된 정책 용어라기보다는 의도된 모호성, 편의성을 지닌 측면도 있다. 이 글은 비핵화란 용어(또는 터미널

로지)를 포함하여 북핵의 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사회과학의 도움 특히 선행 핵연구의 시사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북핵에 대한 안목을 확장하여 핵연구 전반에 제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북핵이라는 난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글은 특히 "비핵화"가 핵비확산, 핵통제(또는 핵군축), 핵억제의 삼각구도 안에 있음을 밝힌다. 이 글은 비핵화란 용어의 외피를 벗겨 이와 얽혀져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밝힘으로써 과학–정책의 연계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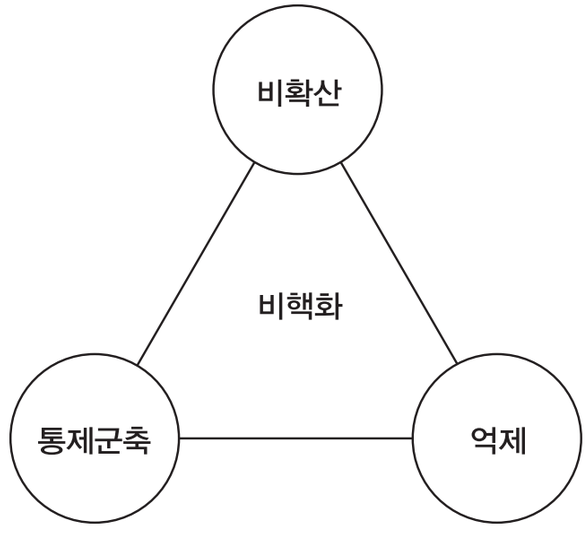
2. 북핵 연구의 삼각구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핵 문제는 핵연구의 세 가지 영역 모두에 걸쳐져 있으며, 따라서 정책적으로도 상호 연관되면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각 영역을 살펴보자면,

1. 비핵화란 용어는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남북이 비핵화란 용어를 최초로 공식 사용한 선언으로, 한국은 기존의 북한의 핵개발 노력을 되돌리기 위해 농축 및 재처리 등 핵자주권을 포기하였다. 이후 비핵화란 용어는 북한의 핵능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1994년 제네바합의는 공동선언을 인용하였으며, 2005년 6자회담에서 비핵화의 정의는 1991년 공동선언에 기초하였다. 오늘날 북한의 핵무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도 비핵화란 용어는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 오늘의 북핵은 핵확산의 논리에 입각해 분석되어야 한다.

2. 2018년 이래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핵통제, 핵군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 합의, 그 이행과정은 한, 미, 북, 국제기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사자인 중국과 이외 유엔안보리 당사국, 식민지 지배국 일본까지 관여하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다.

3. 북핵은 북한의 핵억제력 확보를 둘러싸고 발생한 것으로, 북핵의 종결, 또는 비핵화는 그 핵억제력의 소멸을 의미하는바 북한의 2013년 핵보유국법에 대한 대체법의 채택일 것이다–– 즉 핵무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으며 향후 이를 자신의 안보 수단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확약이다.



3. 핵비확산으로서의 비핵화

북핵은 오랜 시간을 거쳐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냉전 후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중요한 문서로 꼽히는 것이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다. 이 공동선언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리사이클 권리––"핵자주권"으로 간주되는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려는 reverse 한국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선언은 한반도를 일종의 "비핵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 설정하는 것과 같은 의도를 지녔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의 핵확산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최대의 안보현안이 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이기도 했다. 당시의 비핵화는 확산과정의 북핵을 되돌려 놓으려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오늘날 북핵 상황은 비핵화란 그 같은 최초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주목할 것은 북한의 핵확산에 연관된 또는 연루된 제반 요소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설명하는데서 북한의 핵무장 동기는 무엇이며 이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한 원천은 무엇인가가 동시에 답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핵은 두

부류의 핵확산 연구로부터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두 부류는 수요측면의 연구와 공급측면의 연구이다.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에서 유추한 말이다.

수요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누적된 이후에 공급측면에 대한 분석이 소홀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공급측면의 연구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되었다.

수요측면의 연구는 — 당시는 이런 표현이 없었지만 — 한 국가가 왜 핵무장을 추구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것으로, 주로 국가의 동기를 다루었다. 예를 들어, Joseph Cirincione는 크게 안보, 국위prestige, 국내정치, 기술 등을 지적하였는바, 주권을 보호하고, 강대국 이미지를 내세우며, 핵무장을 주장하는 특정세력의 이익이 있으며, 그럴만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핵무장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한다.[1] Jacques E. C. Hymans는 외부적 요소보다는 정치지도자들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개념, 특히 민족주의를 핵무장의 주요 변수로 설명한다.

동기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우, 이상의 이유들이 함께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안보적 이유이다. 북한은 냉전 종식과 함께 한소, 한중 수교를 목격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경험하였고 극심한 식량난으로 체제가 이완되었다. 이런 가운데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의 급변은 북한에게 치명적이었다. 미국은 반테러 전쟁과 동시에 이란, 이라크, 북한, 쿠바, 시리아 등 불량국가들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대통령의 발언 또는 정부 문서를 통해 공공연하게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를 비판하면서 민감하게 대응하였는바, 실제로 미국의 선제타격론은 북한에게 안보 위기의식 및 위협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돌이켜보면 6자회담 기간 중에 발생한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은 이미 북한으로서는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한 사건이었고, 6자회담이 북한의 핵신고에 대한 불신으로 붕괴되자 2009년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핵무장의 길로 들어섰음을 재확인하는 사건이었다. 둘째는 북한체제의 특성 특히 수령의 "존엄성"으로 인한 체제 안보와 국가 안보의 동일성이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비핵화가 김일성 유훈이라고 말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보이기도 했지만, 핵무기를 "보검"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김정일의 위업을 전략국가 구축이라고 선전 한 것으로 보아 체제의 정체성 및 정당성과 그것의 안보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는 핵무장을 지속하려는 국내 세력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당, 연구소, 전략군 등 핵프로그램의 운용, 핵무기 개발, 핵무기 저장소, 전략적운용 부대 등은 특수이익집단으로서 이들의 저항은 핵무장을 존속하게 하는 용인으로 작용할 것이다.(Etel Solingen 참조) 이 세력의 존재는 핵 매몰비용을 올려놓는다. 넷째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재처리 및 우라늄농축 등 두 가지 기술을 냉전 종식 후 20년 동안에 마스터하였으며, 2017년 수소폭탄 실험과 ICBM의 개발 및 실험은 공공연한 핵무장 국가로서의 기술적 수준을 보여준 것이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개발은 단순히 생존안보 극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내외적 다양한 동기에 의해 추동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의한 톱다운식 결단이 북핵 해결에 어느 정도까지 유효할지 의문이다.

북핵의 분석은 공급측면의 핵확산 연구로부터도 시사점을 받을 수 있다. 공급측면의 연구의 출발점은, 아무리 핵무장을 추구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외부로부터의 민감 핵기술sensitive nuclear technology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인다. 북한의 재처리 기술은 영변의 흑연감속로의 폐연료봉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처리하면서 자체 획득한 것으로 보이나, 우라늄농축 기술은 파키스탄의 칸박사 A.Q.Khan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칸박사의 암시장 네트워크는 이미 1980년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시 불법 기술 수입원으로 작동하였으며 파키스탄의 핵개발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Albright 2018). 그 후 칸 네트워크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에 우라늄농축 기술과 핵융합 기술 제공원이 되었다. 두 가지 점에 유의할 만하다. 하나는 파키스탄이 국가적 차원에서 칸의 타 국가에 대한 민감기술의 수입 및 제공을 한 허용(지원 및 묵인)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미감기술의 지원 판매가 양자적이지 않고 다자적 네트워크 속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실제 북한의 경우에도 시리아의 핵시설 건설 지원(또는 의혹)은 북한-시리아 양자적이지 않고 북한-이란-시리아 삼각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은 새로운 핵시설, 즉 우라늄농축 시설의 건설과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이란과 시리아 등에서 획득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필요한 재원과 재료를 자체의 암시장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Justin Hastings)

공급측면의 핵확산 연구가 민감기술의 암시장 네트워크를 밝히는 것만이 아니다. 핵무기가 재래식 무기와 다른 특수한 효용성을 지닌바, 민감기술 보유국이 이를 아무에게나 제공하지 않으며, 특히 주목할 것은 동맹국이라고 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1) Joseph Cirincione, *Bomb Scare: The History & Future of Nuclear Weap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2) Gordon Corera, *Shopping for Bombs: Nuclear Proliferation, Global Insecurity, and the Rise and Fall of A. Q. Khan Net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2009).

다. 파워 프로젝션power projection 이론은 이같은 패러독스를 잘 보여주고 있다.[3] 강대국이 자신의 동맹국에 대해 기술을 제공하여 핵무장하게 되면 자신이 강대국으로서 누려온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즉 핵무장한 동맹국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반면 민감기술 제공국이 수혜국에 기술을 제공해도 영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민감기술 제공은 제공국의 적의 적enemy of enemy인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예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기술제공이 아니라 프랑스의 지원에 힘입어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왜 파키스탄의 칸 박사는 북한에 농축우라늄 기술을 제공했을까? 단순한 금전적 차원이 아니다. 파워 프로젝션 이론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감기술의 전수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파키스탄-중국 삼각관계에 주목하는 동시에 이 삼각관계를 움직이는 중국-미국간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즉 "미국의 중국 견제, 중국의 파-북 민감기술 이전에의 암묵적 지지"란 도식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여 민감기술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다른 클라이언트인 파키스탄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묵인했을 수 있다. 물론 이 점에 대해 향후 아카이브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안문사건 이후 인권관련 미국 주도의 대중 제재로 인해 1990년대의 미중관계는 냉전시대의 황금기와는 전혀 달랐다는 점이다. 중국은 비서방 기존 우호국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게 되었으며, 한소, 한중수교 등으로 고립의 충격에 빠진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했다. 중국은 줄곧 북한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왔으며,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식량난을 겪자 식량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1998년 4자회담이 개최되자 이에 참여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직접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미국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칸박사 네트워크의 우라늄농축 기술의 북한에의 이전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4]

과거 수요측면에서만 분석하던 경향에서 공급측면에 대한 분석 틀이 더해지면서 핵확산 연구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개념인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 theory과 동맹내 정치intra-alliance politics와 밀접히 연관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핵 문제도 안보 및 대내 요인뿐만 아니라 미중간 균형 및 북중간 관계의 미묘성 또는 이중성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민감기술 이전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기술이전 이후의 신흥 핵무장국가와 주변국 간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세력균형이나 동맹내 정치가 역전되는 것이 아닌 상황 — 정확히 말해 미중 경쟁, 중-팍 우호관계, 중국의 대미견제에서 북한 유용성으로 밸런싱이 강화되는 상황 — 에서는 과거 대북한 민감기술 이전의 협력 관계가 북한의 핵무장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4. 핵통제/핵군축으로서의 비핵화

오늘날 상황은 비핵화=북핵 철폐 등식으로만 인식되어 북미회담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실패에 대한 절망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핵통제/핵군축으로서의 비핵화는 두 가지 성질을 지니고 있는바, 하나는 합의와 그 이행 측면에서 핵통제/군축협상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 검증은 필수이며, 다른 하나는 보상면에서 — 과거 미소간 상호감축과는 달리 — 내용이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첫째, 지금 미국은 CVID 또는 FFVD[5]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검증verification이다.(이수혁)[6] 검증이 없는 핵통제/핵군축은 의미도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리스트 신고를 압박하고 있으며, 신고가 이루어지면 신고대상에 대한 전반적 검증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신고가 곧 미국에게 타격대상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신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이 신고를 하게 되든 "또는" 일부의 핵심 핵프로그램, 시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동결, 폐기키로 합의하든 어떤 경우라도 검증은 필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핵 프로그램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비핵화를 추진하면 여기서 검증이 핵심으로서 검증 방식과 보상이 협상의 주요 쟁점(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New START 2010 사례—양을 규정하고, 계산방식이 있으며, 검증을 위한 사찰 방식에 구체적 합의가 있다. (탄두수, 트라이어드 각각의 탄두수, 사찰 회수 및 방식)

3) Matthew Kroenig, *Exporting the Bomb: Technology Transfer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

4) 이와 관련, 중국의 대미 견제라는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분석한 Fei-Ling Wang (2018)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미국은 2018년 7월부터 CVID FFV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유아시아 방송, "새로 등장한 북 비핵화 용어 'FFVD'," 2018.7.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spotlightnews/newsfocus-07052018152131.html

6) https://news.joins.com/article/23052524

둘째, 북한의 핵프로그램, 시설의 동결, 폐기에 대한 보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인데, 구체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안보를 보장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이 필수적이며 한반도비핵지대화(또는 이보다 광의의 동북아비핵지대화)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리스트 신고가 가능할까? 만일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이 존재하는가? 북한은 자신의 핵에 대해서는 일방주의적 비핵화 unilateral denuclearization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도 검증도 없는 북한의 방식에 의한 비핵화인 것이다. 설사 북한이 핵신고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고 리스트를 제출할지는 미지수이다. 1993년 북한의 NPT탈퇴 및 첫 북핵 위기는 IAEA에의 신고와 사찰 사이의 불일치가 발견되어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발생하였으며, 2002년의 두 번째 북핵 위기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둘러싼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발생하였고, 2008년 6자회담의 중단도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신뢰성(미국 정부의 시리아 핵시설의 북한 지원 주장)을 둘러싸고 발생하였다. 모두 신고를 둘러싸고 발생하거나 검증 요구에 반발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완벽한 신고 및 이에 따른 전면적 검증이 불가능해 보인다. 남아공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신고 리스트 제출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남아공은 1990년부터 1991년 사이 기밀리에 핵무기를 폐기하고 농축 우라늄을 이전한 후 비핵국가의 자격으로 1991년 7월 NPT에 가입하고 9월 IAEA안전조치 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IAEA는 남아공이 제출한 신고기록에 따라 사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과거 핵무기보유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1993년 3월 드 클레르 대통령은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큰 파문을 던졌다. 이후 IAEA 사찰은 핵무기를 포함하여 과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로 이행하였다.(Albright 2018)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남아공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무기 생산시설의 누락, 은폐, 기만을 행했다는 점이다. 당시 남아공의 드 클레르 대통령으로서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도적 은폐로 노하우를그대로 보유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며, 여기에다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를 가지거나 가졌다는 사실이 NPT 가입에의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초기 일방적 핵폐기를 추진하고 신고함으로써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당시 IAEA 사찰팀은 고농축 우라늄이 metal ingots형태로 남아 있어 핵무기에서 축출한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이는 1993년 이후의 사찰과정에서 규명되기에 이르렀다.

남아공의 사례는 북핵 해결과 관련하여 결코 장밋빛 시나리오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핵무장 국가의 자진 신고와 검증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는지는 매우 난해한 문제이며, 북한의 경우 체제의 성격으로 보아도 그 한계가 있어 보인다. 미국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북한에 대해 완전한 신고를 선행요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완전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선택적, 자발적, 일방적 비핵화”를 진행하는 경우, 핵심 핵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검증은 오랜 기간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핵화의 정도, 성공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미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는 상황의 타개와 완전한 사전신고라는 이상적 요구 사이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합의 사항에 대한 은폐, 기만이 아니더라도 해석차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하여 한국, 미국은 1991년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의거 북한의 핵폐기의 실현으로 이해한다. 반면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거를 의미한다. 이는 중요한 해석차이다.

보다 포괄적 질문으로서 어떤 경우 합의에 이르는가 그리고 합의를 이행하는가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고르바쵸프와의 회담에서 “믿지만 검증한다”trust but verify라는 말을 통해 검증을 통해서야 신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냉전기 미소 핵협상 역사를 분석한 레보빅(James H. Lebovic 201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양측이 어떤 합의가 상호이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면 가능할 수 있으며 또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레보빅에 의하면, 당시 미국의 대부분 협상 관여자들은 소련을 신뢰하지 않았고 특히 강경론자들은 소련측이 합의를 벗어나 기만행위를 할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협상에 나선 이상 소련이 합의를 진정한 이익으로 판단하면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북간의 합의와 이행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의 범위 안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최종의 핵폐기까지 북한이 만족할 이익의 보상이 주어질지 그리고 그 이익이 무엇인지일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 동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문제이다. 북한은 때로는 안전보장과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핵무장을 선대위업으로 여기며 핵무기로 인해 전략국가를 이루었다고 선전하는 점에서 외부적 안보와 내부적 안보가 서로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정 수준의 제재해제, 그리고 핵능력의 보존이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최대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비핵화에 대한 보상 또는 북한이 추구하는 최대 이익이 평화체제의 구축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 2018.9.19. 평양선언에서의 군사부문 합의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바, 첫 번째는 리스크 상승을 회피할 기제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하게 두 번째는 다음 절에서 논할 부전의 "의지", 즉 무력충돌 회피 의지를 공유, 확약하는 것이 한국 측의 항공정보 획득 능력을 포기하는 경계선 설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 군사부문 합의는 북한이 핵강제위협을 행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5. 핵억제의 종결로서의 비핵화

비핵화 관련, 거의 연관 없어 보였던 부분이 핵억제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핵억제에 관한 논의는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KAMD, 킬체인 등의 군사적 수단만을 언급하는 경향이었으며, 핵억제가 수반하는 비군사적 측면의 행태 특히 강제coercion의 유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된바 없다. 핵억제력을 보유한 북한이 북미 협상의 실패 또는 지연의 경우 강제의 하나로 벼랑끝 전술을 택할 가능성 및 그것의 유형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북핵의 최종 출구는 북한에 의한 핵억제 종결 — 핵무기 부재 및 핵억제력 부재 선언 및 법안 채택— 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그 같은 선언은 비핵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능력 측면의 핵폐기 과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즉, 핵통제/군축협상, 합의이행, 검증이 "능력"에 관한 것인 반면, 북한의 핵억제 종결 선언은 분명히 "의지"에 관한 것이다.

핵무기 보유 및 핵억제 자체가 강제적 위협coercive threat을 갖게 된다.(Lawrence Freedman, Deterrence, 2004) 이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바, 하나는 강제성을 공세적으로 사용하는 강제적 핵위협coercive nuclear threat이며, 다른 하나는 주로 외부의 공격을 억제하는 핵억제 위협nuclear deterrence threat이다. 핵무장 국가가 한 가지의 유형에만 의존하지 않겠지만, 이 같은 분류는 핵무장 국가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행태의 유용성을 분석하는데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에 대해 주목하는 이른바 "강제핵위협론"은 핵무장 국가들이 대체로 벼랑끝 전술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결과를 초래하려 한다는 것이다. 강제핵위협론은 핵무기는 억제의 수단만이 아니며,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핵전쟁 리스크를 상승escalation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무력의 우월성 superiority을 확보해야만 하고 새로운 핵무장 추구 국가에는 군사적 공격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실제 한 국가의 핵무장이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고 핵확산을 자극하며, 약소 핵무장 국가라도 오히려 강대국 핵국가보다도 더 risk-taking한 벼랑끝 전술을 택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핵무장에 대해 이란의 핵무장이 지역의 세력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왈츠의 설명은, 핵확산을 문제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핵을 안보수단으로 보면서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사실 약소 핵국가가 리스크 상승의 행태를 보인 경우는 2017년 북한의 사례이다.

그러나 핵무장 국가의 행태를 강제핵위협론의 입장에서만 설명할 수 없는, 즉 이 이론을 반박하는 핵억제위협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사례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섹서 및 퍼만(Todd S. Sechser and Matthew Fuhrmann 2017)은 19가지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핵억제력 보유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강제핵위협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편다. 섹서와 퍼만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7)]

– 핵 우월성이 강제핵위협의 성공 조건이 아니다. 프에블로호 사건 1961년
– 안정-불안정 패러독스 이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행태, 즉 핵을 배경으로 한 공격적 행태는 성공하지 못한다. 베를린 1958-59년, 파키스탄 카길전쟁, 북한 2017년
– 리스크 상승의 벼랑끝 전술이 핵의 신뢰성credibility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신뢰성 문제는 핵무력 또는 억제력의 효용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핵의 신뢰성을 입증하거나 이를 높이기 위한 공세적 행태로 주어진 상황을 조작manipulate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닉슨 대통령의 비합리적 미친 사람 irrational madman이론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신뢰성 문제는 벼랑끝 전술로 해결되지 않는바, 흔히 의사소통의 장애, 시그널 실패로 인해 의도하는 바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닉슨 대통령의 1969년 핵 얼러트는 베트남 전쟁시 소련이 북베트남의 협상테이블 유도해주기 위한 의도였으나 당시 소련은 중소 국경분쟁의 상승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바, 결국 닉슨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섹서와 퍼만의 분석이 북한의 행태와 관련하여 주는 시사점은
– 북한은 북핵문제 협상의 실패 또는 지연에 대해 일정한 벼랑끝 전술을 행할 가능

7) Todd S. Sechser and Matthew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성은 있겠으나, 그것이 의도하는 바를 성공을 이끌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7년까지 북한의 행태는 핵위협의 신뢰성credibility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외교적 핵강제라고 보기 힘들다. 향후 강제를 행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 만일 북한이 이상과 같은 경험적 사례를 안다면, 그리고 미국 측이 자신의 경험에서 교훈을 제대로 얻었다면, (1) 북한은 위험감수risk-taking행동보다는 핵억제력을 국제사회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경제제재 강도를 높일 뿐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지지도 확보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력을 강제적 위협의 수단으로 보다는 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편이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2) 설사 북한이 리스크 상승을 의도하더라도 미국은 자제restraint로 대응하는 편이 나을 것이며, 이로써 북한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시켜 결국 위험감수 전술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오산할 수 있는 시그널을 회피해야 하며 미국이 의도하는(그리고 의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약assurance을 보낼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8)]

북한이 핵억제력을 포기하기 이전까지 대남 행태는 어떤 모습을 띨까? 이상의 설명은 대남행태 또는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바,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보장되는 전형적 확장억제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시나리오나 예측은 있었으나, 외교적 강제핵위협에 대한 이론적 연구나 사례 설명은 없다. 핵억제위협론 및 강제핵위협론에 의거해 추론하자면 핵우산 하의 클라이언트 국가에 대한 위험감수 강제를 행할 가능성은 패트론 핵국가에 대해서 행할 확률보다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를 인질로 삼으면서 패트론으로부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약점을 유린할 수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패트론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디커플링 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의 성공여부는 패트론-클라이언트 국가들 간의 동맹관계의 공고성, 결의resolve, 확약assurance 여부에 달릴 수 있다.

북한이 남북한 관계에서의 강제를 행할 수 있는 예로는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비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연결 및 보수공사에 대한 재촉 및 압박, 남북한 재래식 군축

8) 시그널 문제와 관련, 2017년 리스크 상승시 미국의 주한 미국인 소개(疏開)작전 자제는 벼랑끝 전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바, 북한이 소개작전을 전쟁준비로 오인할 가능성을 회피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에 대한 압박 가능성 등이다. 앞 절에서의 논의, 즉 핵통제/군축으로서의 비핵화는 북한 핵무력의 물리적 능력capability을 비대칭적 보상을 통해 상쇄시키는 과정이다. 반면, 북핵의 최종 출구는 북한이 핵무력을 더 이상 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같은 억제 수단인 핵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확약이라 할 수 있다. 남아공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핵무기 폐기 및 프로그램의 폐기 후 1991년 비핵국가의 자격으로 NPT에 가입하고 IAEA 안전초지 협정을 수용했다는 것은 더 이상의 핵국가가 아님을 천명하며 국제적 비확산 레짐의 규범과 절차를 따른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993년 드 클레르 대통령이 과거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밝힘으로써 더 강화된 핵무기 프로그램 및 고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1991년의 남아공 행위는 곧바로 핵폐기의 최종 출구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북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신뢰 문제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 신뢰는 핵무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통해 점차 확대되는 것이지만, 설사 은폐, 기만의 요소가 있다하더라도 스스로의 핵억제력 종결 확약은 그 이후의 모든 북한의 행위가 이를 거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핵무기를 배경으로 위협의 상승을 꾀하는 어떤 행위도 공약 또는 공언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북한의 의지의 확약은 비핵화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비핵화=북핵 철폐 등식으로만 인식되어 북미회담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실패에 대한 절망감을 초래할 수도 있는바, 북핵을 삼각구도로 이해하면 사회과학적 이해를 넓혀 정책적 측면에서도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김정은과 트럼프의 입만 쳐다보며 북핵의 미래를 논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에서 보듯이 북핵은 난제임에 틀림없다.

첫째, 확산/비확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핵무장은 대외적 안보위협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며 대내적 안보 및 정당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북한의 기술 획득 프로세스 -- 네트워크 및 파워 프로젝션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핵을 둘러싸고 강대국간 견제, 밸런싱의 국제정치가 작용해 왔다. 이 같은 복합성이 북핵 해결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핵통제/핵군축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신고 리스트를 제시하든 일부 핵능력을 일방적으로 동결하든 "검증"은 비핵화의 핵심으로서 북미 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남을 것이다. 협상 내용과 관련, 북미 양측이 협상 결과로서의 합의가 상호이익에 기여

할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면 비핵화가 진전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비핵화의 범주와 관련 한반도비핵화와 북한이 보는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해 일치된 인식이 필수적이다. 그렇다 해도, 한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이익은 핵폐기이므로 과정 자체는 난해하지만 이슈로서는 단순한 편이다. 반면 북한의 이익은 대외적 안보만이 아니라 대내적 안보, 정당성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이익이 훨씬 복합적이다. 북한의 공개적, 공식적 입장을 통해본 이익보다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실제로 추구하는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셋째, 핵억제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 및 국제사회에 대하여 위험감수의 행태보다는 "한정적" 비핵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적정 수준의 제재 해제 및 핵능력의 실질적 견지 — 예를 들면, 동결 또는 동결-불능화에 국한 —를 전략으로 삼을 가능성이다. 만일 북한이 "한정적" 비핵화 전략을 꾀할 경우, 한국 정부는 정책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그 같은 전략에 수반하여 한국에 대해 강제를 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핵의 최종 해결은 핵능력의 폐기만이 아니라 핵억제 의지의 파기를 확약하는 것으로, 2012년 개정헌법의 전문 및 2013년의 핵보유국법을 대체하는 비핵평화국가법 채택 등과 같은 것이다.

이 밖에 이론적 함의로는 핵무장 국가가 확장억제 핵우산 하의 국가에 대해 강제핵위협을 행할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론은 핵강대국간의 양자적 위협 관계를 분석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핵우산 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위협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정립된 바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상황 전개가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비대칭적 열세에 있지만, 북한은 한국을 경제적 이익, 협력을 유인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적절한 대상으로 판단할 것이다.

핵연구가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바, 북핵 문제가 고조될 때 등장했던 핵무장론의 논리에 관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의 핵무장론자들은 흔히 프랑스 피에르 갈로와의 표현을 빌어 남북한간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점이다. 몇 년 전 프랑스의 여성 전략분석가인 델펙은 아카이브 분석을 통해 당시 소련이 프랑스 핵무기에 대해 공포의 균형을 느낀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즉 갈로와의 핵전략은 소련에게 그 의미가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소련과 프랑스간 핵능력의 현격한 차이였을 것이다. 누구라도 갈로와의 공포의 균형 전략을 인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마치 상대방에게 통했던 유용한 전략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북한경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석진 (통일연구원)

1. 서론

우리는 북한경제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태 인식에 큰 차이가 있고,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주제별 연구 실적이 불균형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고 있고 연구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점은 희망적이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북한경제 연구의 정책적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북한경제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본다.[1] 남북경협이나 통일정책 같은 정책 연구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북한경제 중에서도 2000년대 초 이후 최근 시기에 대한 연구를 집중 검토한다.

이 글의 주요 목적은 경제 비전공자를 포함한 북한 연구자 및 정책 당국자들에게 북한경제 전문가들이 북한경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소개하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글의 쟁점 정리 방식과 주요 논지는 필자의 주관적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1) 북한경제 연구 현황에 대해 훨씬 포괄적이고 상세한 검토로는 이석기 외(2013) 및 이석 편(2014)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후 나온 연구까지 포함하여 주요 쟁점별로 연구 현황을 간략히 재정리한다.

2. 자료와 연구방법 문제

경제 분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수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각국 정부가 생산하는 국가통계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1960년대 초중반 이후 경제통계 대부분의 발표를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경제 연구에서는 국가통계를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래의 북한경제 연구는 북한 당국이 부정기적으로 발표하거나 국제기구에 제공한 단편적 자료, 남한 관계기관이 수집하거나 추정한 자료, 북한과 거래하는 상대 국가가 발표한 무역통계 등 매우 부족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자료 확보 방법이 추가되면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2] 새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자료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 UN 산하기구(UNFPA, UNICEF, WFP 등)의 지원을 받아 북한 통계당국이 조사한 인구와 영양 · 건강 관련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탈북민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획득한 자료이다. 그 외에 북한 현지 주민과의 연락이나 위성 촬영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정보도 있다. 숫자로 된 자료가 절대 부족하므로 면담을 통해 수집된 일화(anecdotes)나 사진 같은 정성적 정보도 중요하게 활용된다.

〈표 1〉 북한 경제 관련 통계, 자료, 정보 개요

주제	발표 또는 추정 기관
국민소득(GDP, GNI)과 성장률	UN (북한 제공 자료[금액] + 한국은행[성장률])
	한국은행 (관계기관 자료 이용)
	각종 기관 및 연구자
재정 증가율	북한 재정성 (최고인민회의 발표)
식량 · 농업	FAO/WFP (북한 농업성 제공 자료에 기초)
	농촌진흥청
부문별 품목별 실물지표	관계기관 (통계청 발표)
국영경제 관련 각종 소식	북한 공식 매체
대외무역 – 북중무역 및 투자	중국 해관,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 – 남북교역	관세청, 통일부
대외무역 – 기타 국가와의 교역	각국 세관 (UN Comtrade에 보고)
대외무역 – 종합	UN, IMF, KOTRA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통일부, UN, WFP
인구	북한 중앙통계국 (UNFPA 지원)
영양 · 건강 (어린이 및 여성 중심)	북한 중앙통계국 (UNICEF, WFP 등 지원)
시장환율 · 시장물가	데일리 NK (및 기타 기관)
경제 · 사회 전반 (탈북민 조사)	통일부(비공개), 각종 기관 및 연구자
경제 · 사회 전반 (북한 현지 연락)	국내외 언론, 각종 기관 및 개인
시장 (위성 사진 및 탈북민 조사)	각종 기관 및 연구자
전력 사정 (위성 사진 및 탈북민 조사)	각종 기관 및 연구자

자료: 각종 문헌을 이용해 필자 정리

정보량이 늘어난 것은 연구자들에게 무척 반가운 일이지만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기도 한다. 새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자료가 기존 자료와 잘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어떤 자료를 더 신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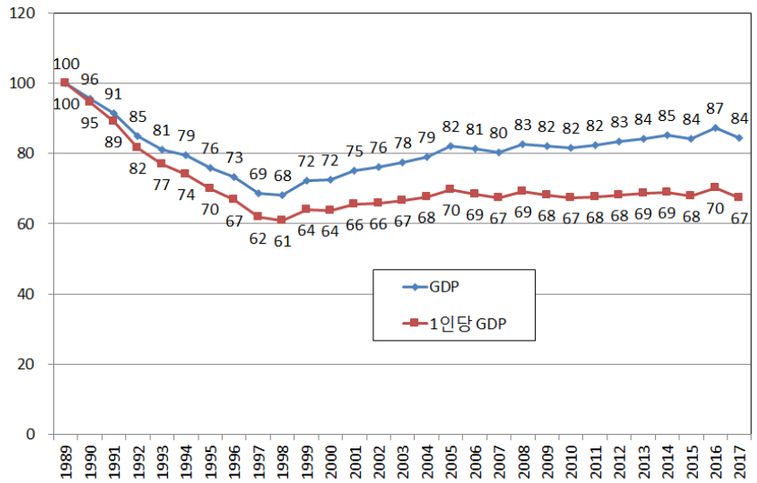
가장 대표적인 경제 지표인 성장률의 경우, 1990년 이후 연도별 장기 시계열 자료로는 한국은행 추정치가 유일하다.[3] 한은 추정 결과에 의하면, 〈그림 1〉에서 보듯이 2017년 현재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는 1989년의 3분의 2에 불과하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대체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북한 경제 관련 자료에 대해 더 상세한 소개로는 문성민 외(2014), 이석(2014b), 김석진(2018a) 참조.

3) 김병연도 1990년 이후 연도별 북한 성장률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김병연(2014), pp. 51~53; Kim(2017), pp. 70~83. 하지만 김병연의 추정치는 한국은행의 북한 광공업 및 농업생산 증가율(또는 식량작물 생산량 증가율)을 추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 추정치를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UN 국민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북한 성장률은 한은 추정치를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그림 1〉 한국은행의 북한 실질 GDP 추정치

(1989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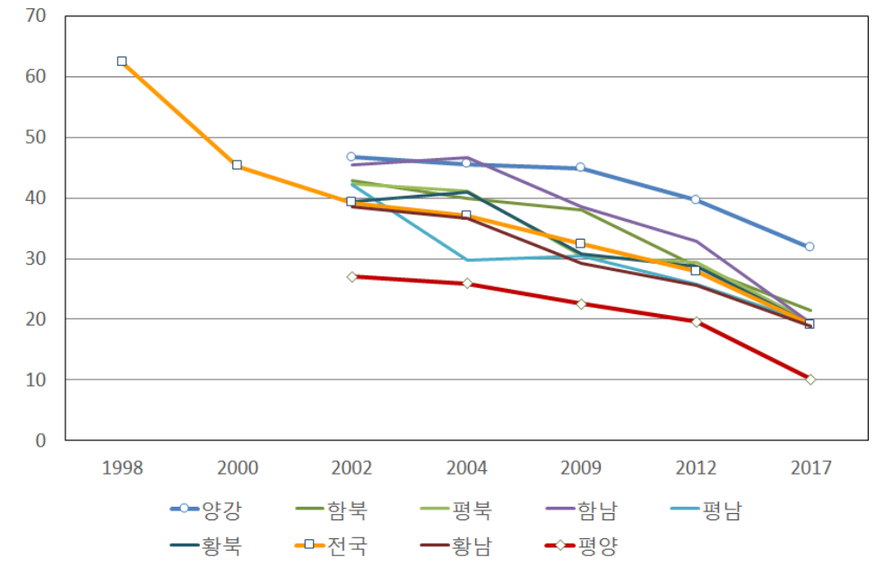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2019. 1. 21. 검색).
주: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실질 GDP를 성장지수(1989년=100)로 변환한 것임. 1인당 GDP는 인구 추정치를 이용해 계산했음.

한편, 새로 확보된 자료들은 북한 경제의 장기 추세에 대해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다. UNICEF를 비롯한 UN 산하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북한 통계당국이 조사 ·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1990년대 후반 이후 2017년까지 장기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4] 중요한 점은 북한에 대한 외부의 식량원조가 크게 줄어든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도 영양상태 개선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자체적 식량 · 식품 공급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식량 · 식품 공급량 증가 추세가 경제성장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료는 한은 추정치가 북한의 성장 실적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자료 외에 무역 통계, 탈북민 조사, 북한 현지 연락 및 방문, 위성 촬영, 북한 공식 매체 등을 통해 얻어진 여타의 정보들도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로는 홍제환 · 김석진 · 정은미(2018), pp. 53~107 참조.

〈그림 2〉 북한 지역별 영유아 만성 영양부족 비율

(%)



자료: 북한 중앙통계국과 국제기구(UNICEF, WFP 등) 공동 조사. 상세한 출처는 홍제환 · 김석진 · 정은미,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64~65 및 105~107 참조.
주: 영유아 만성 영양부족(chronic undernutrition)은 5세 미만(0~59개월) 영유아의 월령 대비 신장이 WHO 성장 표준의 중앙값보다 2 표준편차 이상 작은 상태를 의미함.

자료와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최근 중요한 정보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탈북민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5] 탈북민은 북한주민 전체에서 무작위 추출된 집단이 아니라 매우 강한 지역별, 성별, 소속 직장별, 정치성향별 편향을 가진 특수한 집단이다. 따라서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으로 북한 전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등의 대략적인 상황 설명에 탈북민 조사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활용해 숫자로 된 추정 결과를 내놓을 경우 주제에 따라 상당히 큰

5) 탈북민 조사 중 가장 중요한 연구는 통일부에서 2011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이지만, 그 결과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 조사 결과는 각종 기관 및 연구자들이 실시한 다양한 탈북민 조사에 비해 표본 집단의 크기가 훨씬 크고, 조사 항목 및 내용이 훨씬 광범위하며, 조사 대상 기간(즉 탈북민의 탈북연도)이 2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있어 장기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조사 내용이 매년 수정 보완되어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 수준과 정보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과대 추정이나 과소 추정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의 문제점은 연구자가 연구방법을 선택할 때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는 정교하고 엄밀한 연구방법을 적용할수록 더욱 정확하고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만, 북한경제 연구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아무리 세련된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기초 자료가 신뢰하기 어렵다면 분석 결과도 역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잡한 방법을 적용할수록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해야 할 가정의 수가 늘어난다. 부실한 자료에 주관적 가정을 보태다 보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이 현실과 더욱 멀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주제별 연구 현황과 쟁점

가. 경제성장 실적 및 요인

어떤 나라의 경제 상황을 진단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추세와 그 결정요인이다.[6]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경제는 어떤 성장궤적을 보였을까? 북한경제가 1990년대 초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다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엽까지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7] 〈그림 1〉에서 보듯이 한국은행의 북한 성장률 추정 결과도 이런 인식을 보여준다.

2000년대 중엽 이후 성장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은행은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대체로 북한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 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추정했고, 201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한은 추정 결과에 근거해 북한의 성장 실적을 분석했다.[8] 그러나 앞 절에서 보았듯이 새롭게 확보된 자료와 정보들은 2000년대 중엽 이후에도 북한의 경제회복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실제 성장률은 한은 추정치보다 높았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시일이 흐를수록 이런 인식은 더욱 확산되었다.[9] 한은이 북한의 성장률을 과소평가했을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한은이 국영경제(국영기업, 국가기관과 집단농장)에 대해 수집된 기초자료로 추정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시장화와 사경제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영경제 관련 기초자료도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설은 없고 의견 차이가 남아 있으며 서로의 의견이 얼마만큼 다른지조차 분명치 않다. 한은 추정치는 명확한 숫자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와 다른 대안적 추정치를 연도별 시계열로 제시하는 작업은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한은 추정치를 비판하는 연구자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명확한 숫자로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요 연구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실제 성장 실적이 ① 한은 추정치(2000~2015년 연평균 성장률 1.0%, 2005~2015년은 0.2%)와 거의 비슷했을 것, ② 일부 시기(2010~2015년 또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한은 추정치보다 약간 높았을 것(한은 추정치 + 연평균 1% 포인트 내외), ③ 더 긴 기간(2005~2015년 또는 2000~2015년) 동안 한은 추정치보다 한결 높았을 것(한은 추정치 + 연평균 2% 포인트 내외)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10]

이 가운데서 북한의 성장 실적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③번 의견(필자의 의견)도 북한이 고도성장을 했다고 보지는 않으며 2000년 이후 장기 연평균 성장률(복리 증가율)이 3% 내외(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 2% 내외)였을 것으로 추측하므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연도별로는 약간에 불과한 차이도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큰 차이로 증폭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제가 연평균 1% 성장하면 10년 후 경제규모(GDP)는 10.5% 커지며, 연평균 2% 성장하면 21.9%, 연평균 3% 성장하면 34.4% 커진다. 15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면 차이는 더 커져서 경제규모 증가율은 각각 16.1%, 34.6%, 55.8%로 더 벌어진다.

즉 ③번 의견(필자의 의견)과 ①번 의견(한은 추정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6)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인 경제발전 수준(1인당 소득수준) 평가는 이 글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석진(2007), 김석진(2013d), pp. 41~44, 김석진(2014a), pp. 1~11, 문성민(2014), pp. 11~38 참조.

7) 예외적 의견도 있다. 에버슈태트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중엽까지 생활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은 외부 원조 덕분이며, 북한의 실질 GDP가 증가한 것(즉 북한경제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berstadt(2007), pp. 213~215.

8) 많은 문헌이 있지만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석(2009a), pp. 3~26; 김병연(2011), pp. 63~81; 양문수 · 이석기 외(2012), pp. 415~427.

9) 조동호(2011), pp. 3~18; 김석진(2013), pp. 35~50. 놀랜드(Noland, 2015)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10) ①번 의견은 김병연(Kim, 2017), pp. 70~83, ②번 의견은 양운철 · 장형수(2017), pp. 1~22, ③번 의견은 김석진(2014c), pp. 163~168 참조. 한편 김규철(2017c), pp. ??~??; 홍제환(2017), pp. 26~29; 양문수(2017a), pp. 35~36도 참조. 김규철(2017)은 한은 추정치를 기초자료로 계속 활용하고 있지만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북한경제의 추세가 하향에서 상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홍제환(2017)과 양문수(2017)도 실제 성장실적은 한은 추정치보다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본다.

②번과 ③번 의견 사이의 차이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③번 의견은 김정은 집권 이후만이 아니라 김정일 시대 말기인 2000년대 후반에도 경제회복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①번 및 ②번 의견과 다르다. ①번 의견은 북한의 1인당 실질 GDP가 지금도 경제난 이전(1989년) 대비 3분의 2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③번 의견은 경제난 이전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본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몇 년 동안 북한의 성장률이 연평균 5~10% 정도로 매우 높았을 것이라는 일부 북한 관찰자들의 추측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혀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성장실적을 판단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쟁점은 성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경제가 정체했다면 왜 정체한 것인가, 회복되었다면 어떻게 회복된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을 '정체설'과 '회복설'의 두 유형으로 대별해 각각이 생각하는 성장요인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정체설'은 북한경제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 때문에 대체로 정체 상태에 있으며 일정 시기에 나타난 회복은 외부 원조나 무역 같은 대외적 요인 덕분이었다고 본다.[11] '회복설'은 한편으로는 시장화와 사경제의 발전,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 경제관계 확대 덕분에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으며, 양대 요인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본다.[12] 한 가지 남아 있는 쟁점은 북한당국의 국영경제 재건 및 개혁 시도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나 하는 점인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도 성장 기여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13]

결국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중시하는 북한경제 성장요인은 ① 시장화와 사경제의 발전, ② 국영경제의 재건과 개혁, ③ 대외 경제관계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의 세 요인은 북한 경제체제가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가, 현 경제체제의 성격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세 요인에 대한 연구 현황을 차례로 살펴본다.

11) 이석(2009a), 김병연(2011), Kim(2017), Eberstadt(2015). 정체설도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 상황이 1990년대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개선 정도가 미약해 경제난 이전과 아직도 큰 격차가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정체설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12) 김석진(2013d, 2014a, 2014c), 김석진 · 양문수(2014).

13) 이석기 외(2010, 2018a, 2018b), 양문수(2017a, 2017b, 2017c) 참조. 한편,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요 북한 연구자인 란코프(Lankov, 2017)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개혁 정책(시장화에 대한 태도 포함)이 경제실적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나. 시장화와 사경제(비공식 경제)의 발전[14]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경제에서 일어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따라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현상은 단연코 '시장화'라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수의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기존 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현상을 '시장화'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15]

하지만 시장화 개념만으로는 북한경제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16] 자원배분 메커니즘(시장 대 계획)은 경제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닐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준도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학계의 정설은 ① 경제활동 조직과 생산적 자산의 소유제도(사유 대 국유)와 ② 자원배분 메커니즘(시장 대 계획)이라는 양대 기준에 근거해 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며, 둘 중에서 소유제도를 더 중시한다.[17]

소유제도와 자원배분 메커니즘 사이에는 강한 친화성이 있으므로 보통은 둘 중 어느 기준을 사용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두 기준이 엇갈릴 경우인데, 그 전형적인 사례는 국유기업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시장 거래가 널리 허용되는 경우이다. 이를 '시장사회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는 기존 사회주의 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분적 개혁을 통해 기존 체제를 유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18] 국유기업 체제, 즉 관료조직의 경제권력이 살아 있는 한, 시장 메커니즘의 활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집단농장 포함)이 아닌 사적인 경제조직(개인, 가족, 사기업 등)이 출현 · 발전하고 이들이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경제활동을 해야만 효율성 개선과 성장동력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화가 아니라 사경제 부문(private sector)의 발전이야말로 체제전환의 진정한 시금석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다수의 경제학적 연구가 시장화를 중심 개념으로 사용하면서도 시장화로 포괄되는 여러 현상 중에서 사경제 부문의 발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정

14) 시장화 연구 현황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과 참고문헌 목록은 양문수(2013b), 이종규(2014), 김석진 · 양문수(2014)에 잘 정리되어 있다.

15) 많은 문헌이 있지만 시장화를 중심 개념으로 삼은 대표적인 연구로는 임강택(2009), 이석(2009b), 양문수(2010, 2013a), 정은이(2010), 김병연 · 양문수(2012), 정형곤 외(2012), 이석기 외(2014), Haggard and Noland(2010) 등을 들 수 있다.

16) 이 부분의 개념적 논의에 대해 더 상세한 것은 김석진 · 양문수(2014), pp. 9~28 참조.

17) Kornai(1992), pp. 360~379.

18) Kornai(1992), pp. 474~512.

치학적 연구는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19] 이것은 연구 대상의 차이일 뿐 아니라 북한 체제 변화의 동력과 전망에 대한 의견 차이이기도 하다. 다수의 경제학적 연구에 의하면 북한에서 사경제 부문이 발전한 것은 국영 계획경제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진 후 일반주민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국가 경제조직(국영기업과 집단농장) 바깥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개척한 결과이다. 즉 변화의 동력은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출현한 것이며, 사경제 부문은 기존 사회주의 체제와 대립하는 변혁적 속성을 갖는다. 반면 정치학적 연구는 대외무역을 장악한 특권적 '정권기관' 소속 국영기업들이 위로부터 위계적으로 시장을 창출 · 운영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시장은 기존 권력집단의 경제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변혁적 성격은 부족하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실증적 근거로 활용되는 탈북민 설문조사와 면담 결과를 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이질적인 현상이 공존해 온 것으로 보이며, 어떤 현상이 더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확증적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필자가 생각하는 잠정적 결론은 북한에서 시장과 사경제 부문은 기본적으로 일반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이지만 당국과 국영경제도 이를 허용 및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영경제와 사경제,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구조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경제 현상을 개념화할 때에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 경제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는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경제가 바로 그것이다.[20]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 사유제도와 시장 거래가 일반적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성장동력을 발현하려면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법 · 제도와 저축을 투자로 연결하는 금융 시스템, 그리고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노동시장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투자와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 지속적 경제성장이 어려워진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생계형 경제활동이 흔하며 이를 가리켜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경제라고 부른다.[21] 오늘날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경제 활동의 주된 양상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공식 경제와 매우 흡사하다. 또한 북한의 사경제는 공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비공식 경제라고 부를 수도 있다. 옛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런 의미로 비공식 경제 개념이 흔히 사용되었다. 결국 오늘날 북한의 사경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에서 벗어났지만 자본주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중의 의미에서 비공식 경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성장요인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 비공식 경제의 발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과거 경제학계의 정설은 (옛) 사회주의 나라에서든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에서든 비공식 경제는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생계형 경제활동에 불과하므로 전체 경제성장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며 그 자체의 성장도 일정 한계 내에 머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 예상과 달리 지난 20~30여 년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비공식 경제는 두드러지게 발전했으며, 전체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공식 경제는 제도적 뒷받침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래서 문제가 많은 부문임에도 어떻게 해서 인상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 개발도상국 경제 연구에서 이에 대해 제시되는 답은 '서비스업 주도 성장'과 (일반주민에 의한 소규모) '기업가 활동(entrepreneurship)'인데, 필자는 북한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다.[22] 차이점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농민이 농촌 · 농업을 떠나 도시 서비스업에 진입한 것이 중요했다면, 북한에서는 농민과 도시주민이 공히 국영경제(국영기업과 집단농장)를 벗어나 비공식 서비스업(유통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개척한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비공식 서비스업의 발전은 농업, 건설업, 광공업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나머지 업종에서도 비공식 경제가 출현 · 발전했다. 달리 말하면 시장 네트워크의 발전이 전반적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왔다는 뜻이다.

비공식 경제가 크게 발전했고 전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면, 전체 경제에서 비공식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GDP 중에서 비공식 경제가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 또는 비공식 부문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 추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검증하려 한 여러 선행연구는 상당히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몇몇 선행연구가 실시한 탈북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계소득의 적어도 3분의 2 이상, 아마도 4분의 3 정도가 비공식 소득(국영경제 바깥의 경제활동에서 얻은 소득)이며, 이러한 상황이 1990년대 후반에서 대

19) 북한 시장화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도 많지만 여기서는 대표적 문헌인 박형중(2011, 2012)만 인용한다. 물론 경제학적 연구가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을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임강택(2013); Kim(2017), pp. 123~129.

20) 김석진 · 양문수(2014)는 이 관점을 체계적으로 적용해 북한경제의 변화를 살펴본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21) 공식성 · 비공식성이 합법성 · 불법성을 의미하진 않는다. 어느 정도 합법화 · 제도화되어 있더라도 재산권, 계약 이행, 금융 시스템, 노동의 자유 및 노동 보호 등 여러 면에서 실질적인 법적 ·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할 경우 비공식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22) 김석진 · 양문수(2014), pp. 69~118. 북한 서비스업 현황에 대해서는 이석기 외(2017) 참조.

략 2010년 이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23] 이와 달리 최근 탈북민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공식 소득 비중이 2005년 이전 40%대, 2006~2010년 50%대, 2011년 이후 60%대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24]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비공식 경제 비중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상당히 높았고, 그 추세는 분명치 않으나 얼마간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공식 경제의 비중 및 그 추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비공식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외연이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앞에서 시장화 개념을 검토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좁은 의미의 비공식 경제, 즉 사경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국영경제도 시장 거래에 참여하고 비공식 경제와 연계를 맺음에 따라 국영경제와 사경제, 계획과 시장이 혼합된 회색지대가 크게 넓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중 특히 국영경제 내에서 벌어지는 사익 추구 활동 또는 국영경제의 명의와 자산을 활용하는 개인사업은 실질적으로 사경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25] 이 중 일부분은 일반적인 생계형 비공식 경제활동보다 규모가 더 크고 생산성도 더 높다는 점에서 사업형 기업가 활동이라 할 만하다.

둘째, 탈북민의 편향성 때문에 비공식 경제 비중 상승 추세가 다소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식 경제 참가자보다 비공식 경제 참가자의 탈북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 때문에 탈북민 조사에서는 초기부터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게 나타나 상승 추세가 뚜렷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26]

셋째, 북한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비공식 경제만이 아니라 공식 경제가 함께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비공식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더라도 그 비중의 상승 추세는 한결 완만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문제는 그래서 오늘날 북한경제에서 사경제(비공식 경제)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 동안 북한의 시장화와 사경제에 관한 소식이 국내외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결과 이제는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탈북민 조사를 통한 여러 선행연구는 가계소득 중 비공식 소득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GDP 중에서 비공식 소득의 비중은 가계소득 중 비공식 소득 비중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다. GDP에서 행정, 국방, 치안, 교육, 보건 등 공공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국영기업 투자 활동 중 주요 부분도 공식 경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식 경제 참가자보다 비공식 경제 참가자들이 탈북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탈북민 조사에서는 비공식 경제 비중이 북한 전체보다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계부문만이 아닌 경제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한 연구에서는 2013년 현재 비공식 부문 비중이 생산요소소득 측면에서 18.5%, 최종수요 측면에서 28.5%라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27] 하지만 추정 근거가 된 기초자료의 신뢰도가 높지 않고 추정 과정에서 무리한 가정들이 설정되었으므로 실제 비공식 비중은 추정치와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회색지대까지 포함하더라도 50%를 하회하며, 회색지대를 제외한 좁은 의미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컨대 공식경제, 즉 국영경제 비중이 더 높고, 따라서 북한은 아직 사회주의 체제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어떨까? 사경제(비공식 경제) 비중이 꾸준히 더 상승해 얼마 후면 북한도 자본주의 체제의 범주 안으로 들어설 수 있을까? 여기서 다시 비공식 경제의 한계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 경제는 앞에서 말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서비스 부문(주로 유통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의 소규모 경제활동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경제활동, 특히 제조업 부문에는 잘 진입하지 못한다. 또 투자와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워 생산성 향상 속도도 느리다. 따라서 산업구조 전환 기(북한의 경우 국영경제의 부분적 붕괴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기간)에는 비공식 경제 비중이 상승하면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지만, 구조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시장과 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려면, 북한당국이

23) Haggard and Noland(2011), pp. 58~62; 김병연 · 양문수(2012), pp. 33~38; Kim and Kim(2016), pp. 464~472.

24) 이종규(2016), pp. 56~62.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은 통일부 탈북민 조사에서도 비공식 소득이 주요 소득이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과 비공식 경제활동 참가율이 장기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25) 양문수 · 윤인주(2016)가 실시한 탈북민 설문조사에서는 국영기업의 명의와 자산을 활용한 사실상의 개인사업이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란코프 등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이미 오래 전부터 출현하기 시작했음을 보이고 있다. Lankov et al.(2017).

26) 탈북민은 주로 접경지역 출신인데, 접경지역에서 먼저 비공식 경제가 발전하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화와 비공식 경제에 유리한 다른 지역적 요인(해상무역 루트, 농업, 인구밀도 및 운수 사정 등)도 있으므로 반드시 접경지역이 유리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 Silberstein(2015) 참조.

27) 최지영(2016), pp. 19~23.

훨씬 적극적인 개혁을 실시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시장과 사경제를 충분히 공식화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개혁의 시금석은 제조업 부문에서 사기업의 발전과 외자기업의 진입을 허용 · 장려하느냐, 그리고 사회주의적 노동통제를 풀어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느냐 여부에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여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당국이 적극적 개혁을 실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국영경제의 재건과 개혁

시장과 사경제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국영경제는 지금도 사경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공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는 사경제 비중이 압도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업종, 즉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등에서는 국영경제 비중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종에서는 국영기업과 집단농장(협동농장 및 국영농장)이라는 사회주의적 경제조직 체계가 살아 있고, 이들은 북한 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 중 제조업은 경제성장 속도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자료와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 국영경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시장과 사경제에 대해서는 탈북민 조사 등을 통해 꽤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지만, 국영경제 종사자(특히 중요 기업 관계자)들은 탈북 비율이 훨씬 낮아서 구체적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공식매체가 국영기업과 집단농장에 대해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식은 구체적 자료와 내용이 빠져 있는 정치 선전용 홍보에 가깝다. 하지만 북한이 100% 폐쇄되어 있는 사회는 아니어서 빈약하나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 볼 수 있고, 이에 근거해 이제는 국영경제의 변화 추이에 대해 어렴풋한 윤곽은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국영경제에 대해 연구한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국영 산업 재건 추세이고, 다른 하나는 국영경제 관리방법 개혁이다.

먼저 국영 산업 재건 추세에 대해 한국은행의 북한 성장률 추정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한은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은 대체로 장기 정체 상태에 있는데, 그나마 이루어진 약간의 회복은 농업과 서비스업 회복 덕분이었고 제조업을 비롯한 국영 산업 부문은 더욱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는 한은의 추정이 시장과 사경제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국영 산업 부문에 대한 추정에서도 과소평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뚜렷한 예는 2010년 이후 석탄 생산량 추정치 증가 추세가 너무 완만하다는 것인데, 대중국 석탄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해하기 힘든 수치이다.[28] 또한 한은이 추정의 기초자료로 삼은 발전 전력량 추정치는 2008년까지 회복되다가 그 이후 다시 하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위성 촬영 야간 조도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에도 발전 전력량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29]

제조업 성장추세에 대한 대안적 추정은 훨씬 더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매체 기사 및 기타 정보를 종합한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국영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추측된다.[30] 북한당국이 공식 매체를 통해 스스로 보고하고 있듯이 국영산업 재건 시도 중 많은 부분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낙후한 전통산업 복구에 불과하므로 재건 실적을 높이 평가하긴 어렵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북중무역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국산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국영 산업의 현대화가 약간 진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북한 방문자들이 전하고 있듯이 국산 소비재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 국영 경공업(식품가공업, 의류, 기타 소비재 공산품) 부문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국영경제의 미래와 관련해 더욱 큰 주목을 끄는 사안은 김정은 집권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이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국영경제 개혁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조치이며,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자료와 정보 부족 때문에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종종 추상적인 언급과 일부 기업 및 농장에 대한 단편적 소식을 통해 경제관리방법 개혁을 선전하고 있을 뿐, 개혁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얼마나 널리,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집권 초기 개혁 동향에 대한 연구는 개혁이 아직 부분적 · 실험적이고 개혁 내용도 충분히 적극적이지 못함을 강조하면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경향이 있었다.[31] 다행히 그

28) 양운철 · 장형수(2017), pp. 10–13; 홍제환(2017), pp. 26~29.

29) 김규철(2017b), pp. 8~10.

30) 이석기 외(2010), 이석기 외(2014b), 심완섭 외(2015), 이석기 외(2018b).

31) 김석진(2013b), 양문수(2014), 민준규 · 정승호(2014).

후에 개혁의 세부사항을 담은 북한 내부 자료가 다수 입수됨으로써 적어도 북한당국이 어떤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지는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내부 문서 내용으로만 보면 북한의 개혁 시도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32]

첫째, 당초에는 농업부문의 '포전담당책임제'와 공업부문의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가 주로 알려졌지만, 개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격제도, 대외무역 체계, 재정 및 금융제도에까지 걸쳐 있으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경제법령의 수정 · 보충, 그리고 개혁 내용을 당국자와 관리자들에게 숙지시키기 위한 교육자료 작성까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개혁의 주요 내용은 국영경제 내에 시장 메커니즘을 상당히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국영기업과 집단농장의 시장 거래(원부자재 구매와 제품 판매)를 폭넓게 허용하고, 국정가격과 다른 '협의가격' 및 시장가격을 공식 인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과 합영 · 합작 권한도 훨씬 많은 기업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명령경제 방식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생산단위 및 생산자들에게 물질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진일보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진일보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제한성을 강조한 당초의 평가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3] 문서상으로는 개혁 내용이 나름 획기적이지만 지금도 각종 개혁 조치의 실제 추진 상황, 이에 따른 국영경제 실적 개선을 보여주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또한 국영경제의 시장 메커니즘 활용은 사실은 김정은 집권 이후 당국의 개혁 조치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되어 장기적으로 확산되어 온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상의 개혁이 국영경제, 국유제도라는 근본적 구조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 시장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옛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이런 '체제내 개혁'이 흔히 시도된 바 있는데, 그 성과는 대체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 단지 시장화에 머물지 않고 소유제도와 노동제도를 바꾸는 개혁, 즉 사유화와 노동통제 철폐(노동시장 형성)까지 추진해야 비로소 사회주의 체제의 틀을 넘어서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 개방은 점진적이었지만 비교적 초기부터 소유제도와 노동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32) 양문수(2017a, 2017b, 2017c), 이석기 외(2018a).

33) 김석진(2018b), pp. 58~65.

덕분에 세계를 놀라게 한 고도성장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화와 사경제의 발전, 그리고 국영경제의 변화와 개혁 상황을 보면, 중국, 베트남의 개혁 · 개방 초기 경험과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제도와 노동제도 개혁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체제이행은 아직은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

라. 대외 경제관계 확대

김정일 시대 북한경제에 대한 종래의 인식은 대외 경제관계의 영향력을 중시한 반면 대내적 회복력(사경제의 성장과 국영경제의 재건)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2000년대 초 이후 약간의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원조, 남북경협, 북중 · 북일무역 등 대외 경제관계 덕분이었을 뿐, 북한 스스로는 경제난에서 헤어 나올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34]

더욱이 대외 경제관계의 규모와 성격은 북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남한, 중국, 미국, 일본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런 인식에 따라 남한과 미국의 일부 당국자와 전략가들은 일본의 대북교역 금지(2006~2007년), 남한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중단(2008년), 5.24 조치에 따른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중단(2010년) 등 일련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를 크게 악화시킴으로써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35]

그러나 이런 예상과 달리 2010년 이후 북중무역이 급증해 남한 및 일본의 대북제재 효과를 상쇄했을 뿐 아니라 전체 대외 경제관계는 그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장했다.[36]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새로운 인식이 힘을 얻게 되었다.

2010년 이후 북중무역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에는 새로운 현상도 역시 정

34) Eberstadt(2007), Haggard and Noland(2007a, 2007b), 이석(2009a, 2009b), 김병연(2011).

35) 외교부 북핵담당대사와 차관보를 지낸 이용준의 글은 이런 인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용준(2015), pp. 277~283.

36) 초기에는 이석(2013, 2014a)처럼 5.24 조치가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주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그 후 북중무역 및 기타 대외거래의 추가 증가 규모가 워낙 커서 제재 효과가 충분히 상쇄되었다는 점에 대해 이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또한 이석의 평가는 북한의 석탄 생산량에 대한 관계기관 추정치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실제 석탄 생산량이 그보다 훨씬 많았다면 초기에도 이석의 평가는 타당하지 않게 된다.

치적으로 해석하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었다. 즉 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자신의 영향권 아래 포섭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따라 북중무역과 중국기업의 북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그 후 나온 여러 전문적 연구에 의하면, 북중무역 및 투자의 증가는 중국경제의 성장, 중국의 자원 수요 증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37] 해외 노동자 파견 같은 새로운 외화벌이 방법도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각국의 경제사정(임금 상승과 인력 부족)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었다.

한편,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 발전 추세는 2014년 이후 하향세로 전환되었는데, 이것 역시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38] 중국의 성장 둔화와 석탄 소비 억제 정책으로 석탄 및 철광석 수요가 정체하고 국제 가격까지 하락하자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은 위축되었고 중국기업의 북한 투자도 크게 줄었다. 즉 국제적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0년대 중반에 이미 북한의 대외경제는 취약성을 노출했는데, 이는 북한의 수출이 광산물처럼 경기 변동이 심한 일부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출은 광산물, 수산물 등 1차산품, 그리고 의류를 비롯한 노동집약 공산품에 집중되어 있는 저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구조는 장기간 변하지 않고 있다.[39]

그렇다면 지난 10년 또는 20년 동안 대외 경제관계는 북한경제 전체에서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가졌던 것일까? 종래의 인식은 대외 경제관계를 북한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주된 요인으로 보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대내적 구조 변화(사경제의 성장과 국영경제의 재건)도 대외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각각의 요인이 전체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정량적으로 식별 · 추계하는 작업은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일부 연구에서 계량적 방법을 통해 대외 경제관계가 북한의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단지 방향성 확인에 그쳤을 뿐이다.[40]

대외 경제관계가 경제성장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려주는 더 유용한 정보는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41] 수출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외화를 버는 것은 자체 생산이 어렵거나 부족한 물자를 수입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무엇을 수입해 어디에 썼을까? 수입물자의 규모는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 북한 내부경제에서 사용되는 수입물자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2000년대 중반 연간 10억 달러 내외에서 10년 후인 2010년대 중반에는 3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수입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수입품목 구성도 다양해지고 고도화되었다. 식량 · 식품과 석유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의 비중은 떨어지고 기계류, 자동차, 휴대폰처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품목의 비중은 상승했다. 산업용 중간재의 비중은 크게 상승하진 않았으나 수입규모가 확대되고 구성도 다양해졌다.

수입 추세와 구조를 살펴보면, 대외 경제관계 확대는 대내적 성장요인인 시장과 사경제의 성장 및 국영경제 재건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장과 사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해 준 교통 · 통신 사정 개선은 자동차, 정제유, 휴대폰 등 수입상품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고, 국영 산업 현대화와 각종 국책 건설 사업에서는 중국산 기계, 금속 및 건자재의 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식품과 각종 소비재의 수입은 생활수준을 높이고 시장 유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2016년 이후 국제적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을까? 자료와 정보가 부족해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2019년 초 현재까지 북한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주는 소식은 별로 들려오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국제적 대북제재가 처음부터 강력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UN 차원의 대북제재는 오래 전인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15년까지는 무기와 군수물자, 그리고 일부 사치품 무역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제재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는 일반 수출입과 금융, 화물검색 등 훨씬 넓은 분야에서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민생용 예외 조항과 연간 허용한도 조항이 있어 2017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대외무역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진짜 강력한 제재는 2017년 하반기 여러 차례의 UN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 수출 대부분의 금지,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 북한의 일부 품목(전기전자, 기계, 금속, 자동차 등) 수입 금지 등 추가 조치가 나옴으로써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후에도 북한은 금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의 수입 규모는 제재 이전 대비 약 3분의 2 수준이었다. 즉 제재 이후에도 비교적 많은 물자를 계속 수입하고 있으므로 겉보기에 경제적 타격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

37) 김석진(2013a, 2015), 이석 편(2013), 최장호 외(2015).

38) 김석진(2015).

39) 북한 대외무역의 상품별 구조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설명으로는 이석 편(2013), 김석진(2010, 2013c, 2014b, 2017), 최장호 외(2015) 참조.

40) 김병연(2011), Jung(2016).

41) 수입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이석 편(2013), 최장호 외(2015, 2017), 김양희(2017)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는 것이다. 더 이상 수입을 못하게 된 품목들은 소비가 아닌 투자에 관련된 것들이어서 영향이 나타나기까지는 시일이 한참 더 걸릴 것이다.

결국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외화보유액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충분히 많은 외화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지출해 상품수입을 계속함으로써 상당 기간 피해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외화가 바닥나 더 이상 수입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 피해가 훨씬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북한의 외화보유액[42]을 정확히 추산하려면 이제까지 장기간에 걸친 북한의 대외거래 규모와 내역을 정확히 추산함으로써 북한으로 들어온 외화와 북한에서 나간 외화가 각각 얼마였는지 알아내야 한다.

1990년대 초에서 2010년대 초까지 북한의 대외거래를 상세히 따져본 연구들에 의하면, 북한은 무역수지(상품수지)에서는 큰 적자를 보았지만 경상수지의 나머지 항목(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과 자본수지에서는 대체로 흑자를 보았으며, 그 결과 국제수지 전체로는 약간의 흑자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43] 하지만 추계 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와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흑자 누계가 얼마였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의 추정치[44]는 많아도 수십억 달러 정도라는 것인데,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한중일 3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무역통계에서는 남한과의 무역을 북한과의 무역으로 잘못 보고한 사례가 많은데, 이런 오류를 제거하고 추정작업을 해보면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더 줄어들고, 따라서 국제수지 흑자 규모는 더 커진다.[45]

42) 여기에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만이 아니라 기업, 기관, 주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까지 포함된다.

43) Haggard and Noland(2007a)은 1990~2005년 간의 대외거래를 연구했으며, Haggard and Noland(2017)은 그 결과를 2011년까지 연장했다. 장형수(2009)는 2000~2008년 기간을 연구했는데, 장형수(2013)에서는 그 결과를 다시 1991~2012년으로 확대했다.

44) 장형수(2013)의 추정치는 1991~2012년 누계 28억 달러(p. 184)이다. 해거드와 놀랜드는 명확한 결론을 피하고 있지만 그들의 추정치는 더 작을 것으로 보인다. Haggard and Noland(2007a, p. 36)의 연도별 추정치를 합산해 보면 1990~2005년 누계 3억 6천만 달러('best guess')가 된다. Haggard and Noland(2017)에서는 국제수지 전체가 아니라 경상수지 추정치(2011년까지 누계 53억 달러 적자)만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수지 누계 추정치는 밝히지 않고 있다(pp. 59~96). 해거드와 놀랜드가 제시한 경상수지 적자 추정치는 장형수의 추정치보다 더 크다. 따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제수지 흑자 누계 추정치는 장형수의 것보다 더 작을 것으로 보인다.

45) 장형수(2013)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점을 고려하면 국제수지 흑자는 20억 달러 이상 증가한다(p. 186). 북한 무역통계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석진(2014b), pp. 158~193 참조. 이 점을 고려한 무역수지 적자 재검토에 대해서는 김석진(2010) pp. 166~172 참조. UN 상품무역통계(Comtrade)에는 이런 오류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KOTRA가 편찬한 무역통계에서는 이를 일부 걸러냈지만 충분히 다 걸러낸 것은 아니다. 이런 오류는 2000년대 중반까지 많았지만 그 후에는 크게 줄어들어 이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의 작업처럼 장기간의 국제수지를 따질 때에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북한 무역통계에 대한 김석진의 지적에 대해 정혁 등(2018)은 세계 각국 무역통계에서 북한과의 무역을 남한과의 무역으로 잘못 보고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반론하였다(p. 23). 그러나 남한의 대외무역이 연간 1조 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인 반면, 북한의 대외무역은 연간 1백억 달러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석진이 지적한 오류가 정혁 등이 지적한 반대 오류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북중 간 거래 관행상 중국 무역통계에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 무역회사가 비공식적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중국 측 거래업체에 공식 신고 및 결제되는 금액과 별도로 (중국의 수입, 즉 북한의 수출 시) '킥백'(kickback)과 (중국의 수출, 즉 북한의 수입 시) '리베이트'(rebate)를 요구하기 때문이다.[46] 이로 인해 북한의 수출액(중국의 수입액)은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고 수입액(중국의 수출액)은 실제보다 높게 신고된다.[47]

2019년 초 현재 북한의 외화보유액이 얼마인지 알려면, 2010년대 초까지만 다룬 기존 연구를 2018년까지 연장해 해당 기간 중 국제수지 흑자 누계를 추정해야 하고, 방금 언급한 추정오차 가능성을 고려해 흑자 추정치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여기에 1990년대 초 당시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더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작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도 역시 모두 부정확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내기는 어렵다. 아무튼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이제까지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재가 크게 강화된 이후에도 북한이 상품수입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정 덕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48]

4. 결론: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지난 20년 동안 북한경제에서는 중요한 변화와 진전이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확인, 해석,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제는 북한경제의 구조와

46) 김규철(2017a), pp. 18~19, 임수호 외(2017), p. 81 및 pp. 129~139. 북중무역 관행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북한 무역회사들이 뇌물 등 비공식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병연 · 정승호(2015), pp. 82~84.

47) 임수호(2017)는 2000~2016년 기간 중 '킥백'과 '리베이트' 각각의 수출 및 수입 대비 비율을 10%로 가정하면 킥백 및 리베이트 총액이 100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p. 43). 하지만 모든 수출입 거래에서 킥백과 리베이트가 10%씩 북측 무역회사에 제공되었다는 가정은 무리해 보인다.

48) 여러 연구가 북한에서 외화통용 현상이 크게 진전되었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의 국제수지가 장기적으로 흑자였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외화통용은 들어온 외화가 나간 외화보다 많아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화통용 현상에 대해서는 이석기 외(2012), 양문수(2016), 이종규(2017), Mun and Jung(2017) 참조.

추세에 대해 어렴풋한 윤곽 정도는 그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료와 정보 부족 때문에 정확한 실태는 알지 못하며 연구자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북한경제의 실상을 상당히 다르게 추측하기도 한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론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경제는 1990년대 말 이후 점진적 회복 추세를 보였다. 회복 정도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마다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른 것은 아니었고 북한은 아직 저소득 개발도상국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둘째, 시장화가 진행되고 사경제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국영경제와 사경제, 그리고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주민의 자생적 활동에 의해 개척되었지만, 국영기업 · 기관들도 여기에 참여했으며 당국은 이를 허용 및 활용하는 정책을 폈다. 시장화와 사경제의 발전은 경제회복과 생활수준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국영경제와 사경제의 비중 및 그 추이는 분명치 않지만 아직은 국영경제 비중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사경제는 사회주의에서는 벗어났지만 자본주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중의 의미에서 비공식적이다.

셋째, 국영경제의 재건과 개혁도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당국은 국영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국영경제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국영경제 개혁은 시장 메커니즘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체제이행이 아닌 체제 내 개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는 정치적 요인(한반도 정세와 각국 정부의 전략)과 경제적 요인(중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 여건)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정치적 요인은 대외 경제관계를 위축 · 차단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요인은 반대로 확대 ·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경제적 요인이 우세해져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는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시장 및 사경제의 성장과 국영경제 재건 양쪽 모두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국제적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대외 경제관계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북한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중요한 연구주제들이 있다. 이 주제들은 중요하지만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향후 중점 연구과제로 삼을 만하다.

첫째는 (농업 · 식량 ·)식품경제이다. 식량사정이 얼마나 개선되었고 어떻게 해서 개선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개인농업(소토지 농사와 개인축산)과 집단농업(협동 · 국영농장)의 생산 및 분배 실태, 비료 등 농자재 공급 상황, 주식용 곡물과 부식용 농축수산물 생산량, 식량배급과 시장유통 실태, 식품가공업과 음식업 발전 상황, 식품 수입 및 유통 실태, 식생활 수준 등에 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는 노동 및 인적자본이다. 국영부문 노동력 배치 · 활용 · 통제 실태, 사경제 부문 노동참가 상황, 노동력의 사적인 고용 · 피고용 실태 등은 경제체제 변화의 성격과 수준을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이다. 경제발전 잠재력과 관련해 인적자본의 수준과 구성을 평가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셋째는 재정과 화폐 · 금융이다. 재정 규모와 지출별 구성, 재정수입 확보 경로, 재정관리제도, 통화 및 환율관리, 시장물가와 시장환율, 외화통용, 국영은행 운영, 재정 · 금융제도와 기업관리 간 관계 등을 알아야 북한당국의 경제적 통제 · 관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넷째는 흔히 '돈주'로 불리는 개인사업가(또는 기업가) 계층, 즉 생계형 자영업 수준을 뛰어넘어 사업형 기업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출신성분, 사업방식과 업종, 당국이나 관료들과의 관계, 사업 규모와 재산 축적 상황 등은 사경제 부문의 성격과 향후 발전 잠재력을 규정하는 요인이 된다.

다섯째는 계층간 지역간 경제적 불평등이다. 지난 20여 년 간 진행된 경제체제 및 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가, 종래의 정치적 계층구조와 다른 새로운 경제적 계층구조가 성립하고 있는가, 기존의 지역적 불평등 구조(평양 대 비평양, 도시 대 농촌)가 재편되고 있는가 등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여섯째는 사회보장과 공공 서비스이다. 전통적 사회주의에서 장점으로 내세웠던 사회보장과 공공 서비스 체계가 지금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생활수준과 불평등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주제들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훨씬 풍부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2절에서 보았듯이 이미 여러 UN 산하기구들이 북한 통계당국을 도와 유용한 자료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료 생산 범위가 너무 좁다. 통계 관련 국제협력을 크게 확대해 국민소득과 무역을 비롯한 주요 경제통계를 국제 기준에 따라 작성, 발표토록 해야 한다. 북한 같은 저소득 개발도상국에서는 당국이 생산하는 표준적인 공식통계 외에도 국제기구 등이 개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민생 관련 가계조사,

기업조사, 농업조사 등도 매우 중요하다.[49] 핵 협상이 타결되고 북한의 대외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적 경제 지원, 그리고 북한경제의 국제경제로의 편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통계 관련 국제협력도 그에 따라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자료 확보 가능성은 향후 한반도 정세의 추이에 달려 있다.

더 풍부하고 정확하며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북한경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과 분석기법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북한경제 연구는 개략적 상황 기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적인 경제학 논문처럼 정교하고 세련된 분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북한경제를 조명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도 경제체제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경제발전론, 국제경제학, 화폐금융론, 재정학, 농업경제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의 시각을 동원하면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북한과 비슷한 점을 가졌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 즉 옛 사회주의 나라들이나 저소득 개발도상국과의 비교 연구도 훨씬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북한경제의 개혁 · 개방과 발전, 남북경협, 국제협력 등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비교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기존의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과 협력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립된 규범과 사업체계를 가지고 북한을 상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제도개혁 및 경제개발 경험과 여기서 얻은 교훈은 북한당국에게 소중한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 앞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사회가 북한과 협력을 추진할 때 유용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한경제 분석과 국제비교 연구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9) 홍제환 · 김석진 · 정은미(2018), pp. 21~51 및 160~165.

| 참고문헌 |

- 김규철. “북·중 무연탄 무역 연구: 무연탄 가격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호, pp. 3~23.
- 김규철. “북한주민의 경제적 후생 수준과 추세: 새로운 데이터를 통한 접근.”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7월호, pp. 3~22.
- 김규철. “북한경제의 구조적 단절에 관한 연구.” 이석 편.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7.
- 김병연. “북한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POSRI 경영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포스코경영연구소, 2011, pp. 63~81.
- 김병연.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문성민 외.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서울: 한국은행, 2014.
-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김병연·정승호. 『중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 김석진. “북한 GNI 추계 현황과 과제.” 『북한 GNI 추계방법 개선방안 모색』. 북한대학원대학교 주최 세미나 발표문, 2007. 4. 6.
- 김석진. “통계 재구성의 시사점 분석 2: 북한 대외무역의 구조와 특징.” 이석 외. 『1990~2008년 북한 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 김석진. “북중경협 확대 요인과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월호.
- 김석진.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 동향과 전망.” 『통일경제』, 2013년 겨울호, pp. 18~25.
- 김석진. “제조업 분야 북중무역 분석.”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김석진. “최근 북한 경제실적 관련 주요 쟁점.” 이석기 외. 『북한 경제 쟁점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3.
- 김석진. “북한의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연구 현황과 쟁점.” 통일부-KDI 북한경제포럼 발표문, 2014. 3. 27.
- 김석진. “북한 무역통계: 해설과 평가.” 문성민 외.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서울: 한국은행, 2014.
- 김석진.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 실적 재평가.” 양문수 편.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파주: 한울, 2014.
- 김석진.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김석진. “북한 대외경제 실태와 전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편.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7.
- 김석진. “북한 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남북 통계 협력방안』. 통계청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18. 7. 24.

- 김석진. “북한경제: 제재 영향과 발전전략.” 통일연구원 편.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김양희.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서 본 북한경제 변화 동향』. 신진연구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통일부, 2017.
- 문성민.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소득수준 비교.” 문성민 외.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서울: 한국은행, 2014.
- 문성민·김병연·김석진·김영훈·최지영.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서울: 한국은행, 2014.
- 민준규·정승호.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2014-16호, 서울: 한국은행, 2014.
-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통일연구원), 2011, pp. 213~237.
-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2012, pp. 207~224.
- 심완섭·이석기·이승엽·빙현지·김창모.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기업 변화 실태』. 세종: 산업연구원, 2015.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한울, 2010.
-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서울: 통일교육원, 2013.
-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관련 주요 쟁점.” 이석기 외. 『북한 경제 쟁점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3.
-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년.”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4, pp. 59~94.
- 양문수.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편. 『북한의 금융』. 서울: 오름, 2016.
- 양문수.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조치와 북한경제 평가.”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북한연구학회, 2017, pp. 15~36.
-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26권 2호, 2017, pp. 81~115.
- 양문수. “김정은 시대 시장의 제도화와 국영경제의 변화.” 이석 편.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7.
-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 제20권 제2호, 2016, pp. 45~88.
- 양문수·이석기·이영훈·임강택·조봉현. 『2000년대 북한경제 종합평가』. 서울: 산업연구원, 2012.
- 양운철·장형수.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성장률 추정치 평가.” 세종 정책 브리핑, No. 2017-21. 성남: 세종연구소, 2017.
- 이석. “현 단계 북한경제의 특징과 설명 가설들.” 『KDI 북한경제리뷰』, 2009년 1월호, 2009, pp. 3~26.
- 이석. “2000년대 북한경제와 강성대국의 경제적 의미.” 『KDI 북한경제리뷰』, 2009년 11월호, 2009, pp. 3~34.
- 이석. 『5.24 조치 이후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변화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석. “5.24 조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북한경제의 딜레마.” KDI 포커스 제37호,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이석. 『북한의 사회경제통계 분석과 재구축』.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석 편. 『북한경제의 분야별 현안 분석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이석기·김석진·김계환·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서울: 산업연구원, 2010.
- 이석기·김석진·양문수. 『북한 외화통용 실태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2.
- 이석기·양문수·김석진·이영훈·임강택·조봉현. 『북한 경제 쟁점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3.
-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4.
- 이석기·김창모·빙현지·이승엽. 『북한의 기업』. 서울: 산업연구원, 2014.
- 이석기·곽인옥·김석진·김연호·양문수·이영훈. 『북한의 서비스산업』. 세종: 산업연구원, 2017.
- 이석기·권태진·민병기·양문수·이동현·임강택·정승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세종: 산업연구원, 2018.
- 이석기·변학문·나혜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세종: 산업연구원, 2018.
- 이용준.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제2판)』. 파주: 한울, 2015.
- 이종규. “시장 및 비공식 부문.” 이석 편. 『북한경제의 분야별 현안 분석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이종규.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6.
- 이종규. “북한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 원인과 영향.” 이석 편.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7.
-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임강택.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 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임수호. “김정은 시대의 대외경제: 외화수급을 중심으로.” 『한반도 포커스』, 제41호, 2017년 가을호, pp. 39~45.
- 임수호·양문수·이정균.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철광석)을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2009, pp. 1~48.

- 장형수.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2013년 12월, pp. 165-190.
- 정은이. “북한 시장의 제도화 수준에 관한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제12권 제5호, 2010년 5월호, pp. 14~47.
- 정혁·최창용·최지영.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BOK 경제분석 제2018-13호, 서울: 한국은행, 2018.
- 정형곤·김병연·이석.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조동호. “북한경제의 현황 평가와 미래 전망.” 『KREI 북한농업동향』, 제13권 제1호, 2011, pp. 3~18.
- 최장호·김준영·임소정·최유정.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최장호·임수호·이석기·최유정·임소정.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최지영.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BOK 경제연구 2016-14, 서울: 한국은행, 2016.
- 홍제환.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홍제환·김석진·정은미.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Eberstadt, Nicholas. The North Korean Economy: Between Crisis and Catastroph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007.
- Eberstadt, Nicholas. “North Korea’s ‘Epic Economic Fail’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Asan Report, Seoul: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5.
-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Working Paper 07-7,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Reform from Below: Behavioral and Institutional Change in North Korea,”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73, No. 2 (Feb 2010), pp. 133-152
-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1.
-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Hard Target: Sanctions, Inducements, and the Case of North Kore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7.
- Jung, Seung-Ho. “Economic Growth and Trade of North Korea with China: Cointegration and Granger Causality Test.” 『비교경제연구』 제23권 제2호, 2016, pp. 1-37.
- Kim, Byung-Yeon.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Kim, Byung-Yeon and Min Jung Kim. “The Evolution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9, No. 4 (Nov. 2016), pp. 457-480.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nkov, Andrei. "Is Byungjin Policy Failing? Kim Jong Un's Unannounced Reform and Its Chances of Succes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9, No. 1 (March 2017), pp. 25-45.
- Lankov, Andrei, Peter Ward, Ho-yeol Yoo and Ji-young Kim. "Making Money in the State: North Korea's Pseudo-State Enterprises in the Early 2000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7, No 1 (March 2017), pp. 51-67.
- Mun, Sung Min and Seung Ho Jung. “Dollarization in North Korea: Evidence from a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 21, No. 1 (March 2017) pp. 81-100.
- Noland, Marcus. “Why is North Korea Growing?”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 (blog), Oct. 20, 2015. (https://piie.com/blogs/north-korea-witness- transformation/why-north-korea-growing, 검색일: 2019. 1. 24.)
- Silberstein, Benjamin Katzeff. “Growth and Geography of Markets in North Korea: New Evidence from Satellite Imagery.”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 2015.

1
토론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김병연 (서울대)

김흥규 (아주대)

이정철 (숭실대)

| 토론문 |

북한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치, 핵, 경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1. ‘북한연구’란 무엇인가?

가. ‘북한연구’와 정체성의 정치: ‘북한’(北韓, North Korea)이란?; 정전체제, 분단체제, 국제체제 속에서의 북한; 적, 경쟁자, 친구로서의 북한; ‘연구’(studies)인가 ‘학’(學, discipline)인가?

나. 연구대상으로서의 북한: 비교정치/비교경제의 법칙정립적(nomothetic) 연구; 지역연구의 개별기술적(idiosyncratic) 연구; 국제관계의 행위자로서 북한

다. 북한연구와 방법론적 다원주의: 비교, (미시, 거시) 역사적 · 구조적 방법, 신내재적 접근, 양적 연구, 텍스트적 접근, 참여관찰, 면접조사 등등

라. 자료: 다언어 자료의 탄생; 양적 자료의 생성

마. 이론의 과소생산의 이유?

2. 정치 부문

가.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논쟁에서 실증주의로의 이행이란 역설

나. ‘북한붕괴론’을 둘러싼 논쟁: 냉전의 해체 또는 소련의 붕괴가 예측 가능했고 실제로 가능성이 타진되었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북한붕괴론의 예측이 실패한 이유는, 확증편향/소망사고/자기이익의 재생산 때문

다. 거시적 변화의 미시적 기초를 탐구하는 일상생활연구방법: 사회주의국가의 일상생활연구는 대부분 그 국가의 붕괴 후에 가능(예를 들어, 『대중독재』); 탈북자 면접의 대표성 문제; 미시적 변화와 거시적 변화의 연계를 이론화하는 문제(예를 들어, ANT의 임계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라. ANT: 자연과학 실험실연구의 소산; 세계의 존재론과 인식론의 근본적 전환; anarchy와 hierarchy란 가정을 대체하는 network 이론과의 차별성 고려

마. 북한적 '사회구성'의 이론화: 역사연구의 과소생산

3. 핵연구

가.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 비핵화(denuclearization)=비확산+핵군축+핵억제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비핵화와 비핵지대(nuclear-free zone)의 관계?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한미동맹)의 관계;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핵능력 가운데 핵능력은? 원자력발전은?

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으로 한국의 핵자주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1974년 발효된 한미원자력협정이 한국의 핵자주권을 제약된 것이 아닌가?: 한미동맹의 문제

다. 핵무장 추구의 원인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 스웨덴,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등

라. 어떤 국가는 핵무장을 했고 어떤 국가는 핵무장을 하지 못했는가?: 핵무장의 원인에 대한 재고

마. 북한의 핵무장 시점은?

바. 사회주의국가들의 핵협력의 역사: 1956년 3월 26일 "련합 원자 핵 연구소 설치에 관한 협정"에 조인

사. 비핵화 과정에서 '능력-의지', '의지-의지'의 교환이란 2단계 모델: 핵능력과 평화협정(+핵우산+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보상)의 교환; 북한의 의지의 확약(예를 들어 북한의 몽골과 같은 '비핵지대국가' 선언)

아. 검증의 문제는 '합리성'이란 가정/'의사소통' 채널의 문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 1980년대 중반 소련의 near-automatic nuclear strike force 배치(합리성에 기초한 핵억제 이론의 한계?)

자.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의 불가능성(?)

4. 경제 부문

가. 북한경제연구의 정치화 경향(?): '상호주관성'으로서의 객관성(과대평가와 과소평가의 이유)

나. 북한은 어떤 경제체제인가?

| 토론문 |

북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제학 중심의 토론문

김병연 (서울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이 가장 많이 변화 부문은 경제일 것이다. 시장화가 진전되고 대외 무역이 증가하면서 북한은 '밑으로부터의 시장화'와 '밖으로부터의 무역 압력'이 사회주의에 기초해 있는 경제의 근간을 침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맞추어 경제학 분야에도 북한 시장과 무역에 관한 국내 연구가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북한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추정, 북한의 경제정책, 통일 · 통합의 경제적 효과,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적응, 달러라이제이션, 경제 제재, 외화수급, 북한 통계 등 여러 부문에서 다수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구 분야가 넓어지고 결과물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은 북한 경제 연구자의 수적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은행과 다수의 국책연구기관은 최근 수년 동안 북한 경제 연구자를 새로 충원했다. 그리고 아직 소수이지만 경제학의 다른 전공 분야 연구자들이 북한 경제도 더불어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적 증가가 토론자의 개인적 평가이지만 북한과 관련된 다른 어떤 분야보다 경제 분야에서 연구의 내실이 강화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북한 경제 분야의 연구 성과가 두드러진 또 다른 이유는 상대적으로 비(非)정치적인 경제학자의 연구 성향 때문일 것이다. 경제학자의 렌즈는 비교적 투명하여 좌 · 우에 따라 다른 색으로 덧칠된 렌즈를 끼고 그 시각에서만 북한을 보려는 유혹에 덜 노출된다. 그리고 실증적 검증을 중시하고 검증된 것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 축적하려는 경제학의 연구 방법론도 연구 성과 거양에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의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북한 경제 연구 성과는 크게 미진하다. 여전히 부족한 연구자 수, 데이터의 부족, 경제학과에서 북한 경제 강의 과목이나 전임 교수가 거의 없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더욱이 정치권의 편 가르기와 정책 필요를 위해 단기에 연구 결과를 요구받는 풍토는 북한 경제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초 연구를 저해한다. 비유하자면 한국에 있어서의 북한 경제 연구는 가분수다. 북한 경제 연구에 관한 학술적, 기초적인 연구는 제한적인 반면 정책 연구나 코멘트 수준의 연구 성과가 주를 이룬다.

북한 경제 연구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실증적 엄격성에 기초한 연구 성과가 축적돼야 한다. 아마 인문 ·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와 경제학이 가장 차이나는 부분도 실증적 엄격성일 것이다. 가설 수준의 이야기를 많이 제기하기보다 엄격한 검증을 거쳐 확실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학문 발전에는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신진연구자는 기존 연구를 정리하는 유형의 연구보다 어떤 분야에 깊이 천착하여 독창적이고 확실한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경제 연구의 국제화도 추진해야 할 과제다. 연구 성과가 해외 유수 학술지에 게재되고 해외 유수의 대학출판사에서 출간되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의 북한 경제 연구에도 자극을 줄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북핵 위기 해결과 북한 경제개발 가능성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 시점에서 외국 전문가와 정책결정자가 참고할 수 있는 북한 경제에 관한 영어 논문과 책이 매우 적다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국내 학술지와 저서의 객관적 평가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저서의 경우 대부분 블라인드 리뷰 과정이 없거나 약하다. 국내 학술지의 리뷰 과정도 해외에 비해서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연구 결과물을 평가하다 보면 검색 상단에 나오는 문헌 위주로 인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글의 원저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문적 성과는 낮은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가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개되기 때문에 검색 엔진의 상단에 나올 뿐인데 이를 평가할 역량이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위주로 인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학문적 엄격성을 갖춘 학술지 논문이나 저서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이런 환경에서는 실력 있는 연구자가 길러지기도 어렵다.

북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늘 조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다 정치적 왜곡과 짧은 시간 내 끝내야 하는 정책 수요가 결합되면 성과물은 연구와 정리, 분석과 주장 사이에서 후자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북한 연구가 제대로 된 학문 분야가 될 수 있나'라는 의문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토론문 |

미중 전략경쟁과 북한 비핵화

김흥규 (아주대)

1. 백악관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2월 27-28일 기간 동안 개최된다고 발표. 이 회의는 북미 간에 원칙을 제시한 제1차 정상회담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안들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북미는 이미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원칙에 합의. 이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개연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최상의 결과로서 "북미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이라는 목표에 만족할 개연성도 존재.

3. 여기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중요한 변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의 국내정치임. 우리가 바라는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에는 난관이 많아 낙관에 기초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

- 첫째, 북핵문제가 2020년 미국 대선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서면, 트럼프는 북핵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할 것임.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우리가 바라는 안. 다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나 타협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미국 국내정치 상황은 우리에게 양날의 칼임.

- 둘째, 북한과 우호적인 협상분위기는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ICBM과 같이 미국에 위협을 주는 역량을 제거+북핵 일부 제거하는 선에서 북미 간에 타협하는 방안. 이는 북한이 선호하는 방안
- 셋째,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북핵 문제를 중국을 압박하고 기존 동맹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임.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핵전력 강화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

4. 미 백악관 내에도 북핵 관련 다양한 입장/이해들이 존재. 특히 미중 전략경쟁 상황과 결부하여 보면 보다 복잡한 구도가 만들어 질 수 있음. 현재 트럼프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추진할 가능성은 점차 더 협소해 질 전망이며, 북핵 문제를 어느 수준에서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활용하려 할지도 여전히

- 완전한 북핵 폐기론: 안보 중심의 시각을 지닌 국방부 쪽에서 많이 들리지만, 매티스 국방장관의 퇴진에서 상징하듯이 이들의 입감은 약화 예상
- 미중 경쟁 활용파: 북핵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나, 미중 전략경쟁을 상위의 개념으로 놓고 북핵문제를 활용하려는 볼튼과 같은 전략파들의 목소리.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이격시키거나 미국 측 협력대상으로 전환을 희망
- 핵 비확산론자: 이들은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타협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핵비확산을 담당하는 실무 국무부 그룹에서 많이 들리며, 수에 있어서 다수일 수 있음
- 트럼프: 국내정치적 이해가 중요하고, 입장은 가변성을 특징으로 함
- 反트럼프: 민주당이나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트럼프의 북핵 협상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 불분명. 단, 그 유혹은 점차 증대될 것임

5. 한국의 대응 방향

가. 국가정체성의 인식: 중견국 ⇒ 중추적 중견국을 지향
※ 중견국은 국익의 실현보다는 Risk 관리가 더 중요
※ 중견국의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의 최소화가 되어야
나. 한국의 국가전략은? 대항적 공존 전략 추진. 북한에 대해서는 Retaliation Maximization, Balance of Terror에 기초한 공존 전략 추진
다.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Minimum Deterrence Strategy 추구

6. 우선, 우리의 북핵 폐기 관련 로드맵을 완성하여 북미중을 적극 설득하는 것임

가. 북한의 핵 폐기 순응 수준에 따라, 국제 대북 제재레짐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북한에 제공할 경제적 인센티브는 분명히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여야 함. 충분한 당근 없는 채찍은 반발만 강화시키고 북한의 순응 가능성을 약화시킴.
나.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여, 트럼프가 의회의 반대를 넘어서게, 그리고 대선에 활용 가능하도록 성과를 가져가게 해야 함. 현재의 상징적인 폐기조치에서 보다 실질적인 폐기조치 단계에 들어서도록 하는 핵 폐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영변 등 주요 핵시설의 사찰을 과감히 수용하도록 해야 함. 미 대선 이후 미국의 정책은 예측 불가. 남북한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음.

7. 두 번째, 북핵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포석을 까는 외교를 해야 함

가. 북미 간에 타협으로 북한의 과거 핵 역량을 일부 보유하는 것으로 귀결될 개연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함.
나. 이는 한반도 안정화의 희망을 넘어 역내 불안정의 도미노 현상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충분함.
다. 역내 핵확산은 물론이고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압력도 가능하고 "양안 분쟁의 급속한 악화나 대만의 북한화" 가능성도 존재. 이 과정은 한국에게는 상당한 외교 · 안보 ·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것임.

8. 세 번째, 북한과 "대항적 공존 전략"을 추진. 국방개혁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북핵 위협에 대한 대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속 추진해야 함

가. 남북 대화시기를 이유로 이 개혁방향을 흔들지 말아야 함.

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힘에 입각한 평화,"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평화를 통한 비핵화" 전략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이 정부의 신뢰도를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

다. 북핵 대비(5~10년의 여유) vs. 주변국 대비(15~20년의 여유) 비중을 감안한 국방 개혁 추진

라. 역설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방향은 남북관계 안정화와 북핵 폐기에도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임.

| 토론문 |

북한 연구 방법론

이정철 (숭실대)

1. 북한 연구의 양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 제기

가. 북한 연구에 양적 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으나 실제 가능하다는 견해는 소수였음

나. 그 이유는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가능

1) 북한 연구자 중심의 질적 연구가 내재적 독해에 기반한 오랜 경험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입자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되기도 했고 기타 전문가들의 비교 연구나 검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답이 필요했기 때문임

2) 다른 하나는 지역 연구로서 북한 연구가 정책적 지향성을 가져야 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양적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했음

2. 양적 연구의 유형과 대안 그리고 한계

가. 탈북자 조사

1) 탈북자 조사의 경우 북한 주민의 원의식 추정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됨탈북자의 의식을 북한 주민의 의식으로 간주하는 수많은 조사는 양적 연구의 기본을 무시하는 사이비 의식 조사를 낳았고, 이데올로기적 반북 의식 양산의 표본이 되었음

2) 이 점에서 의식조사와 실태조사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탈북자 조사는 탈북자의 현지 적응에 관한 연구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나. 정책 연구

1) 내재적 독해 중심의 노동신문 연구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는 오래되었고 북한 전문가들의 노동신문 운운에 대한 일반 전문가들(특히 국제정치나 지역정치 전문가)의 거부감은 오랜 벽이었음

2) 이 점에서 노동신문 텍스트 연구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고 텍스트 마이닝이 대표적인 방법이었음

3) 기타 유사 연구로 소위 '내용분석' 방법이 제기되었는 바 이는 특정 단어군이 최소 몇 번 이상 나온 기사가 1년에 몇 번 나타나는 가 등의 방법으로 정책 방향성을 검증하는 기법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변형 방법으로 볼 수 있음

4) 소위 〈정세지수〉는 이같은 방법을 위해 북한 체제 지수를 수립하기 위해 만든 것이나 무리한 양적 조사를 도입하는 부분 등은 한계점이었음.

* 내재적 연구에 대한 과잉 경계심이 낳은 역편향의 측면이 있음

다. 전문가 조사의 경우 델파이 조사는 유의미한 방법임

1) 전문가 조사를 반드시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호 검증해서 수정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델파이 조사를 권고함

2) 특히 각 국별 전문가들을 잘 선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라. 북한 통계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1) 그동안의 편향적 연구에 기반한 통계들의 경우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2) 통계는 추세 분석으로는 유용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나 이 점 또한 2016년 2017년 북한 경제 통계가 혼선을 초래

3) 각 분야별 방법론 재검토가 필요함

마. 여전히 북한 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2
발표

사회 · 인권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문화 · 예술
권헌익 (서울대/케임브리지대)

과학 · 교육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북한 사회 인권 연구 동향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1. 북한사회연구의 배경

가. 70여년 동안 지속된 분단체제하에서 북한연구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왔음.

1) 전쟁을 경험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연구 대상
2)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면서 연구 대상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가의 정치적 입장에 북한 연구가 좌우된 경향
3) 결과적으로 냉전기의 북한연구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

나. 다시 말하자면 냉전시기의 북한연구는 '북한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 사실판단보다는 진위판단을 지향하는 '목적론'(teleology)적 연구가 될 가능성이 높았음.

1) 진위판단을 지향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사실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드러나는 사실들에 대한 판단에서도 논리보다는 정치적 잣대가 결정력을 갖는 이상 학문적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

2) 따라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혹은 과학적)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냉전구조의 해체,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이 선행조건

다. 냉전적 환경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시기의 북한연구의 또 다른 경향은 북한연구와 북한정치연구가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임.

1) 분단을 이념 차원에서 인식하였고, 북한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북한연구의 주된 동기가 되는 한, 북한 정치체제나 이념이 북한연구의 핵심
2) 북한연구에서 주체사상이나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연구, 그리고대남전략 등이 주류를 차지

라. 북한이 하나의 국가인 동시에 완결된 하나의 사회체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학 일변도의 북한연구는 그 자체로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약하는 요인이었음.

1) '우리의 소원은 통일'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이라는 공식적인 남쪽의 통일방안을 위해서도북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이해가 불가피
2)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

마. 냉전적 사고의 지속과 이념비판적인 연구가 중심이 되었던 정치적 상황 외에도 북한사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였음.

1) 북한사회에 대한 경험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 사회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사회현실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움
2) 사회학은 방법론적으로 엄격한 기준 지향: 과학적 엄밀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이론적 바탕을 중시하는 학문적 특성상, 자료의 부족은 북한을 사회학적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한 배경
3) 냉전시기에 서구의 사회주의 연구도 정치학이 주도: 참고할 만한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체제의 대한 연구 부족
4) 한국 사회학계의 북한 혹은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정치학과를 운용하는 대학에서는 북한정치 전공연구자를 교수진에 포함되고 통일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학과에 북한을 전공하는 교수가 있는 학교는 부재

바. 세계적인 냉전질서가 와해되고, 남한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1990년대 이래 북한 사회연구도 본격화되었는데 이외에도 다음의 몇 가지 요인도 북한 사회연구 본격화와 관련이 있음.

1) 북한 연구가 정치학 일변도를 넘어서면서 경제 등으로 연구 분야의 폭이 확장: 통일 및 북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설립과 북한전공 학과의 개설
2) 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북한의 사회문화체제에 대한 관심도 증대
3) 독일통일 과정에서 사회문화통합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
4) 탈냉전 이후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생산과 확산
5) 1980년대 민주화세대가 연구자로 전향하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 고조
6) 민주화와 동반된 시민사회의 발전은 정보 자료에 대한 국가 독점을 약화: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북한 원자료의 국내유입
7)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의 증가로 북한 사회 관련 정보의 확대
8)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북한을 경험한 외국인의 정보 등이 유입되고, 북중 접경지역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간접 자료 수집 가능
9) 여전히 북한연구에서 사회학적 연구나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북한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나 북한연구의 학문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임.

2. 북한사회연구 동향

가. 그 이전에도 북한 사회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북한사회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음. [1)]

1) 1975년 북한연구소의『북한사회론』이 사회학자들이 참여한 본격적인 북한사회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2)] 책을 출간한 주체가 정부이고 자료도 정부에서 제공하였다는 한계
2) 이후 도흥렬, 이온죽, 이변혁, 황성모 등이 북한연구에 대한 사회적적 관심이나 방법 도입을 주장하였고, 이효재와 박노영 등은 분단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북한사회 문제를 천착

나. 1990년 강정구가 편집한 을유문화사의 「북한의 사회」가 북한사회연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1) 냉전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부분이 중심이 되는 북한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2) 기존의 사회학 개론의 범주를 수용한 최초의 개론서[3)]

다. 1990년대 부터는 북한사회문화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북한연구학회 20주년을 맞아 그 동안 북한연구학회보에 실린 북한사회관련 논문 114편을 분석한 김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4)]

1) 북한 문학, 영화, 미디어 등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 문학이나 기타 미디어의 형상, 원형, 재현 등의 주제는 33편
2) (탈북)북한 여성 혹은 여성주의적으로 북한 사회문화를 접근한 연구가 16편
3) 북한의 교육 체계 혹은 통일 교육 관련 연구는 14편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나 이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의 수는 11편
5) 나머지 논문은 큰 맥락에서는 북한사회와 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었고, 남북한의 통합이나 통일에 관한 논문도 지속적으로 게재

라. 한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서 2000년 이후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사회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임.

〈표 1〉 2000년~2018년 북한사회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연도	제목	저자	분야
2001	북한 농촌사회의 사회심리학적 이해 : 식량난의 파급효과	도흥렬	농업
2002	북한의 농업 위기와 식량 문제 : 거시 역사적 접근	김철규	농업
2002	북한 농업구조의 변화 전망 : 가족농 부활의 신화와 현실	김홍주	농업
2004	북한이탈 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엄태완 이기영	이탈주민
2004	북한 교회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성격 : 지배체제 및 종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최명국	종교
2004	분단국과 사회주의 미술 – 구(舊) 동독과 북한의 미술을 중심으로	김재원	문화
2005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 청진 · 신의주 · 혜산 지역을 중심으로	장세훈	도시
2006	북한의 항일무장투쟁 전통과 민족 만들기 : 민족주의와 권력, 담론, 주체	강진웅	민족
2006	전환기 북한 도시화의 추이와 전망 : 지방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장세훈	도시
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 :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이금순	이탈주민
2008	농민의 저항과 북한 농업정책의 변화 : 1960년대와 1990년대의 유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은미	농업
2009	경계인 이론을 통한 남한 정착 북한이탈주민 이해에 관한 연구	윤보영	이탈주민
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 대처과정의 긍정적 힘에 대한 질적 연구	엄태완	이탈주민
2009	북한의 정치사회화 및 수령관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 : 1990년대 경제위기 전후 북한이탈청소년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박정란 강동완	사회화

1) 1990년대까지 북한사회연구에 대해서는 도흥렬, "한국사회학의 북한사회연구,"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995) 참조.
2) 황성모, 고용복, 김채윤, 임희섭, 김대환, 최홍기, 도흥렬, 이장현 등 대표적인 사회학자들이 참여.
3) 이 책 1부는 구조와 변동 부분에 북한사회구조의 변혁, 북한의 계급, 북한의 농촌 등이 포함되어 있고, 2부는 민중생활에 북한의 교육, 북한의 일상생활, 북한의 보건의료, 북한의 민속, 북한의 종교생활이 포함되어 있음.
4) 김성경, "학회 20년, 북한사회 연구의 쟁점과 도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6) 참조.

2009	북한의 체제 생존력과 농촌의 역할	정은미	농업
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이희영	이탈주민
2010	북한의 국가 권력에 대한 미시적 접근 : 호전적 민족주의와 주민들의 삶	강진웅	권력
2010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 전망 : 북한 내부요인과 동북아 공간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임형백	공간
2010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추적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홍순혜 이숙영 김선화	이탈주민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안권순	이탈주민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염유식 김여진	이탈주민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	정용상	이탈주민
2011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 변화	윤선희	한류
2011	북한 사회통제의 특성과 변화	배영해	통제
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겨레	이탈주민
2011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이현경	경제
2011	북한이탈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적 가치 수용과 삶의 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곽정래	이탈주민
201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패러다임 전환의 요청과 인문-융합적 패러다임	김선희	이탈주민
2011	북한의 사회교육에 관한 연구	박찬석	교육
2011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 텔레비전 시청 행위와 사회 적응	강태영 황유선 강경미	이탈주민
2011	북한체제에서 계획과 '사회적 종합'(1953~69년)	윤철기	체제
2011	북한의 사회통제력과 산림황폐화	임재학	통제
2011	전쟁사회와 북한의 냉전 인식 : 신천박물관을 통한 계급교양	한성훈	교양
2011	70년대 북한 공연예술 변혁의 사회정치사적 고찰	이춘길	예술
2011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식생활정책 :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김양희	일상
2012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 2008~2011	김병로	체제
2012	북한이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윤인진	이탈주민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임정빈	이탈주민
2012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박경숙	여성
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이희영	이탈주민

2012	북한 인민보안부의 사회통제에 대한 연구	최응렬 이규하	통제
2012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권오윤 정성훈	시장화
201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김현경	이탈주민
2012	북한 이탈주민의 시민교육 내용과 문제점	김도태	이탈주민
2012	북한의 경찰작용법에 대한 일반적 고찰 : 사회안전단속법과 인민보안단속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박창석	통제
2012	사회주의체제 형성기 북한 교원의 충원과 관리 : 교원양성기관 교원을 중심으로	박혜숙	교육
2012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실무자의 직무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김연희 김유경	이탈주민
2012	일에 대한 목회신학적 방법론 : 북한 사회 여성 차별에 대하여 –	박중수	여성
2013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대중동원운동 비교연구 : 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	이문청 서정민	사회운동
2013	동유럽 공산체제붕괴에 비추어 본 북한붕괴론 : '시민사회'개념을 중심으로	박정원	체제
2013	사회보장기본권 확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선 방안	박현식	이탈주민
2013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멤버십(Membership)에 관한 비교연구 : 충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미영	이탈주민
2013	북한의 출산력 변천과 사회적 요인	박경숙	여성
2013	북한 사회의 기독교 인식 변화 분석	고영은	종교
2013	6 · 25전쟁 시기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치동기와 특징에 관한 연구	이신용	기타
2013	연변 지역의 귀국화교사회와 북한화교사회의 상관관계 및 역사성	이옥련	기타
2014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마음의 통합	이우영	지원
201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김영일 전혜연 강선주 기지혜 권지성	이탈주민
2014	국가사회주의 시민사회론 재고 :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전망에 주는 함축	한승완	체제
2014	북한 사회주의 이행의 근대성과 일상의 변동 : 1960년대 지역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한성훈	체제

2014	'단숨에' '마식령속도'로 건설한 '사회주의 문명국' : 김정은 체제의 북한문학 담론 비판	김성수	체제
2014	북한이탈주민의 멘토링 연결망 특성, 멘토링 기능, 그리고 경제적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연구	신효진	이탈주민
2014	용서 교육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진민진, 현명호	이탈주민
2014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김린 박세훈 박경자	이탈주민
2014	북한의 정보화 실태 및 파급영향 : 한류韓流 및 외부정보 유입과 북한사회 변화를 중심으로	강동완	한류
2014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실질 소득격차 분석	정은찬 김재현	여성
2015	한국전쟁 전후 북한사회계층의 변화 연구(1945-1961)	정일영	계층
2015	탈북민 의식을 통해 본 북한 정치사회화의 특징 : 남북한 주민들의 정치 통합을 위한 과제	유호열	이탈주민
2015	북한 및 제3국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과 한국 사회의 문화 적응 :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현실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오원환	한류
2015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 여성을 중심으로	김기창	이탈주민
2015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이승윤 황은주 김유휘	여성
2015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 : 국제기구 참여와 외교정책 선호의 변화, 1991-2005	김상기 김근식	사회화
2015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 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계민	이탈주민
2015	사회주의가 북한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에 미친 영향	정진아	노동
2015	북한의 사회생활 호칭 · 지칭어 연구	양수경	언어
2015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의 특징	송강직	법
2015	북한 기록영화의 통사(通史)적 접근 : 정치 ·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김승	영화
2015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으로 본 북한사회 내 정보 이동성과 커뮤니케이션 구조 분화	곽정래	행위자
2015	북한이탈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이 남한사회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경숙 신원우	이탈주민
2015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두려움 연구	성용은, 윤병훈	이탈주민
2015	북한사회의 합심(合心)주의 마음문화	유승무 신종화 박수호	문화
2015	북한 사회의 갈등관리방안 사례연구 : 최근 북한영화에 나타난 제3자 개입을 중심으로	이영애	영화

2015	중국 내외자기업법제의 변화와 북한의 추동 : 양국 내외자기업법제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김병기 양병찬	경제
2015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과 사회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문승일 송영민 이광옥	이탈주민
2015	북한이탈 사회복지학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최미혜	이탈주민
2016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 '마음의 지질학' 시론	이우영	통합
2016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양계민 이우영	이탈주민
2016	탈북인 재현 프로그램에 교차하는 시선과 마음 : 남한/탈북 주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권금상 이우영	이탈주민
2016	북한 주민의 일상과 방법으로서의 마음 : 생활총화와 검열의 상황에서의 공모하는 마음	김성경	일상
2016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경험 연구 : 생존과 일상의 경계를 넘어	엄태완	이탈주민
2016	북한의 체제변동과 단계별 사회정책의 특성에 관한 소고	오정수	사회정책
2016	여성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이 경험한 사회복지실습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	배진형 박미현	이탈주민
2016	규범에 경합하는 북한여성들의 성적실천 : 고난의 행군 이후 일상에서의 성경험을 중심으로	권금상	여성
2016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정진아	농업
2016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황정미	이탈주민
2016	북한의 집단정체성과 한반도 미래세대 사회통합정체성	이현주	통합
2016	통일준비차원에서 북한주민의 법 인식 교정을 위한 지향점 도출 연구 : 사회주의법 및 북한법의 배경을 중심으로	정광진	법
2016	조선족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통일과정에서의 역할	김주삼	이탈주민
2016	북한 및 동북아국가 인식과 남북통일 인식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김상돈 서운석	통일인식
2016	2000년 이후 북한 사회복지법제 동향	정유석 이철수	법
2016	사회권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의미 : 북한 관련 시사점	도경옥	법
2016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담론과 근대성의 함의	한재헌	체제
2016	1997-201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동 분석 :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중심으로	김미혜 육홍숙 정명희	이탈주민
2016	외국인 이주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포섭과 배제 : 민족주의, 문명우월주의, 선진국 담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김정규	이탈주민
2017	북한주민과 중국주민의 마음에 대한 비교연구 : 물질주의와 집단-개인주의	양문수 이우영	통합
2017	사회적 신뢰형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공연예술단체의 활동 분석	신혜선	이탈주민

2017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박현식 이옥진	이탈주민
2017	재일동포사회를 통해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방안 연구 :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전호성 황혜경	이탈주민
2017	북한 주민에 대한 민주 시민교육의 당위성 : 사회 철학적 사유	정재각	통합
2017	최근 북한의 인구구조 평가 : 유엔인구기금의 2014년 북한 사회경제, 인구, 건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최지영	인구
2017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 사회 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한규	관광
2017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 상실에 따른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	김대웅 이순형	이탈주민
2017	북한주민의 기본, 소득, 의료보장 욕구 : 중국내 북한전문가의 시각을 원용하여	정병화 모춘흥 조병식	소득
2017	북한 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 : 주체사상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상의 미망으로	박소연	이탈주민
2017	북한에서의 학교체육을 통한 학생의 몸의 통제 : 국가재건 시기(1953~1960년)를 중심으로	조진수	체육
2017	삼국(중국, 북한, 한국)이 만나고 연결되는 단둥 : 국경도시이자 해항도시의 관점으로	강주원	지역
201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차별 경험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수연 김정미	이탈주민
2018	북한사회 내 한류콘텐츠를 통한 남한사회 인식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지언 최현주	한류
201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 방안 : 보건 · 의료 분야 실태와 과제를 중심으로	강동완	이탈주민
2018	북한도교의 전승과 재구성	김윤경	종교
2018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관계의 성격 : 북한 언론문화의 배경에 관한 일고찰	이윤복	언론
2018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진화과정에 대한 고찰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까지	박후건	체제
2018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우영 안경모	통제
2018	생존의 정치 :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김화순	노동자
2018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 호혜성과 환대의 가능성	김성경	이탈주민
2018	국제사회 주거권 논의와 연계한 북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 인도적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최천운 황수환 문경연	주거
2000	북한사회의 종교성 :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김병로	종교

마. 북한사회관련 논문은 총 126편이었는데, 북한이탈주민 관련 논문이 48편으로 가장 많았고, 변화여부를 포함한 북한체제 논문이 8편 그리고 농촌(농업) 관련 논문과 여성관련 논문이 6편으로 뒤를 잇고 있었음.

1) 2006년 이후부터 이탈주민 관련 논문이 많은 것은 남한의 보수정권 수립과 남북관계 악화에서 영향

바. 학술지 발표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연간 18년에 126편이라고 한다면 연 평균 7편 정도인데, 절대 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체제의 복합성과 다층성을 고려한다면 연구 분야도 다양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1) 사회연구에 중요한 분야인 계층이나 계급연구나 종교 그리고 지역을 포함한 공간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
2) 체제나 구조에 대한 연구에 비해 주민의식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부족하며 지역과 지방에 대한 연구도 희소
3) 이탈주민 연구는 엄격한 의미에서 북한 연구라기보다는 남한 연구

사. 북한사회연구가 양적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질적 성장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1) 사회과학적 이론의 접목: 박경숙,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사회와 이론(21); 2012; 김진환, "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 이론과 가능성", 북한학연구 14/1 (2018);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2009]
2) 미시적 영역과 일상부분에 대한 관심 확대: 이우영 외, 『북한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2008); 고유환 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2010); 박순성 외,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2013);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 잇기: 남북의 접촉지대』 (2016)
3) 지역 연구: 최완규 외, 『북한의 도시 형성과 발전』(2004) 『북한도시의 위기와 변화』(2006) 『북한의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 (2007); 고유환 외, 『함흥

과 평성: 공간 · 일상 · 정치의 도시사』(2014); 조정아 · 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 북한 주민의 삶과 공간』(2017)

4) 새로운 연구 영역(세대, 성, 노동, 네트워크 등): 조정아,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2010); 김성경 외』, 『북한 청년들은 새세대인가』(2015); 김화순, "생존의 정치 :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평화연구』/26(1), (2018); 이호규 · 곽정래, "북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조와 정보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북한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정보 이용의 사사화(私事化)," 『언론과학연구』 Vol.13 No.4 (2013).

5)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 김일환 · 이도길 · 강진웅, "북한 스케치 : 2000년대 신문 빅 데이터에 표상된 북한의 모습," 『현대북한연구』/20(2), (2017), 강동완 · 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조사 :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Vol.39 No.2, [2014]; 김경민 · 정은미 · 장용석 · 정근식, 『북한사회변동 2016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북한사회변동』(2017). 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2013), 강민정, "김정은 시대 북한 TV의 '청년' 형상화와 정치적 함의

6) 김정은 집권 이후 조선중앙TV 서사물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3(1), (2017); 정은이,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Vol.19 No.1, (2012)

아. 북한 사회연구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도 갖고 있음.

1) 북한사회 관련 연구자들의 부족
2) 사회학을 포함한 기존 사회과학계에서 북한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3)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제한 지속
4) 북한 지역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 조사 제한

3. 북한인권연구 동향

가. 한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서 2000년 이후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인권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2>임.

〈표 2〉 2000년~2018년 북한인권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연도	제목	저자	분야
2002	북한형법과 인권	최석윤	형법
2002	탈북여성 인권보호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대안 모색	홍규덕	탈북
2003	북한의 인권실태와 우리의 대응	김강녕 최이조	실태
2003	북한체제의 변화와 인권문제에 관한 고찰	김경호	실태
2004	북한인권과 캐나다의 인권외교	신율	외교
2005	북한 인권문제의 기본인식과 실체적 대응	정경환	대응
2005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	김인혁	탈북
2005	북한 인권 논의의 현황과 전망	김원식	논의
2005	헬싱키 프로세스와 미국의 북한인권법	金民瑞	국제
2005	북한인권의 현실성과 문제점	우정	실태
2005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정천구	국제
2005	유럽연합의 對 미얀마 인권외교정책과 북한인권에 관한 그 함의	오영달	국제
2005	북한 인권문제의 기본인식과 실체적 대응	정경환	대응
2005	북한과 중국의 미국식 인권개념에 대한 입장	이상수	국제
2005	북한국적인의 사법관계 적용법에 관한 연구	유하영	대응
2006	북한 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우승지	쟁점
2006	북한여성의 인권 : 실태와 요인	심영희	여성
2006	미국의 대 북한 인권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라틴아메리카 사례와의 비교	이상환	국제
2006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의 원용방안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 운영을 중심으로	윤여상 제성호	독일

2006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 북한인권법과 민주주의증진법을 중심으로	김수암	국제
2006	북한인권법 제정의 전략적 함의 : 북한 주민 이탈의 pull factor 및 push factor의 분석	이근	탈북
2006	북한인권연구에서 내재적 시각의 의의와 한계	서보혁	논의
2006	북한 인권 문제와 참여 정부의 역할	김충렬	대응
2006	북한인권운동과 우리의 성찰	윤여상	운동
2006	탈북자의 인권침해실태와 보호방안	김강녕	탈북
2006	탈북자 보호와 고문방지협약	이규창	탈북
2007	국제사회 인권합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비판적 평가	이원웅	국제
2007	국제인권에 비추어본 북한의 인권	홍성필	국제
200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재외 탈북자를 중심으로	박종문	탈북
2007	햇볕정책과 북한의 인권	김동한 윤명석	논의
200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북한 인권	김부찬 오승진	국제
2007	상호합법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북한 인권 문제 : 북한 인권에 대한 법정책의 방향	양천수	논의
2007	헬싱키 프로세스의 대북유용성 : 의사결정구조와 이행감독절차를 중심으로	金民瑞	국제
2008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 외부 압력에 대한 내부 변화의 한계	이동윤 백종은	인식
2008	북한 여성의 인권과 연구방법론적 모색 :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과 가능성	이희영	여성
2009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 '북한 인권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철학적 토대의 모색과 관련하여	장은주	논의
2009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경환	논의
2009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에서 인권정책의 의미와 역할	이선필	국제
2009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북한 개정 형사소송법 (2004년)	하태훈	실태
2009	북한의 시민적 권리의 침해와 국제법적 평가에 관한 연구	박선욱	실태
2009	중국내 탈북자 인권관련 비정부기구 활동의 효율성 평가	김욱성	국제
2010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의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북한인권개선연구	이유진	국제
2010	북한 공진화전략 연구 : 인권	김수암	대응
2011	북한인권법의 현실과 개선방향	박광득	대응
2011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쟁점과 해법	이정우	논의

2011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무철	인식
201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양순창	국제
2011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바라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허만호	실태
2011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본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 : "나선형 5단계론"의 관점에서	허만호	국제
2011	동독주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에 대한 정치적 갈등사례 비교와 시사점	이건묵	독일
2011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의 인식과 동향	황기식 김현정	국제
2011	국내적 인권과 국제적 인권? : 인권 개념의 이중성에 대한 소고	황준식	국제
2011	전체주의와 강제수용소	정천구	실태
2011	탈북여성의 이성 관계를 통해본 인권침해 구조와 대응 : 탈북 및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진	여성
2011	세습과정에서 본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변화 연구	양정훈	인식
2011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중심으로	임재성	운동
2011	북한의 강제수용소의 현실과 개선방향	박광득	실태
2011	북한의 강제수용소와 독일이 주는 교훈	장공자	실태
2012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시각 비교 연구	박광득	논의
2012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갈등 : '세 세대 인권' 개념을 중심으로	홍익표	국제
2012	인권의 국제정치와 북한 인권 문제 : 남북한 관계에 주는 함의	조경근	국제
2012	북한인권문제의 구조적 성격과 개선전략에 연구	정경환	대응
2012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경환 신왕철	논의
2012	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 :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	이무철	실태
2012	나선형 5단계론을 통해서 본 몽골의 정치변동과 인권 : 북한에 대한 준거	허만호	국제
2012	북한 내 공적(公的) · 사적(私的) 인권담론 분석	김석향	인식
2013	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서보혁	국제
2013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박광득	대응
2013	새로운 환경에 따른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탈북자의 난민성에 대한 고찰	한희원	탈북
201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경환	국제
2013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에 관한 연구	정경환 신왕철	논의

2013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한 북한의 민주주의론 연구	방인혁 손호철	논의
2013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 : 인간안보적 해결방법의 모색을 중심으로	김용민	탈북
2014	'보편적' 인권의 역사와 북한 인권 문제	정영철 손호철	논의
2014	북한인권 문제의 새로운 접근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의 인권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백범석 김유리	국제
2014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민경배	인식
2014	규범확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EU의 대북한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박성은	국제
2014	북한인권의 실상과 북한인권기록소의 운용실태 및 과제	임순희	실태
2014	문학인 북한 인권 선언 초안	방민호	대응
2014	북한의 노인복지 법제 분석 : '년로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박정원 장창수	실태
2014	북한의 범죄 유형과 실태에 관한 고찰 :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호 김용호	실태
2014	북한 식량권의 연구동향 및 과제	김양희	실태
2014	냉전 정치와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	정병호	탈북
2015	분단체제와 인권문제 : 북한인권 논의의 재설정	서보혁	논의
2015	북한인권문제의 인도주의 개입에 관한 연구 : 개입 유형별 평가와 한국의 역할과 과제	박광득	논의
201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 대북 지원 NGO와 북한 인권 NGO를 중심으로	김성한 문경연	대응
2015	국제인권레짐과 인권의 국제정치 : 유엔 2014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중심으로	조경근	국제
2015	북한 인권문제와 보호책임(R2P)	김부찬	실태
2015	북한인권법과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접근	차동욱	대응
2015	북한인권문제와 민족통일의 상관성 연구	박광득	논의
2015	대북한 산림탄소상쇄 협상 : 통제와 인권의 관점에서	허만호 엄정섭 김종달 김미란	실태
2015	인권의 정치의 관점에서 본 분단과 통일	최원	논의
2015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박선기	국제
2015	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 유럽사법재판소 세퍼드 판결의 국제인권법적 · 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박경규	국제
2016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본 북한 형사소송법의 반인권적 성격	김태헌	국제
2016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관한 소고	윤철홍	대응

2016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체제 : 보편과 특수, 가치와 현실의 결합	박명림	논의
2016	인권 패러다임 이론과 북한 인권 문제	조효제	논의
2016	1980년 5월 광주, 그리고 북한 : '북한 개입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희송	기타
2016	국제 인권장치와 비극의 서사 : 탈북 난민들의 독일 이주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희영	탈북
2016	남북한 정치체제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 : 칸트의 공화주의적 평화론의 시각을 중심으로	오영달	논의
2016	북한 지역내 인도에 반한 죄의 법률적 처리에 관한 연구	홍성필	실태
2016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 :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김웅기	탈북
2016	북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내용과 특징	서보혁	실태
2016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하태영	실태
2016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내적 이행	이휘진	국제
2016	사회권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의미 : 북한 관련 시사점	도경옥	국제
2017	북한인권침해 가해자의 형사책임규명	백범석 이윤제	실태
20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장복희	탈북
2017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 : 북한 인권침해사례 수집 · 기록 기구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이보드레	대응
2017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의 당위성 고찰	서보혁 정상우 김윤나	탈북
2017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전수미	대응
2017	북한인권문제와 보수이념	정경환	논의
2017	유엔체제 '보호책임(RtoP)'의 제도화 특성과 북한인권 문제의 분석적 함의	송기돈	국제
2017	국제형사재판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체제불법 관련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검토	홍진영	국제
2018	전후 이승만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반공주의, 1953~1959	도지인	논의
2018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송인호	대응
2018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제언 : 인권의 보편성의 측면에서	조만준	대응
2018	국제사회 주거권 논의와 연계한 북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 인도적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최천운 황수환 문경연	국제
2018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관계의 성격 : 북한 언론문화의 배경에 관한 일고찰	이윤복	언론

2018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진화과정에 대한 고찰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까지	박후건	체제
2018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우영 안경모	통제
2018	생존의 정치 :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김화순	노동자
2018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 호혜성과 환대의 가능성	김성경	이탈주민
2018	국제사회 주거권 논의와 연계한 북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 인도적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최천운 황수환 문경연	주거
2000	북한사회의 종교성 :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김병로	종교

※ '논의'는 남한사회의 북한인권관련 논의 '인식'은 북한의 인권관련 인식임.

나. 북한 인권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은 총 119편이었는데, 이 가운데 34편이 국제적 차원의 북한 인권논의, 북한인권 실태가 19편, 21편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적 논의, 16편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13편이 탈북자 인권 관련 주제였음.

다.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관련 연구도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 인권을 보는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음.

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비판의 관점을 제시: 북한인권 실태를 고발하여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추구하고 정권 타도를 지향
2)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보: 북한인권이 과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괴고 있으며,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결 지향
3)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도주의적 원칙을 고수: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주목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경계

라. 북한 인권 연구는 학문적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음.

1) 학술적 연구대상인 동시에 인권개선이라는 실천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나 한국사회 내부의 정략적 입장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
2) 북한인권 관련 연구의 많은 부분에서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객관성이나 중립성의 문제
3) 국제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연관
4) 정치적 인권에 집중되는 반면 경제사회적 권리부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
5) 북한인권문제를 고정적으로 보는 반면 인권 실태의 변화에 대한 논의 부족
6) 북한 실태에 대한 다층적 차원의 자료 축적

마. 북한인권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민하여야 할 것임.

1) 북한체제차원이 아닌 사회구성원 차원의 북한 인권 문제 접근
2) 이념 편향적인 연구 지양
3) 특수주의가 아닌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 연구 지향
4) 역사주의적 접근, 비교주의적 접근 등 새로운 방법론의 개척 및 적용

북한 문화 · 예술의 현황

권헌익 (서울대/캐임브리지대)

1.

북한의 문화 · 예술은 정치와 분리해서 논하기 어렵다. 초기 국가 형성기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문화예술 활동은 사회주의 혁명예술론에 근거하여 예술의 심미주의적 측면보다는 예술의 정치적 기능에 천착해왔다. 북한에서 예술은 당과 인민 혹은 수령과 인민의 관계에서 당이 지향하는 목적에 대중의 마음과 그들의 노동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정의된다. 예술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정치적 존재로서의 북한 예술은 심미주의적 예술의 부정, 즉 이 예술의 부르주아적이고 계급적인 기반에 대한 의식적이고 전투적인 비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오늘날에도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예술의 이러한 특정한 존재 입지는 북한 문화 · 예술이해에서 일정한 분석적인 유의를 요한다. 이는 다름아니라 (말하자면 부르주아 혁명의 계승자인 심미주의적 예술이론에 익숙한) 자유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예술 개념은 이러한 예술 인식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는 혁명적 예술을 조명하는데 있어 한계를 갖는다. 물론 이 지적이 심미적 예술 역시 정치적 측면이 분명 있을 수 있고, 혁명적 예술 또한 내적으로 미학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북한문화예술연구에서 예술 개념의 현대사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분석자에게 익숙한 예술 개념을 분석의 대상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피하는 것은 중요하다.

북한의 예술은 그 기본이 정치이지만, 예술의 정치성 내지 예술의 정치적 입지는 시

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특히 주목되는 시기가 1970년대 초반인데, 이 시기에 미·중 데탕트라는 큰 글로벌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또 이에 영향을 받아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후 처음으로 데탕트의 움직임을 시도하였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은 한반도 현대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상호 데탕트의 건설적 시도는 남과 북의 국내 환경에서는 반대로 부정적인 움직임을 수반하였다. 북한 현대사로 한정해서 보자면, 북은 1972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소위 주석제라는 독재체제를 완성하였다. 같은 시기에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북한정치제제의 가장 독특한 측면인 권력 세습제의 토대가 조성되었다. 이 초법적이고 예외적인 두 가지 제도(수령독재와 세습적 수령제)를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 문화예술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정치의 전개는 곧 북한에서 공연예술의 정치성이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수령의 절대적 권위와 권력을 예술을 매개로 인민대중에게 훈육하고, 이 선전사업의 중심에 수령의 후계자를 위치지음으로서 북한의 1차 세습권력은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부터 권력승계가 현실화되는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예술이 정치하던 시간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극장국가로서의 북한이라는 개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1] 그렇다면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의 3대 유훈정치체제에서는 상황이 어떠한가? 이 시기에도 혁명예술은 북한정치에서 차지하는 기존의 위상을 계속 유지해왔는가?

2.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다.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예술은 양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예전의 영광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자랑하는 이른바 5대혁명가극은 모두 1971년에서 1973년 사이, 김정일의 후계체제 초기 형성기에 제작되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 작품들은 김정일의 "천재적인 예지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20세기 문예부흥의 대표작들이다."[2] 이들 중에 〈피바다〉,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들은 이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특히 1972년의 〈꽃파는 처녀〉는 중국에서도 인기가 상당했다. 이들 뮤지컬 외에도 김정일 시대에는 수많은 창작극, 가요, 영화들이 만들어 졌었고, 대중동원을 기반으로 한 유명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이들 창작물들의 모티브들을 집적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김정일은 이러한 문예창작에 직접 깊이 관여했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후계자로서의 정당성이 예술을 통해서 수령인 김일성의 권위를 극대화하는 공로에 근거했다는 것과 관련 있다. 이와 비교하여 북한의 3대 후계체제로의 전환 과정인 2010년대 초반을 들여다 보면, 비록 혁명가요와 문학의 영역에서 몇 가지 시도들이 있긴 했지만 이 시기는 전체적으로 이전의 2대 후계체제로의 전환기와 비해 창작열기의 힘이 떨어진 것이 관찰된다. 한가지 예외는 2012년에 개봉되어 북한 안팎으로 상당히 좋은 반향을 가져온 〈김동무 하늘을 난다〉이다. 북한이 벨기에 그리고 영국의 제작진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다. 같은 해 제작된 북중 합작 영화 〈평양에서의 약속〉 역시 주목된다. 집단체조 〈아리랑〉을 배경으로 북한과 중국의 두 청소년 사이의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14년 북한에서 개봉, 2018년 3월 김정은의 북경 방문이 후 다시 북한 중앙방송에서 방영된 바 있다.

외국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 외에도 2011년 이후 3대체제에서 북한의 예술선전활동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몇 가지 특이한 측면을 보인다. 공연예술이나 영화 보다는 기념비 건축이 여기서 주목되는데, 특히 2013년 소위 전승절 60주년을 맞아서 개관한 조선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있다.[3] 평양시 중심에 위치한 이 기념관은 김정은이 2013년 7월 27일 직접 오픈 하였는데, 같은 시기 준비한 평양시 근교에 위치한 조선전쟁참전 인민군열사묘역과 함께 그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고 나서 진행한 첫 대규모 사업이다. 개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동원되었으며 많은 외국 손님들이 초청되었다. 이들 중에 특히 중국측 친선대표단은 대표단 단장이 주석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에서 군중행사를 관람하는 등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행사기간 중에 중국대표단은 평양 순안구역에 위치한 중국인민지원군열사묘를 방문, 헌화를 하면서 예를 표했다. 이후 김정은은 이 열사묘를 열사능원으로 승격 리모델링할 것을 지시, 이는 2018년 10월 25일 완공되었다.[4] 행사에 참석한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깊은 관심 속에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는 중조친선을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측은 "조국에 어린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위훈은 광활한 중국의 대지에 잠든 조선 혁명가들의 넋과 더불어 두 나

1) 권헌익 ·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2013, 창비.

2) "5대혁명가극," 조선의 오늘, 2019.02.02

3) "조선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 성대히 진행," 로동신문, 2013.07.28

4)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을 준공," 로동신문, 2018.10.26.

라 역사에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빛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이 묘역은 조선전쟁 초기에 (남아프리카 공군기의 네이팜 공격으로) 전사한 마오쩌뚱의 장자 마오안닝(모안영)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김정일 정권 말기에서 시작하여 지난 십여년간 조중친선의 공적 담론과 과시적 연희에서 중심적 상징물이 되었다.[5]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만약 올해 성사된다면 조선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인민군열사묘,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 등 김정은 시대에 조성되거나 새로이 단장된 이들 조선전쟁 기념물들은 아마도 시주석의 주요 방문지들이 될 것이다.

김정은의 유훈정치에서 한국전쟁의 유산이 왜 이렇게 새로운 기념비적 중요성을 갖는가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는 근년에 들어와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러시아는 세계 제2차대전과 관련, 중국은 항일무장투쟁과 관련) 전쟁기념에 지대한 정치적 관심을 보여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더하여 국제사회의 저항과 경제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북한이 핵무장과 핵무기보유국가의 위상에 올인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핵을 통한 대미관계의 재구성이라는 그들의 큰 목표와도 분명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미북 2차정상회담을 두고 최근 미 백악관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김정은 체제가 한국전쟁의 현재적 역사에 대해 보여온 일관된 관심과 흐름을 같이한다. 일종의 병진노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의 병진노선은 선군의 핵무장과 인민경제를 포함한 경제적 약진, 즉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이 주어진 모순에도 불구하고 함께 밀고 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전쟁의 기념비적 예술의 영역에도 유사한 의도가 관찰된다. 핵무장을 매개로 종전선언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관계의 재구성으로 나간다는 북의 전략은 물론 이를 통하여 체제안보를 확보하고 나아가 경제적 도약 가능성을 연다는 것이 중심이다. 그러나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에 조선전쟁의 두 정치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의미를 같이 이고 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이 두가지 의미란, 하나는 반미 · 반제의 적대관계의 축으로서의 조선전쟁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이 주장하듯이 "끊을 수 없는 피로 맺어진 관계"인 조중친선의 축으로서의 조선전쟁이다.[6] 전자는 변화시키고 청산하면서, 후자는 복원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다.

5) Heonik Kwon, "The Korean War and Sino-North Korean Friendship," *The Asia-Pacific Journal*, Vol. 11, Issue 1, No. 4, August 12, 2013.

6)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추동한 력사적인 사변," 로동신문, 2018.03.30.

김정은 정권이 대미 · 대중 관계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병행노선은 여러 다른 움직임들에서도 관찰된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정상회담이 후, 7월 전승절 행사에서는 반미 · 반제 구호와 상징물들이 사라졌다. 7월 26일 평양에서 전국 조선전쟁 참전 노병들의 대회가 열렸고, 7월 27일 전승절에 맞추어서 한국전쟁 미군 유해 55구가 본국으로 보내졌다. 여기서 미군유해송환은 특히 의미가 크다. 한국전쟁과 함께 미국이 아시아에서 치룬 또다른 큰 전쟁인 베트남 전쟁의 역사에서, 지난 1993년 미국과 베트남이 어렵게 수교에 이르는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와 군이 진행한 미군유해 수습과 송환은 결정적이었다.[7] 대미관계에서 이런 전향적인 움직임이 담긴 2018년 전승절 행사는 대중관계에서도 명확한 메세지를 전했다. 이 행사를 맞아 김정은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역을 찾아서 마오안닝의 묘에 화환을 증정하면서 북중관계를 "피와 생명으로 맺어진 특수하고 공고한 친선관계"라고 언급하였다. 이후 2019년 1월에는 북의 친선예술대표단이 3일간 북경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다. 시진핑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참석한 이 행사에서 시주석은 "문화예술교류는 중조관계에서 매우 특색있고 전통적인 중요구성부분"이라고 하면서 "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추동하는데 적극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8] 북한 매체는 이를 두고 공연이 진행된 북경의 중국 국가대극원은 "혁명가극《꽃파는 처녀》와 훌륭하게 각색된 가극《홍루몽》의 관람열풍이 세차게 일었던" 곳이라고 부연했다. 〈홍루몽〉은 중국의 대표적 가극으로서 김정일 정권 말기에 북의 대표적 극단인 피바다극단이 준비해서 북경에서 공연한 바 있다.

북의 조중친선 예술은 주로 외교적 영역에서 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2010년 북에서 방영된 대서사극 〈모안영〉이다. 마오안닝의 짧은 생애를 매개로 중국혁명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조중친선의 역사를 그리는 37부로 된 이 대하드라마는 호혜관계(reciprocity)를 기본 모티브로 제시한다.[9] 앞서 인용한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위훈은 광활한 중국의 대지에 잠든 조선 혁명가들의 넋과 더불어"라는 표현 역시 이 호혜관계를 잘 보여준다. 조선전쟁 중에 중국지원군이 치른 한반도에서의 희생은 중국의 항일투쟁 그리고 국공내전에서 조선 혁명가들이 중국에서 치른 희생과 상호적이고 역사적으로 호혜적인 시각으로 이해해

7) Michael J. Allen, *Until the Last Man Comes Home: POWs, MIAs, and the Unending Vietnam War* (Durham: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9); Heonik Kwon, "North Korea Now," *Anthropology Today*, Vol. 34, Issue 4, 2018, p. 2.

8) "조선친선예술대표단의 중국방문공연 성황리에 진행," 조선신보, 2019.01.31

9) Kwon, "The Korean War and Sino-North Korean Friendship."

야 한다는 북한 입장에서의 당위를 말한다. 2009년은 소위 조중친선의 해였는데, 이 해를 맞아 북한은 〈모안영〉 외에도 〈세월은 흘러도〉 와 같은 드라마와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 등의 여러 혁명가요들을 창작 내지 재현해왔다.

2019년 1월 북한대표단의 북경공연에서 시진핑주석은 2019년이 중조외교관계 70돐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친선예술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은 이 공연이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중친선의 귀중한 전통을 계승하고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 정을 끊임없이 승화시켜 조중관계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아로새기시려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숭고한 의도"라고 답하였다.[10] 외교적 실천으로서의 북한 예술은 현재 북중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조금 그 결은 다르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또한 조형예술과 건축 부분에서도 주목할만한 국제화 노력을 해왔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의 만수대 작사는 콩고, 세네갈, 이디오피아, 앙골라 등지에서 대형 기념비들을 축조했고 나미비아와 캄보디아에서는 박물관과 의회 건물 등의 건축도 맡았다. 공연과 건축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나름 활발한 북한의 예술 활동은 그러나 국내의 지평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서 확연히 침체되어 있다. 물론 인민대중동원 집단체조공연은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보였듯이 지금도 아직 계속되고 있고,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등도 근래에 완공되어 인민의 복지를 위한 장소로 선전되었었다.

그렇지만 김정일 시대의 활발한 예술정치, 즉 인민대중의 교화, 대중의 사상적 동원을 주 목적으로한 의미에서의 북한혁명예술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그 입지가 약해졌다. 이는 1990년대 중반 비극적인 경제사회적 혼란의 와중에 교육을 비롯한 북한의 선전 · 선동체제 역시 그 제도적인 토대가 전체적으로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이 엄청난 혼란이 후 2000년대 초반부터 전면화되어온 생존경제와 사회생활의 시장화 현상이 있다. 국가의 위상과 권력이 시장의 힘과 입지와 점차 대칭 관계에 서게 되었고, 이러한 심중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문화 · 예술의 영역에서도 기존에 국가의 예술정치가 독점하던 공간이 점차 축소되는 현실을 가져왔다. 사회생활의 시장화는 또한 비공식경제의 증가를 가져왔고, 문화생활의 영역에서 이는 한국 · 중국의 문화콘텐츠가 국경무역으로 진입하여 특히 도시의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거의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직면하여 북의 공안당국은 남한의 문화상품들을 유통하는 것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소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극단적인 징벌의 엄포를 약속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대응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이 문화전쟁의 현장에서 국가권력의 통제와 강제의 수단들이 과연 그것만으로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지는 의문이다.

10) "조선친선예술대표단의 중국방문공연 성황리에 진행."

3.

이상을 정리하자면, 북한 문화 · 예술의 현황에 관하여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혁명예술은 그 예술로서의 존재성이 국가와 인민 (혹은 당과 인민, 지도자와 인민대중)의 관계에서 국가가 뜻하는 바에 효과적으로 인민대중을 동원하는 정치적 목적에 있다. 정치의 수단으로서의 예술은 김정일의 시대에 특히 확대되었지만, 북한의 국가형성기에도 관찰되고 나아가서 북한 국가신화의 토대인 일제강점기 만주유격대의 역사에도 존재한다. 김정일의 유명한 사진, 그가 영화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 보고 있는 모습은 이 혁명예술론의 적절한 이미지이다. 국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국가가 감독 역할을 하며 인민대중이 배역과 관객을 동시에 맡는 형식의 북한의 혁명예술은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진입하면서 그 토대가 불안정해졌다. 이것이 김정일의 후기를 시작으로 3대세습체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국가예술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점차 이전 시대보다 약화되어온 기본 이유일 것이다. 인민과 당, 인민과 지도자를 연결하는 영역에서 이전과 비교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지만, 탈냉전시대의 북한예술은 외교의 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는 남북한 교류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대중국관계, 조중친선의 영역에서 특히 주목된다.

상징의 힘은 여전히 북한의 정치에서 중요하다. 대남관계에서 남북이 공유하는 민족문화적 요소들, 북중관계에서 그들이 공유하는 사회주의 혁명예술의 요소들은 앞으로도 계속 재생산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상징의 힘을 예술의 영역을 넘어 보다 더 넓은 지평에서 조명한다면 위의 지적은 대미관계에도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유해송환은 물론, 지금 언급되고 있는 푸에블로호 반환 역시 미북관계 정상화라는 희망적인 흐름에 무게 있는 상징이 될 것이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문화 · 예술은 오늘날 전체적으로 이원화의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안으로는 약해지지만, 밖으로는 지속되는 북한의 국가주도

선전 · 선동의 혁명예술이 있다. 이와 병행하여 오늘날 북한에는 국가의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의 비공식적인 대중문화적 관심이 있다. 이 인민의 대중문화적 관심은 현재 시장의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는데 국가의 통제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있고 또한 주로 바깥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선전예술과는 그 존재성이 차별된다. 조직적으로 시장적이고 내용적으로 외부지향적인 대중의 이 새로운 문화적 관심에 직면하여 현 북한 정권은 그들에게 익숙한 강압적이고 징벌적인 수단 외에 아직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인민의 관계에서 오늘날 북한에서 관찰되는 흥미로운 문화현상 하나를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다. 북한은 경제관계와 정보사회적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무척 폐쇄적인 곳이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배급체제의 붕괴, 국가계획경제의 전반적인 위기와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점차 전면화되어온 시장화의 진전은 북한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주목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앞서 잠시 언급한 외부에서 문화콘텐츠가 유입되는 현상 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는 것들도 있다. 한 예로 민간종교문화에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국가의 통제를 받는 제도적 종교 영역이 아니라 이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간신앙의 영역이다.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 인민들의 생활세계에 새롭고도 전통적인 종교성이 발현되고 있다. 이 새로운 종교성은 여러 모습을 갖는데 일상생활의 소박한 실천들로는 예를 들어 이동이나 상행위를 하기 전에 점을 보는 행위, 부정을 막기위한 언어적 혹은 상징적 실천, 지방마다 이런 행위들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전문인들의 출현 등이 있다. 기존에 국가가 담보해왔던 경제적 안전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의 창출이라는 중요한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심지어는 부재한 현실에서, 불안한 미래를 직면하여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적 실천으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사회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공식적이고, 비가시적인 변화들을 포함한 의미에서의 북한 문화 · 예술의 현황은 한마디로 무척 다이나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찌보면 지극히 보수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은 급격하고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 오늘의 북한, 이 곳의 예술은 오늘날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기존의 모습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다 넓은 의미의 문화 영역에서도 오늘날 북한 인민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고 갈구하는 것들을 시장의 공간에서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생활의 시장화의 흐름과 함께 아래로부터 새롭고 자생적인 움직임들을 실험하고 있다.

북한연구 현황과 과제
– 과학 · 교육 분야 –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서 론

1) 여타 북한 연구와 같이, 과학 · 교육 분야의 북한 연구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커다란 파동을 겪으면서 진행되었음

– 대부분의 출연연구기관들이 PBS 체제로 운영되므로, 정부의 위탁과제 규모와 성격에 따라 연구가 중단 또는 재개되고, 자료 누적과 전문성 축적, 후진 양성도 축소 또는 확대되었음

2) 연구 내용에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협력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는 통일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음

– 과학기술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인접분야와의 공조가 어렵고 교육(특히 고등교육)분야는 북한이 협력에 소극적이어서, 통합연구와 중장기 연구가 어려웠음

3)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의 소수 기관을 제외하면 북한 과학 · 교육 분야 연구와 남북협력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추진한 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으로 협력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협력창구와 북한 자료, 전문성이 부족하고 연구자들의 세대 단절 현상이 뚜렷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4) **본 글에서는 2000년 6 · 15 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 북한 과학 · 교육 분야 연구와 협력 특성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위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 교육 분야는 과학 분야와의 연계성이 큰 고등교육 위주로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함

2. 전문 연구기관들의 연구 동향

가. 초기 연구 : 1990년대

1)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동 시기에 해외동포 중재로 개최된 남북 과학기술공동세미나를 반영해, 북한 과학기술계의 실정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작하였음**
   - 북한 원전자료와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지는 못했으나, 초기 연구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계, 교육계에서 북한 연구가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음

2) **이와 함께, 북한 고난의 행군과 동서독 통일을 계기로 동서독 과학 · 교육체제 통합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체제 통합 방안을 연구하는 경향도 나타났음**
   - 체제통합방안 연구는 기상, 표준 등의 인접 분야와 행정체제, 연구개발체제, 초 · 중 · 고등교육 등의 세부 분야 통합연구로 이어졌음

나. 2000년 6.15 정상회담과 북한 연구 대폭 확대

1) **2000년 6.15 정상회담은 정부 부처 전문사업이 태동하고 과학 · 교육계에서 북한 연구가 확산되며 내용도 풍부해지는 기폭제가 되었음**
   - 과제 내역은 북한 체제에 대한 기초연구와 분야별 현황 조사, 국제기구 가입 동향 등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남북한 협력방안을 연구하는 것 등이었음

2) **다만, 북한 자료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연구과제 수와 연구자가 감소되기도 했는데, 이는 PBS 체제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음**
   -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 독일 등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거나 해외동포들의 대북한 협력을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이는 해당국 언어와 체제에 익숙한 소수에 그쳤음

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연구 축소

1) **2000년대 중반에 북한 핵 문제와 연평 해전,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악화되면서 협력 연구가 축소되고, 북한 핵기술 발전과 대응방안 연구가 확대되었음**
   - 과학기술은 군용과 민용 모두에 활용되는 이중용도 기술이므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중인 국가들 간에는 과학기술협력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2) **이어진 정권교체와 남북관계 단절로 협력연구가 줄어들고, 다시 통합방안 연구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 빅근혜정부 시기에는 통일준비 관련 연구가 확대되어 과거의 거시 분야에서 세부 분야로 확산되고 인접 분야와의 통합연구도 추진되었음

3. 중앙 부처(과학기술부, 교육부 등)의 협력계획 수립

가. 과학기술부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기본계획 수립(2003.12)[1)]

1) **2001년에 처음 제정된 과학학기술기본법 제7조에는 정부가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이 포함된 중장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이춘근 등(2003),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기본계획(초안)", 과학기술부

– 이 기본법은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 수립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

2) 본인의 건의와 당시 과학기술부의 동의로, 인건비 없이 순수 사업비만 지원되는 '조사 사업'으로 최초의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기본계획(초안)"을 수립하게 되었음

– 연구 결과는 통일부, 국정원 등의 정부부처 조정을 거쳐, 2003년 12월에 정부(안)으로 채택되었음[2)]

3) 협력 목표는 ①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제의 체계적 확대 및 내실화, ② 동북아 경제중심 비전, 남북 경제협력과의 연계 강화, ③ 국내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 정비로 하였음

– 당시 남북협력이 공동세미나와 농업 등의 일부 협력에 국한하는 현상을 타개하고,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과 연동하려는 것이었음

4) 중점추진 과제는 ①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② 공동수요 창출과 협력 확대, ③ 인력교류와 학술대회, ④ 경제, 특구와 연동, ⑤ 협력과제 유형화와 단계별 추진, ⑥ 국내 협력체제 구축 및 예산 확충, ⑦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의 연계 등 7개를 도출하였음

– 협력의 급속 확대가 어려우므로, 협력인프라 구축과 가능한 분야에서의 협력과제 도출,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를 도모한 것임

5) 남북관계의 파동이 심했으므로, ① 남북관계 현상유지, ② 대화 활성화, ③ 관계 호전, ④ 관계 악화의 4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여기에 적합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 남북관계가 현상을 유지할 때에는 기존 협력과제의 확대와 내실화에 주력하면서 북한 측 과학기술 주무부서인 과학원과의 접촉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였음
– 남북대화가 활성화되었을 경우에는 과학기술인프라 구축과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각 협력과제들 사이의 횡적 연대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 관계 호전시에는 산업협력을 포함해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계획의 협력프로그램 설치와 주무부서간 창구 개설, "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토록 하였음
–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경제협력도 위축될 경우에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제의 추가 확대를 중지하고 기존 협력과제도 점차 축소 조정토록 하였음

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 기본계획(2009)[3)]

1)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합병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하고, 남북협력사업도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으로 조정하였음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위탁과제로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계획(초안)"을 수립했으나, 관계부처 조정에 문제가 발생해 "사업계획"으로 축소 조정하였음

2) 협력 목표는 ① 남북협력사업의 확대, 내실화, ② 상생과 공영의 남북 협력 추진, ③대북한 협력 추진체제 정비의 3가지로 하였음

– 당시의 남북관계 악화로 협력 과제의 중단과 연기, 반납 등이 빈발했으므로, 이를 내실화하면서 창구를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려 한 것임

3) 중점추진과제는 ① 통합 관리체제 구축, ② 관련부처 협력체제 구축, ③ 남북 주무부서간 창구 개설, ④ 북한 개발 및 인도적 지원과 연계, ⑤ 대형 협력 추진, ⑥ 남북한 학술공동체 형성, ⑦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하였음

– 남북협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국내 관리기관의 효율적 통합과 부처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개편된 남북 주무기관간의 협력창구를 개설하려는 것임

4) 협력 시나리오를 ① 남북관계 현상 유지, ② 대화 활성화, ③ 포괄적 협상 타결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 상황별 추진체제와 소요예산을 구체화하였음

2) 정부 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정되고 비공개하므로, 본 글에서는 초안 중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소개함

3) 이춘근 등(2009),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 기본계획(초안)", 교육과학기술부

– 먼저 남북관계 현상유지 상황에서는 기존 협력과제의 유지, 확대와 협력 체제의 내실화에 주력하도록 하였음
– 남북대화가 활성화되었을 때에는 정부 간 합의를 통해 협력과제를 확대하고 정부 간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예산을 확대하려 하였음
– 대북한 포괄적 합의가 타결된 상황에서는 산학연 협력 차원에서 대규모 남북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남북협력센터와 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2015)[4)]

1) 박근혜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교육이 분리되고 ICT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사업도 "과학기술 및 ICT 협력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했음

2) 협력 목표는 ① 정부의 대북정책과 당면 현안에 부응, ② 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③ 협력기반 구축 및 통일준비 추진체제 정비의 3가지로 하였음
– 당시의 침체된 남북관계를 반영하여 상당히 소극적인 협력목표를 도출하고, 정부 정책과 연동해 통일 준비를 포함시킨 것임

3) 중점추진과제는 ① 융 · 복합형 협력, ② 과학기술 주도 협력, ③ 공동사업과 협력센터 설립, ④ 북한 특화산업과 남북격차 해소, ⑤ 협력기반 구축 및 통일 준비였음
– 개별 추진과제는 〈표 1〉과 같이 거시적인 분야 위주로 건의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기관별로 개별과제를 추진토록 하였음

4) 상황별 시나리오는 2009년과 같이 ① 현상유지 단계, ② 활성화단계, ③ 포괄적 협상 타결단계의 3가지로 설정하였음

4) 이춘근 등(2015),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 미래창조과학부

〈표 1〉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2015) 상황별 협력방향

남북 관계	현상유지 단계	활성화 단계 (5.24조치 해제)	포괄적 협상 타결단계
협력 방향	· 민생 융합형 협력 · 다자간 협력 · 해외동포 중개교류	· 과학기술 주도협력 · 협력창구 개설 · 협력 프로그램 확충	· 인프라 구축형 협력 · 거점구축 · 산업화, 기업 연계
중점 추진 과제	· 농촌 현대화 기술 · 어촌 현대화 기술 · 산림 녹화 기술	· 천연물 조사/방역 · ICT인력 양성/활용 · 공동연구, 협력센터	· 광통신 연결 · 지식공유시스템 · 북한특화산업 육성
통일 준비	· 북한 과학기술정보 수집, 분석, 확산 강화 · 전문기관 지정 및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분야별 통일준비 강화		

라. 교육 분야의 북한 연구

1) 교육 분야에서는 북한과의 실질 협력이 적고 자료 부족도 여전해, 국내 기관들의 독자적인 연구가 많았음
– 내용에서도 협력연구가 적고 대부분이 교육체제 통합과 교육과정 통합, 통일교육 등으로 수행되었음

2) 전문 기관에서 남한과의 학제, 교육체제 비교와 통일 후의 북한 교사 재교육 및 공동 양성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고등교육 연구가 적고 초, 중등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북한 이탈 전문가 설문과 면담에 의한 북한 교육 실상 연구도 수차례 수행되었음

4. 최근의 북한 동향과 북한연구 확대

가.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추진

1)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2년이 채 안된 2013년 11월에 전국과학기술자대회를 개최하여, “지식경제”와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강조하였음

- 지식경제는 김일성의 주체과학이나 김정일의 강성대국보다 합리적이고 북한의 현실 수요를 보다 잘 반영하며, 현대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과도 잘 일치함

2)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여 년의 군 복무를 거쳐 직장에 배치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것임

- 전국을 연결한 유무선 통신망과 PC, 태블릿, 핸드폰 등을 활용해 정규대학 수준의 원격교육을 수행함
- 이공계의 김책공업종합대학과 인문사회계의 김일성종합대학이 원격교육을 주도하고, 이 두 대학에서 개발한 원격교육체제를 여타 대학들이 활용하고 있음

나. 경제발전5개년전략 수립과 과학기술계획과의 통합

1) 지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김일성 시대부터 추진되던 경제와 과학기술의 일체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2016년의 당 대회를 통해 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여기에 통합하였음

2) 제5차 과학기술발전계획 수립이 취소되면서 2022년의 강성대국 달성 목표가 사라졌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줌

- 북한 사회과학원 리기성 연구사가 2017년도 북한 국내총생산을 307억 400만 달러(1인당 1214달러)라고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논란이 되고 있음

다. 과학·교육체제 개편

1) 국가과학원의 IT, BT, NT, 에너지 분야 연구소들이 확장되고, 과학기술자 사기진작과 연구 성과 산업화가 촉진되고 있음

- 조선컴퓨터센터(KCC)가 해체되어 군수공업부로 이전하면서, 수익사업 위주로 전환하였음

2) 1990년대부터 구축한 내부 인트라넷 ‘광명’이 완성되고 용량이 개선되면서, 이를 활용한 정보 확산과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정보자료 검색과 원격 화상진료, 원격교육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근 들어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핸드폰과 태블릿PC 등이 상당한 역할을 함

라. 남북관계 진전

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2018.4.27), 북미정상회담(6.12), 평양공동선언(9.19) 등이 숨 가쁘게 진행되었음

- 북한의 신년사에 언급한 화해 조치와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의 획기적인 조치들도 추진되고 있음

2)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협력이 활성화되어, 철도, 도로와 산림, 체육 분야 협력이 추진되고, 개성연락사무소가 개소되었음

- 과학 · 교육 분야에서도 남북한 공동세미나와 공동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고, 여타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마. 북한 연구 확대

1)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한 연구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 연구 분야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 기관들에서 북한 연구가 크게 확대되고, 교육 분야에서도 북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음

2) 연구 분야도 구 정부의 통합방안 연구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협력연구로 전환하고 분야도 세분화되고 있음

- 다만, 장기간의 북한 연구 중단으로 최신자료가 부족하고 전문가들의 세대 단절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5. 과학·교육 분야 북한연구 과제

가. 주요 문제점과 한계

1)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크게 개편되고 담당자의 부서 이동이 잦아, 대북정책 담당자가 북한 특성과 과거의 추진 경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임

-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주요 당국자들이 임기 내에 실적으로 올리려고 무리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이에 비해 북한은 정부 조직 개편이나 담당자 교체가 거의 없어, 남한 사정과 과거 사례에 정통하고 전문성도 우수함

- 2002년에 처음 만난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국 국장이 약 5년 전까지 장기간 재직하였고, 현 국장도 당시에 부원으로 들어와 15년 이상 동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3) 정부 위탁사업의 잦은 파동으로 국내 북한 연구가 장기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도 전문성 결여에 큰 영향을 미침

- 최근 북한 연구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성급하게 과제를 만들거나 자기 기관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고, 정부도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있음

4) 이러한 혼란이 거의 그대로 북한에 전달되는데, 국내 기관들의 대북한 협력과제 확대에 비해 실제 협력이 성사된 과제가 많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임

-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문성 없이 무리하게 업무를 조정하면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 장기간의 북한연구 중단으로 대부분의 북한 연구기관에서 인력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남북협력 경험자들이 곧 은퇴하는데 비해, 국내 대학들의 북한학 관련 전공 졸업생들이 줄어들거나 경험을 쌓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나. 향후 과제

1) 〈표 2〉에 현 상황에서의 주요 문제점들을 ① 북한 특성, ② 북한 연구, ③ 남북협력의 3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음

2) 협력 연구에는 남북관계의 가변성과 국제 공조가 특히 중요하므로, 중앙정부의 대북정책과 연동하는 과학 · 교육 협력과 연구를 추진해야 함

- 발생 가능한 남북관계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따르면서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하여,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방향성이 있고 성과가 누적되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북한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주장하므로, 우리도 북한의 현실 수요를 반영하는 남북한 과학 · 교육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한 과학기술계, 교육계가 처한 현실이 우리와 많이 다르고 수요도 다르므로, 이와 연동하는 협력을 해야 순조롭게 추진되고 성과도 많을 것임

4) 중장기적 시각에서 차분히, 합리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내용이 심화되면서 여타 분야로도 확산시키도록 해야 함

- 특히 부처 담당자들이 자기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전문성 없이 서두르다 시행착오를 겪는 경향을 없애야 함

〈표 2〉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난제와 개선 방향

분야	주요 난제	개선 방향
북한의 대외협력과 남북 협력 특성	높은 정치의존성	· 비정치 분야 협력 · 국제 제재 분야 회피 · 정부 대북정책과 연동 · 정부 정책실패 방지 · 전문분야 협력창구 개설 · 전문가 육성과 협업 · 협력거점 구축 · 남북격차 해소 · 장기협력과 신뢰 축적 · 북한 기반연구 강화
	국제 제재의 영향	
	강력한 통제기관의 개입	
	중개기관(해외동포 등) 문제	
	민족 내부거래 강조	
	협력채널 부족	
	북한 정보자료 부족	
	북한 연구기관 자생력 부족	
	연락, 접촉, 신뢰 누적	
대북 정책 및 남북협력 연구	정세변화에 민감(예측 불가)	
	연구 성격/내용의 파동	
	정보, 자료 부족	
	정부조직 개편과 전문성 부족	
	인력 부족과 연령 단절	
대북한 과학 · 교육 협력	협력 창구 개설 문제	
	협력과제 확대 문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문제	
	관련 기관과의 공조와 협업	
	상호 신뢰 축적 지연	
	협력거점 구축 지연	

다. 기반 연구와 인력양성 강화

1) 지금까지의 북한 연구에서, 우리 정부가 협력과제에 관심과 지원을 집중하고 중장기 기반연구는 소홀히 하였음

– 기반연구란 대북정책 수립에 필요한 북한의 과학 · 교육체제와 정책 동향, 국가계획과 주력 연구과제 및 성과, 대외협력 동향 등을 의미함

2) 북한 연구에서, 협력방안 연구 못지않게 기반연구가 중요하고, 이런 연구가 있어야 북한의 현실 수요를 반영한 협력과제와 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음

– 실질협력에서는 협력연구와 기반연구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북한 현실과 수요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북한과의 협력연구와 실질협력을 더 잘 추진함

3) 장기간의 남북협력 중단으로 연구 과제들이 줄어들면서 북한을 연구하는 학문 후속세대에 커다란 단절이 형성되었는데,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함

– 북한을 잘 이해하면서 제대로 된 협력과제를 찾아 북한의 신뢰를 받으면서 협력을 하기까지, 수년 동안의 전문성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임

4) 중장기적으로 청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현장 속에서 양성하며, 정부 차원에서 협력과제를 지원할 때에도 이러한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협력기반 구축과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정부 담당자들과 민간 전문가들 간의 의사 조정과 협업 강화를 통해 정책실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함

2
토론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박형동 (서울대)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이금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 토론문 |

북한연구의 현황과 과제
: 사회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1.

한국에서의 북한에 대한 연구는 분단이라는 구조 안에서 발전해왔다.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한창이던 냉전 시대에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이론적 틀 내에서 체제의 특수성을 규명하여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에 북한학 연구의 주요 논점이 집중되어 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학적 시각에서의 북한 체제에 대한 연구가 북한연구의 주류가 되어 왔으며, 학적 논의보다는 정책 중심의 연구 혹은 정세 분석에 치중한 연구 풍토가 북한학 영역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분단체제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학 중에서도 북한사회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당장 북한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분단체제의 근원적 극복 혹은 해체는 요원할 것이며, 동시에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게 된다면 곳곳에서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한반도라는 상황에서 남한 사회의 문제는 결국 북한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사회에 대한 학적 관심은 한국 학계의 일종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학계에서는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에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해왔다. 발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방법론적 엄밀성을 지향하는 학문 풍토와 서양의 이론에 경도된 학계의 분위기 등이 북한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제한하고 있다.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문 후속 세대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는 그만큼 찾아보기 힘든 상황 또한 향후 미래 전망이 어두운 이유이다.

또 다른 우려는 작년부터 시작된 정치적 변화에 발맞춰 마치 유행처럼 '북한'연구에 뛰어들고 있는 사회학계의 경향이다. 작년부터 사회학의 주요 학회에서는 북한 관련 특별 심포지엄이나 학술회의의 특별 세션을 조직한바 있고 저널에는 북한 관련 특집호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충분한 논의 혹은 누적된 학적 담론을 담고 있기 보다는 북한을 마치 새롭게 부상한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들이 쏟아낸 논의는 기존의 논의를 확대 재생산 하거나 아니면 언론 등으로 통해서 단편적으로 전달된 북한 사회의 모습을 연구된 논의의 결과물로 탈바꿈시켜 사실로 둔갑하게 한다. 이러한 오인과 오독이 학계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또 다른 북한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한하게 할 것이다.

2.

북한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부재는 당장 북한을 향한 담론의 빈곤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변화가 포착되는 상황에서 북한 사회에 대한 풍부한 논의나 정밀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컨대 북한 사회변화를 읽는 만능키는 '시장화'가 된지 오래인데, 각 영역과 사례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문제시하기 보다는 과거를 단일한 상으로 분석한 후 시장 이후의 상황을 '변화'라는 것으로 단순하게 정리하기도 한다. 거기에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 문화, 관습, 습성 등에 대한 끈질긴 연구보다는 그곳 사람들을 동질한 집단으로 상정하여 단순화하고 목적에 맞게 제멋대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에서 바라보는 북한이 결국 '목적론'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연구자들의 치열한 고민과 학적 논의의 발전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 사회에 대한 비교적 관점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회연구는 북한의 특수성을 전면화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혹은 심층적 분석을 어렵게 한다. 사회주의체제 국가와의 유사성, 여느 독재국가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습성과의 차이점과 유사성, 경제구조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문화의 전환 등은 분명 북한 사회를 접근하는 데 중요한 논점이 될 터인데, 이러한 연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또한 최근의 이론적, 방법론적 성과를 적절하게 선취하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려는 연구 또한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북한사회 연구는 북한의 자료나 인터뷰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서구의 이론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론이나 방법론이 좀 더 다양한 분석을 위한 '도구'라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이론에 대한 비판적 적용,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의 적절한 활용, 그러면서도 북한 사회의 이해를 위한 자료의 축적 등은 균형적으로 함께 추구해야만 하는 북한사회 연구의 과제임에 분명하다.

3.

북한 사회 연구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 설문조사 등에 대한 전면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예컨대 토론자가 북한학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기억의 정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 여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접근할 수 없는 북한 사회의 면면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이탈주민 인터뷰가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집단의 성격을 간과하게 했으며 동시에 이들의 주관적 해석, 경험치가 마치 북한 사회의 전부인 것으로 확대하여 유통되게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위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사회를 접근하기 위한 창으로 그들을 활용해 온 것은 분명 부메랑이 되어 북한사회연구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북한(사회)연구의 영역이 인권 등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진행되어 온 점 또한 반성이 필요하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혹은 분단체제가 필연적으로 배태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는 사회학에서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 예컨대 후기식민주의적 시각에서의 북한의 인권문제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북한 인권문제는 단순히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치부된 채 분석되거나 이론화되지 못해온 것이다.

사회학의 분과 영역 또한 북한연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한다. 예컨대 비판사회학의 시각에서 북한 노동자, 청년문제, 불평등과 계급-계층의 문제는 중요한 연구 분야이며, 페미니즘에서도 북한여성의 삶, 한반도의 군사문화, 국가와 젠더 등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연구 대상임에 분명하다. 또한 문화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상징, 언어, 감정, 정동 또한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분단과 북한 사회를 경유해야만 한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비판사회

학자들은, 페미니스트 사회학자들은, 문화사회학자들은 도대체 왜 분단문제 혹은 북한사회를 연구하지 않는 것일까? 혹여나 이 현상 자체가 바로 분단체제 하의 사회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4.

북한에는 '사회'가 있는가? 북한사회를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북한사회문화 연구가 단순히 북한학의 학적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정치학적 시각에 경도되어 있는 '사회문화' 연구의 한계를 반성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라는 곳이 정치 체제의 영향력이 막강한 곳은 분명하지만 그 체계에만 국한된 방식의 사회연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또한 문화 없는 정치, 사람 없는 체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북한정치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고려해야할 점이다.)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자율성으로 존재하는 '사회', '문화', 그리고 '일상'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발굴해야 한다. 심지어는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사회'를 연구한다는 것은 북한 정치의 영역 또한 아우르는 더 큰 영역으로서 북한이라는 곳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 문화의 작동, 그들이 공유하는 감정과 정동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결국 북한의 정치, 경제, 구조 등이 복잡하게 얽혀 현상으로 분출되는 사회상을 문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분단체제라는 인식의 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벗어난 트랜스 내셔널한 시각과 국가와 같은 구조가 아닌 행위주체를 중심에 두고 사회에 접근하는 논의가 북한사회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토론문 |

북한 과학기술 연구 및 교류에 대한 현황과 과제

박형동 (서울대)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연구는 연구대상물에 대한 접근의 제약성 때문에 주로 북한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간접적 자료를 취득하여 분석하는 연구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위성영상으로 북한의 자연재해, 에너지자원, 지리적 특성 등을 분석하는 단계까지는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결과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방법에 있어 미완성 상태로 연구로 끝난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연구, 북한 과학기술자들과의 연구교류 등에 학문적 관심과 열정이 있더라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연구 과제처럼 다년간의 특화된 연구비가 제공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이나 신년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에서의 과학과 기술은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1)2)] 최근 북한 학자들의 과학기술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영향으

1) 『로동신문』, 2018년 1월 1일.

2) 변학문,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통일과 평화』, 제10집 2호 (2018), pp.81~89.

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며,[3] 이러한 변화들은 남북한 연구교류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된다.

북한에서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 전시회가 3천여 건의 제안을 포함하여 개최된 사례로 볼 때[4] 북한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해 남북한 공동 또는 장소를 제공하는 제3국을 포함하여 연구성과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과학기술 분야의 교과서 공유, 공동저술활동, 전문용어 사전의 공동편찬과 같은 간접적 공동연구활동과 더불어 과학기술 분야 학회 대표들끼리의 정기회의 개최, 공동학회 개최 등의 협력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일부 지역으로 제한하더라도 북한의 연구 대상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 및 측정 (예: 문화재 보존과학기술, 산사태 현장분석 등), 시료 채취 (예: 토양 및 생물학적 연구, 미세먼지 종류와 양 등), 관측소 설치 및 자료 공유 (예: 태양광 발전을 위한 일사량 측정, 풍력 자원량 측정 등) 등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면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 취득과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Geum Hee Jeong and Sun Huh, "Bibliometric analysis of publications from North Korea indexed in the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from 1976 to 2016," Science Editing, vol. 4, no. 1 (2017), pp.24~29.

4) 『로동신문』, 2018년 12월 8일.

| 토론문 |

북한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북한의 역동적인 시대적 변화 속에서 최근 연구자들은 북한의 교육현상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이해에 기초하여 연구 성과물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김정은 정권 출범을 전후하여 북한교육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연구의 현황과 과제는 교육정책과 교육목표, 교육법제와 교육제도, 교육내용과 학습활동, 연구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 연구 현황으로, 교육정책과 교육목표 분야에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12년 의무교육제도 개편을 통한 북한 교육체계의 확립 및 김정은 우상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교육정책은 정치적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통치집단이나 정치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에서는 교육과 정치의 일치라는 원리에 따라 통치집단의 정치적 목적이 바로 교육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40년간 지속되어 온 기본 학제가 12년제 의무교육제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학제 개편안은 1990년대 이후 유명무실화된 교육체계를 바로잡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북한정권은 남북 분단 70여년 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삼대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교육목적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지 · 덕 · 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지만, 학교교육

과정에서 정치사상교육의 핵심으로 '김정일애국주의'와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의 특징으로는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에 걸맞는 창조형, 실천형 인간을 강조하며 학교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철저히 관철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향후 과제로는 우선, 국가가 의도한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 교양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의 공적 계획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써 북한 교육정책의 방향 및 한계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둘째로,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과학기술교육, 실리주의 교육을 강조하는 김정은정권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양자 간에 갈등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제 경쟁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수재학교와 중점 대학에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국제적 정책 기준에 입각한 교육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번째 연구 현황으로, 교육법제와 교육제도 영역에서는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시대적, 교육적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육 법제를 정비하기 시작했고, 김정은 정권 출범 후 2012년 9월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한 것과 관련해 교육법제와 제도개혁의 의미와 추진과정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2013-2014학년도부터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 운영하고,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은 2014-2015학년도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다. 법제와 관련해서는 1999년에 교육법을 제정한 후 2015년에 4차로 수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보통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 채택되어 이후 수정을 거쳤고, 2015년에는 교원법이 채택되었다. 북한 교육 관련 법 분석을 통해서 북한교육의 현황과 변화,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도 분야에는 북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제1고등중학교 등 영재교육의 실태와 전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한 향후 과제로는 우선, 교육 관련 법제 제정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연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교육 법제와 교육 현실 간의 실제와 간극의 문제,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로, 2012년에 12년제 의무교육제를 법적으로 발표하였지만 2014년에 시행에 들어가 2026년경에 완료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의무교육 기간이 1년 늘어나고,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 운영하는데 따른 교육예산 확보, 이행 과정과 평가, 학제 변화와 사회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경제발전 우선전략과 국제적 교육기준에 입각한 교육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북한 고등교육제도 및 평생교육기관의 실태와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은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학교를 포함하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과 공장 · 농장 · 어장 대학, 각 대학 통신 및 야간 교육망,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학교 등을 포괄하는 '일하면서 배우는 성인 고등교육체계'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성인 고등교육체계의 운영 실태와 전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종합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대학, 성균관종합대학 3개뿐이라고 알려져 왔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다수의 단과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전환하여 '17년 현재 종합대학 160개교에 19만명, 단과대학 330개교 33만명이 재학하고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통계청 북한교육통계, 2018) 예로 기존에 단과대학이었던 대학이 최근 평양기계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국방종합대학교, 평양음악종합대학교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셋째로,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동향과 변화, 학교행정과 조직문화의 실태와 변화 등에 대한 분석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번째 연구 현황으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 분야에서는 북한 학제 개편에 따라 2013년 초 · 중등 교육과정이 개정 발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교급별 주요 개정사항 및 각급학교 교과서 정책 변화와 내용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4년 4월 전국의 모든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1학년에게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따라 만들어진 새 교과서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교과서의 분석 대상이 과거 정치사상 및 우상화 과목, 국어, 수학의 주요 과목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영어, 자연과학, 기술, 및 예체능 과목에 이르기까지 전 과목으로 확대되었다. 연구 경향에 있어서도 교육내용의 이데올로기적 성격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의 난이도 · 주제 · 편성 원칙과 방법 등 비교준거에 따른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제도와 정책, 정규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일부 연구가 방과후활동, 사교육시장 등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 영역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과외, 소조활동 등 방과후활동,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원인과 사교육시장의 현황, 향후 북한 교육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한 향후 과제로는 우선, 최근 교육과정 연구가 국가 수준의 '공식적 교육과정', '의도적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향후 '잠재적 교육과정'(교사가 제시하는 공식적인 교육목표 속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암암리에 효과적으로 교육되는 규범과 가치를

의미), 또는 '전개된 교육과정'(교사의 실지 수업행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보다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안과 교과서가 표방하고 있는 교육목표, 구체적인 교사의 수업을 통하여 이것이 실현되는 정도, 학생들이 실제로 이를 학습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연구 영역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연구 현황으로는 북한 교육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의 교육통합 과정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진 연구도 일부 다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한 통일 이후 뿐 아니라 이전에 교육교류를 추진하고 통합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남북한은 70여년이 훨씬 넘게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에 기초해 교육제도와 정책이 수립되었고 교사와 학생 간의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이로 우리와 다른 북한만의 체제와 이념에서 비롯되는 독특한 교육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남북한의 교육통합을 모색할 때 남북한 교육에 있어서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서 통합의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 교육 자체에 대한 기초연구도 필요하지만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연구도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 토론문 |

북한인권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금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 연구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의 공론화를 위해 북한인권의 열악한 실태를 조명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다수의 북한인권연구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탈북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탈북민에 대한 처벌, 종교의 자유 등이 주요 인권침해 사안으로 조명되었다. 미국(2004년) 및 일본(2006년)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북한인권 관련 국내적 논쟁도 본격화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 북한인권법의 제정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을 반영하여, 관련 연구들도 북한인권의 범위와 인권정책의 방향 및 과제에 집중되기도 하였다. 상당기간 동안 '인권문제'는 남북 간의 체제경쟁 차원에서 우위를 부각시킨다는 의미로 접근되어 왔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북한의 공개처형, 식량난 등 인권사안 관련 연구도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른 입장들을 보였다.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지속적으로 채택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됨에 따라, 다수의 북한인권연구도 유엔인권메커니즘에서 북한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 북한 내 인권상황이 '반인도적 범죄'로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규명 관련 국제법적 접근과 기존의 해외사례들이 연구되었다. 또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도 북한인권 관련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었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조선인권연구협회 등 관련단체들

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북한 원문 분석을 통해 북한 나름의 인권관 및 대응논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져 왔다.

북한인권연구는 크게 탈북민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증언수집에 기반한 실태연구와 인권상황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북한인권 실태연구는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와 같이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근거하여 북한의 법률 및 인권실태를 규명하여 왔다. 자유권, 사회권, 여성권, 아동권, 장애인권리 등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가입한 유엔인권규약의 국가보고서 및 심의과정에서 북한의 입장들이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실태연구는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내 열악한 인권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북한의 세부인권사안에서 변화양태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시도되고 있다. 둘째, 상당수의 북한인권 정책연구가 개선 전략으로 '압력과 관여'를 병행하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 내 인권사안들이 어떻게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분석도 최근 들어 다수 시도되고 있다. 특히 제재가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언급되면서, 관련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다. 2017년 북한이 유엔기구 등과 합의한 협력전략계획(Strategic Framework)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서 인권 주류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 내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사회구조 및 주민들의 인권인식에 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북한사회 구조 내에서 인권문제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북한이 지켜야 할 국가의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연구도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평화와 개발과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틀에서 인권을 조명하고 있다. 북한인권을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사회구조 안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인권연구를 단순히 고정된 가해 및 피해 구조로만 파악하기 보다는, 사회변화 과정에서의 새로운 양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가설, 예를 들어 외부의 정보 주입이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킬 것이라 접근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memo

memo